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 정치와 법

I 민주주의와 헌법

01	정치와 법	08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18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26
+	기출 플러스	36

II 민주 국가와 정부

04	정부 형태	40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47
06	지방 자치	58
+	기출 플러스	64

III 정치 과정과 참여

07	선거와 선거 제도	68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78
+	기출 플러스	88

IV 개인 생활과 법

09	민법의 기초	92
10	재산 관계와 법	100
11	가족 관계와 법	111
⊕	기출 플러스	122

V 사회생활과 법

12	형법의 이해	126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137
14	근로자의 권리	148
⊕	기출 플러스	156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160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168
⊕	기출 플러스	174

핵심 내용 정리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조단 개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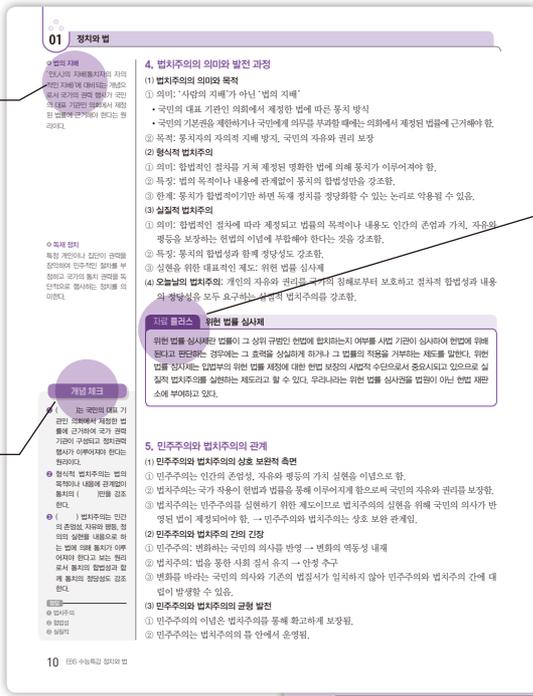
핵심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여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념 체크

개념 체크 문항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화 탐구

심화 학습이 필요한 주제를 보다 깊이 학습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개념/자료 플러스

주요 개념 및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심화 탐구

Theme 1 시민 혁명과 권리 선언

(가) 영국 권리 장전(1689년)
영국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과세할 수 없으며... 시민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나) 미국 독립 선언(1776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창조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년)
제1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정치체 질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저항권 등...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가)는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된 권리 장전이다. 권리 장전은 영국의 의회 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는 미국의 독립 선언으로서 사회 계약, 천부 인권, 국민 주권, 저항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나타난 인권 선언이다. 이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저항권 등의 인권 사상을 담고 있다. 이들 권리 선언에서는 공통적으로 주권이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상을 국인의 뜻에 따라 만들어낸 법에 근거하여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사상을 담을 수 있다. 근대 시민 혁명으로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였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근대 민주 정치가 발달하였다.

Theme 2 이슬람의 수반(칼리파) 위임법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할 수 없다. 본 조는 바이에른 헌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독일 정부는 연방 의회 및 연방 참정관의 제도와 영토를 유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것의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다만, 내각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3조 세계 대전 후 독일에선 민주적인 정부로 시작되었던 바이에른 공화국은 1933년 이슬람의 내각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입법부행정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제1조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외에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제2조에서는 정부가 헌법에 어긋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법 절차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시에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 법에 의해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아무런 견제 없이 제정·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함에 따라 정당성이 결여된 법에 의한 통치를 가져오게 되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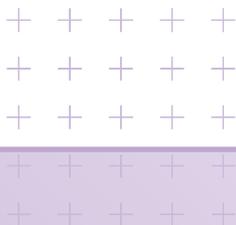
민주주의와 헌법

EBS 교재 연계 사례

학습 요소

- 정치의 의미와 기능
- 법의 이념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헌법의 의의와 기능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정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법의 이념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원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문항 12번

12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A와 달리 B는 국가가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보장된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생성·발전되어 온 B가 확대될수록 A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A와 B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이라는 헌법 이념 아래에서 조화된다.

- ① A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B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③ B에는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개인의 양심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
- ④ A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 ⑤ A와 B 모두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 01 정치와 법
-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31쪽 8번

08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중 하나임.)

-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진정인을 긴급 체포하여 호송하던 중 범죄 사실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부인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를 기본권 유형 중 A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정부의 생계 급여 선정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변경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 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본권 유형 중 B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① A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②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 ③ A는 B보다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이다.
- ④ A와 달리 B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강조된다.
- ⑤ A, B는 모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은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31쪽 8번 문항의 기본권 적용 사례를 기본권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본권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출제되었다. 대표적인 기본권 유형인 자유권과 사회권을 제시하였으며, 선지도 수능특강의 문항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다. 수능특강에서 기본 문제로 쉽게 출제되었고, 수능에서도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기본권 유형에 대한 문항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므로 기본권 유형의 특징, 역사적 배경, 적용 사례 등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정치권력

국가가 일정한 영역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여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관습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사회 규범을 의미한다.

자유방임주의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의미한다.

개념 체크

- 1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은 정치가 ()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본다.
- 2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을 ()이라고 한다.
- 3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법의 이념은 ()이다.

정답

- 1 국가
- 2 법
- 3 정의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

좁은 의미의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 •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
넓은 의미의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

(2) 정치의 기능

- ① 사회 질서 유지: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함.
- ② 이해관계의 조정: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 ③ 사회 발전 도모
 -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감.
 -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을 유도함.

2. 법의 의미와 이념

(1) 법의 의미

- ①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 ② 관습, 도덕과 달리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강제성).

(2) 법의 이념

- ① 정의
 -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
 - 본질적 내용은 '평등'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함. • 적용 사례: 선거 시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1표씩 투표하도록 하는 것,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실질적 평등 추구 • 개인의 능력과 상황, 필요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함. • 적용 사례: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 판매 실적이 높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 등

② 합목적성

- 의미: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
- 사례: 근대 자유방임주의의 국가 → 개인의 자유 보장을 추구함.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함.

③ 법적 안정성

- 의미: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
- 구현 조건: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민주주의의 의미

- ①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
- ②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

(2)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①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 형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
- 의의: 민주주의의 기원, 정치 참여를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는 시민상 구현
- 한계: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 정치

② 시민 혁명과 근대 민주주의

- 시민 혁명의 의미: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신분제에 근거한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
- 대표적 시민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 계몽사상, 천부 인권 사상, 사회 계약설의 확산

자료 플러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

구분	자연 상태	이상적인 정치 형태
홉스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군주 주권)
로크	이성에 의해 평가가 유지되나 자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상태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에 맞게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의한 간접 민주 정치(국민 주권)
루소	초기에는 인간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으나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해짐.	시민 모두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 의지에 따라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국민 주권)

- 시민 혁명의 성과: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 성립, 자유와 평등의 이념 확산,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에 따른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 형성 → 근대 민주주의 등장
- 시민 혁명의 한계: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

③ 시민 혁명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
- 미국 흑인들의 참정권 획득 및 인종 차별 철폐 운동
- 전 세계 각국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

④ 현대 민주주의

-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실시함.
- 직접 민주제 요소(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를 도입해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함.
-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함.

개념 플러스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국민 발안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
국민 소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계몽사상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천부 인권 사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1838년부터 10년 동안 노동자 계급이 주도한 참정권 확대 운동을 말한다. 21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 부여, 무기명 투표, 하원 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 인구 비례에 따른 균등한 선거구 설정, 하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대의 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간접 민주제, 의회 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 민주제에 대비된다.

개념 체크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 형태이다.
- ()은 시민 계급을 중심으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노력한 결과 일어난 정치적·사회적 대변혁이다.
- 영국의 () 운동은 19세기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다.

정답

- 민회
- 시민 혁명
- 차티스트

◎ 법의 지배

‘인(人)의 지배(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권력 행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독재 정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개념 체크

- ()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 기관이 구성되고 정치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만을 강조한다.
- () 법치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원리로서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한다.

정답

- 법치주의
- 합법성
- 실질적

4.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 의미: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함.

-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형식적 법치주의

- 의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 특징: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함.
- 한계: 통치가 합법적이지만 하면 독재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음.

(3) 실질적 법치주의

- 의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특징: 통치의 합법성과 함께 정당성도 강조함.

-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위헌 법률 심사제

- 오늘날의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함.

자료 플러스 위헌 법률 심사제

위헌 법률 심사제란 법률이 그 상위 규범인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사법 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 법률 심사제는 입법부의 위헌 법률 제정에 대한 헌법 보장의 사법적 수단으로서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위헌 법률 심사권을 법원이 아닌 헌법 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5.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호 보완적 측면

-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가치 실현을 이념으로 함.
- 법치주의는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이 제정되어야 함.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 관계임.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

- 민주주의: 변화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 → 변화의 역동성 내재
- 법치주의: 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 안정 추구
-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와 기존의 법질서가 일치하지 않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음.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발전

- 민주주의의 이념은 법치주의를 통해 확고하게 보장됨.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됨.

Theme 1 시민 혁명과 권리 선언

(가) 영국 권리 장전(1689년)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거나 과세할 수 없으며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으며 청원권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 미국 독립 선언(1776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 프랑스 인권 선언(1789년)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는 재산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가)는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 승인된 권리 장전이다. 권리 장전은 영국의 의회 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나)는 미국의 독립 선언으로서 사회 계약, 천부 인권, 국민 주권, 저항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나타난 인권 선언이다. 이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저항권 등의 인권 사상을 담고 있다. 이들 권리 선언에서는 공통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사상과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법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근대 시민 혁명으로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확립되었으며,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근대 민주 정치가 발달하였다.

Theme 2 히틀러의 수권법(전권 위임법)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본 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독일 정부는 연방 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서 민주적인 정부로 시작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3년 히틀러의 나치당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시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제1조에서는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을, 제2조에서는 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까지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법 절차만을 준수하는 것으로, 통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시에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 법에 의해 행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아무런 견제 없이 제정·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함에 따라 정당성이 결여된 법에 의한 통치를 가져오게 되므로 형식적 법치주의에 불과하다.

[23020-0001]

0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비어 있는 공간 활용 방안과 관련한 주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비어 있는 공간 활용에 대해 청소년 독서실, 헬스장, 공용 물품 보관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청소년 독서실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 예,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민 회의도 하나의 사회 집단이고, 주민 회의를 통해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을: 아니요,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국가만이 행사하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말하므로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 아닙니다.

- ①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정치의 주체는 소수 통치 엘리트에 한정된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활동을 정치로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은 모두 의회의 법률안 의결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23020-0002]

02 다음 글의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국가가 일정한 혜택을 부여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공헌하였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는 것은 법의 이념 중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A에 부합한다.

- ①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된다.
- ② 국민이 법률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③ 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지 않아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 ④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에 부합한다.
- ⑤ 법은 강제력을 지녀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3020-0003]

03 다음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역에 구청이 운영하는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소음, 오폐수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낙후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관할 구청은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 규모를 줄여 운영하고, 소음 방지 및 현대적인 하수 시설 등을 갖춘과 동시에 시설의 공원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주민 대표들은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전체 주민 대부분이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의 설립을 받아들여 관할 구청은 사업에 착수하였다.

- ①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한다.
- ②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한다.
- ③ 공권력의 행사로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한다.
- ④ 정치권력의 남용을 막아 시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 ⑤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배출한다.

[23020-0004]

04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임.)

구분	A	B
공통점	(가)	
차이점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약용될 수 있다.	(나)

- ① (가)에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 ‘법의 절차적 합법성을 중시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그 실현을 위해 위헌 법률 심사 제도를 강조한다.
- ④ B는 A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A, B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3020-0005]

05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신문

A법, 의회 통과 ... 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매출액 아닌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종업원 많을수록 세금 적게 내

갑: A법은 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이 불공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어. A법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하지 않아.
을: A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켜야 해. A법에 따른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한 거야.

| 보기 |

ㄱ. 갑의 관점은 법의 지배보다 사람의 지배를 강조한다.
ㄴ. 을의 관점은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ㄷ.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함께 강조한다.
ㄹ.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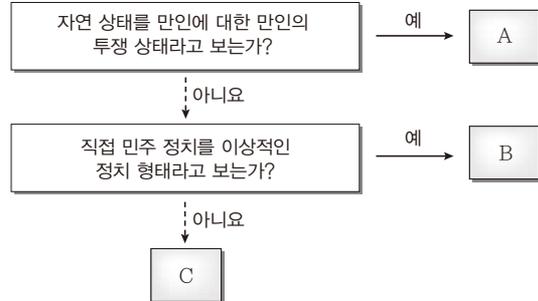
0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등장에는 근대 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시민 혁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 혁명은 봉건적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절대 군주의 억압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등 사회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들이 참정권을 획득하였고,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법치주의에 기초한 ㉤대의제가 발전하였다.

- ① ㉠의 결과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② ㉢은 노동자, 농민, 여성이 주도하였다.
③ ㉣은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④ ㉤은 정책의 신속한 집행이 주된 목적이다.
⑤ ㉤은 중우 정치로 전략할 우려가 크다.

[23020-0007]

07 그림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을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홉스, 로크, 루소 중 하나임.)



| 보기 |

ㄱ. A는 주권이 통치자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ㄴ. B는 일반 의지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C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ㄹ. B는 A와 달리 주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08]

08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민의 의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는 동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변화를 바라는 여론과 기존의 법질서가 일치하지 않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여론을 살피어 적절하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①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법을 제정해야 한다.
②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긴장 해소와 공존이 필요하다.
③ 법 제정 절차가 합법적이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정착된다.
④ 법을 자주 바꿀수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함께 실현된다.
⑤ 민주주의보다 법치주의를 우선해야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된다.

[23020-0009]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사 노사가 근로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A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사: ㉠과 ㉡을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볼까요?
 갑: ㉠과 ㉡은 모두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을: ㉠은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① 갑의 관점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만 정치 활동을 한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도 정치 현상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정치 과정 참여 주체가 다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 현상으로 이해한다.
- ⑤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정치 활동을 소수 통치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인식한다.

[23020-0010]

2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자기 사망하였다. 형제들이 많은 데다가 그 형제들 중에는 양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회가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한 민법에서는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 또 얼마의 비율로 받을 것인지가 정해져 있다. 부모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다. 즉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인데 자녀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 결혼 여부, 친생자이든 양자든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① 정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 ②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갈등을 예방한다.
- ③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공권력 행사를 견제한다.
- ④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조건을 개선한다.
- ⑤ 구성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23020-0011]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팀의 팀장 A는 최근 회사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에 회사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팀원 갑과 을에게 물어보았다.

갑: 개별 성과에 상관없이 팀원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을: 개별적인 성과에 따라 다른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보기 |

- ㄱ. 갑은 격려금 분배에서 평균적 정의를 주장하고 있다.
 ㄴ. 을은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차별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ㄷ. 갑은 상대적 평등, 을은 절대적 평등의 관점을 갖고 있다.
 ㄹ. 갑과 을은 모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 입각한 정의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12]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임.)

서술형 평가

A와 달리 B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2가지만 서술하시오. (옳게 작성한 특징 하나당 1점이며, 잘못 작성한 특징에 대한 감점은 없음.)

■ 갑과 을이 작성한 답안

구분	갑	을
답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보장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점수	2점	1점

- ① A에서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금지된다.
 ② B의 대표적인 사례로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 정권의 수권법을 들 수 있다.
 ③ A는 B와 달리 입법의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한다.
 ④ ㉠에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에 '법이 통치자의 권한 남용의 도구가 되기 쉽다.'가 들어갈 수 있다.

[23020-0013]

5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민헌장 6가지 요구 사항은 1838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확대 운동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인민헌장 6가지 요구 사항>

-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라.
- 하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을 없애라.
- 하원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하라.
- 선거구를 동등하게 하라.
- 선거를 매년 시행하라.

보기

- ㄱ.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 ㄴ. 공직자를 추첨이나 운번제로 선출했을 것이다.
- ㄷ. 연령,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다.
- ㄹ. 개인주의의 심화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무관심이 확대되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14]

6 (가), (나)는 근대 시민 혁명과 관련된 주요 문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는 ... 재산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 등 ...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① (가)는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선언이다.
- ② (나)에 의해 정치 참여에 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되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직접 민주 정치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저항권이 국가에 의해 주어진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모두 사회 계약설, 국민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3020-0015]

7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이 위협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 양도하여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고자 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 을 느끼게 되며, 또 자기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사이에 혼란을 겪기 쉽 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일 부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 만 성립한다.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갑은 입헌 군주제를 옹호하였다.
- ② 을은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국가가 인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23020-0016]

8 표는 질문 (가)~(다)에 따라 A~C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중 하나임.)

질문	A	B	C
(가)	예	아니요	예
(나)	예	예	아니요
(다)	아니요	예	아니요

- ① (가)에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 ‘직접 민주제를 바탕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다)에 ‘계몽사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인가?’가 들어가면, A, C는 모두 절대 왕정을 타도하며 등장하였다.
- ④ B가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라면, (가)에 ‘대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C가 현대 민주 정치라면, (나)에 ‘시민의 정치 참여에 제한이 있는가?’, (다)에 ‘입헌주의 원 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최고법

헌법은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으로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제정의 최종적인 근거가 된다.

◎ 입헌주의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를 의미한다.

◎ 수권(授權)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등을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체크

- ()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 헌법은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는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정답

- 1 헌법
- 2 조직 수권
- 3 국민 주권주의

1. 헌법의 의의와 기능

(1) 헌법의 의미와 의의

① 헌법의 의미와 변천

의미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의미의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을 조직·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규범 근대 입헌주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더 나아가 사회권을 보장하여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규범

② 헌법의 의의: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

-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 등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함.

(2) 헌법의 기능

- ① 국가 창설의 토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함.
- ② 조직 수권: 국가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 ③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함.
- ④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
- ⑤ 정치 생활 주도: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헌법에 따라 주도되고 규제되도록 함.
- ⑥ 사회 통합 실현: 다원화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리·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함.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1) 국민 주권주의

의미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관련 규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실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참정권 보장: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등 복수 정당제 및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 및 표출

(2) 자유 민주주의

의미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
관련 규정	• 전문: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실현 방안	• 국민의 자유권 명시 • 법치주의 → ‘법의 지배’ 확립 •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한 금지 •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의 독립 •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등

(3) 복지 국가의 원리

의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전문: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실현 방안	•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 부여 •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 보장 •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최저 임금제 실시 •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등

(4) 국제 평화주의

의미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실현 방안	• 침략적 전쟁의 부인 및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 국제법 존중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

(5) 평화 통일 지향

의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66조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실현 방안	•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 대통령 자문 기구로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및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6) 문화 국가의 원리

의미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
관련 규정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실현 방안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 • 의무 교육 제도의 시행과 평생 교육의 진흥 등

❶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를 말한다.

❷ 적법 절차의 원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❸ 상호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국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결정이나 행동으로 대응하는 원리를 말한다.

개념 체크

- 1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는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2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다.
- 3 우리나라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다.

정답

- 1 자유 민주주의
- 2 복지 국가의 원리
- 3 국제 평화주의

Theme 1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나타난 헌법의 기능

- (가)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나)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 (가)는 헌법의 조직 수권 기능과 관련된 조항이다. 수권이란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헌법은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 조직의 정당성이 헌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 (나)는 헌법의 권력 제한 기능과 관련된 조항이다. 국회는 국정 감사나 조사를 통해 행정부가 권력 남용을 하지 않도록 견제한다. 헌법은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권력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다)는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과 관련된 조항이다. 헌법은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헌법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이다.

Theme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된 사례

- (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미주 지역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된 2022년 2월 23일 오전 8시 30분께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투표소에서 여성 2명이 걸어 나왔다. 투표소 개소 시각은 오전 8시, 불과 30분 동안 약 12명의 재외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러 투표장을 찾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추산한 전 세계 재외 국민 유권자 수는 220만여 명이다. 서울 거주자인 한 70대 남성 유권자 역시 친척을 만나러 버지니아를 방문했다가 투표소를 찾았으며 “당연히 (투표를) 해야 한다. 의무와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나) ○○군은 군내 종합 복지관에 장애인 고용 카페 ‘카페89’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89’는 종합 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현재 장애인이 고용돼 근무하고 있다. ○○군은 바리스타 훈련 장애인들이 단순히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좋은 고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서 국민 주권주의가 실현된 사례이다. 재외 국민이라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적 선거 제도와 국민 투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나)는 장애인의 고용을 앞장서서 실현하는 ○○군의 모습으로서 복지 국가의 원리가 실현된 사례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23020-0017]

01 다음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헌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헌법 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 어떤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될 경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하여 해당 조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 그 조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① 사회 통합의 실현 도구이다.
- ② 국가 권력의 한계를 규정한다.
- ③ 국가 기관의 조직 원리를 규정한다.
- ④ 최고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⑤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제시한다.

[23020-0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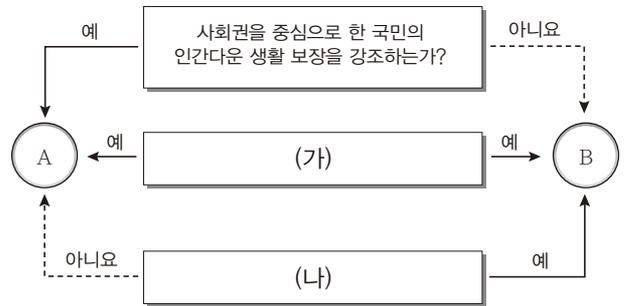
02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헌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 재판소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까지 하도록 한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법 재판소는 “건강 기능 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행정 기관이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 ①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 ② 국가 권력 조직이 정당성을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 ③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 ④ 국가 권력 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 ⑤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

[23020-0019]

03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중 하나임.)



보기

- ㄱ. A의 예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들 수 있다.
- ㄴ. B는 A와 달리 권력 분립, 국민 주권을 명시하고 있다.
- ㄷ. (가)에 ‘국가의 통치 조직과 권한 및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에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이 등장 배경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20]

04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 국가는 국민의 합의로 성립되므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다. 국가는 국민의 의사 없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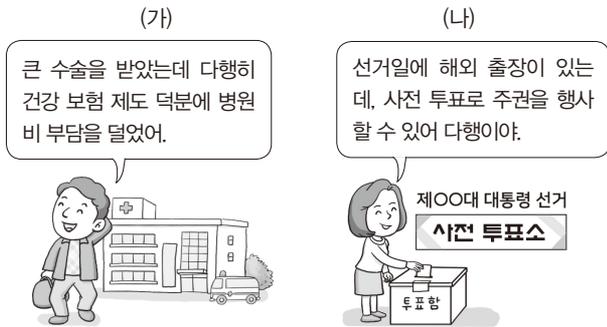
보기

- ㄱ. 헌법 개정으로도 폐지할 수 없는 원리이다.
- ㄴ.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원리이다.
- ㄷ.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 ㄹ. 실현 방안으로 국제법 존중, 침략적 전쟁 부인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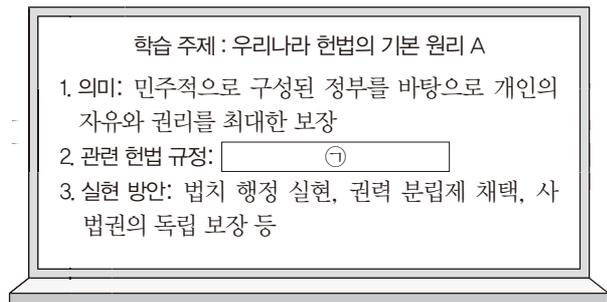
05 그림의 사례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목표로 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의 근거가 된다.
- ⑤ 최저 임금제는 (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나)의 실현 방안이다.

[23020-0022]

06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판서 내용이다. 빈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
-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된다.
- ④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
- 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3020-0023]

0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 헌법 규정	실현 방안
(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A
(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B

- ① (가)에 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 ② (나)는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 ④ A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 포함된다.
- ⑤ B에 '평생 교육 진흥'이 포함된다.

[23020-0024]

08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갑: A와 관련된 헌법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가 있어요.
 을: A의 실현 방안으로는 적법 절차의 원리, 신체의 자유 보장 등을 들 수 있어요.
 병: B는 (가)
 교사: 갑과 병은 옳게 발표했는데, 을은 A의 실현 방안이 아니라 B의 실현 방안을 발표했군요.

보기

- ㄱ. A의 실현 방안으로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를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ㄴ. B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 ㄷ. A는 B와 달리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 ㄹ. (가)에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25]

1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헌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독서실에서 한 공간에 남녀가 같이 공부할 수 없도록 한 ○○도의 조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의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 자치 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판시했다.
-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모자 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① 최고 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 ② 국가 권력 창출과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 ③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 ④ 국가 기관의 강제력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한다.
- ⑤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23020-0026]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중 하나임.)

구분	A	B	C
사회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자유권 보장, 권력 분립, 국민 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아니요
(가)	예	예	예

- ①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은 A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②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B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③ B는 A에 비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 권력의 확대를 추구한다.
- ④ C는 A, B와 달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강조한다.
- ⑤ (가)에 ‘헌법에 국가 통치 조직을 규정하고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23020-0027]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반영된 사례
(가)	헌법 재판소가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은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나)	교도소 수용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봉함(封緘)을 금지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 재판소는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해 무봉함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본권 제한 규범이 지켜야 할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위반한다.”라고 설명했다.

- ① (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 ② (가)에 따라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게 되었다.
- ③ (나)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으로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를 들 수 있다.
- ④ (나)의 실현 방안으로 적법 절차의 원리, 권력 분립,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 수 있다.
- ⑤ (가), (나)는 모두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이다.

[23020-0028]

4 다음 자료에 부각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중 하나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기초 연금 2.5% 인상, 월 최대 30만 7,500원 • ‘노동자 복직 뒤 재차 해고’ A사 …… 법원 ‘노동 3권 침해 행위에 해당’ • 헌법 재판소, ‘최저 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결정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 주민 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8세로 주민 투표 연령 인하 • 헌법 재판소, 법원 100m 이내 집회 일괄 제한은 위헌, 집회의 자유 과도한 제한

보기

ㄱ. A는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중시한다.
 ㄴ. A는 근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ㄷ. B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다.
 ㄹ. A, B는 모두 국가 권력 행사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29]

5 다음 헌법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토론 주제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전문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보기 |

- ㄱ.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 것은 적절한가?
- ㄴ. 여행 금지 국가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
- ㄷ. 미취업 청년에게 국가가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한가?
- ㄹ.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국회 의원 선거권을 부여하지는 주장은 바람직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20-0030]

6 다음 자료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에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3만 명의 아동이 아동 양육 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 등의 형태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들은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한다. 매년 2,600여 명의 아동이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은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정착금과 월 30만 원 정도의 자립 수당(3년간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 보호 종료 아동의 기초 생활 수급 경험이 40%에 달하고, 월 평균 수입은 123만 원으로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인권 위원회는 보건 복지부에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 등 자립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할 것과 실용적 생활 기술 교육 확대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고용 노동부에는 각각 주거 지원 및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권고했다.

- ①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원리이다.
- ②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③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행복 추구권의 내용

행복 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 결정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있다.

◎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사회적 특수 계급이란 봉건 제도에서의 신분처럼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계급을 말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는 신분제를 타파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 체크

- 1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이라고 한다.
- 2 ()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까지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 3 ()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

- 1 기본권
- 2 행복 추구권
- 3 평등권

1. 기본권의 의의

- (1) **기본권의 의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 (2)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
 - 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짐.
 - ②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성립 이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리임.
 - ③ 국가는 천부 인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기본적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둬.

2. 기본권의 유형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자료 플러스 구치소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헌법 재판소는 수형자 감이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수형자 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면적은 실제로 1.06㎡에서 1.27㎡에 불과했다. 이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cm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다. 교정 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 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② 행복 추구권

-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 성격: 행복 추구에 필요한 모든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권리

(2) 평등권

- ① 의미: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성격: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 ③ 내용: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의 금지,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등

(3) 자유권

- ① 의미: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② 등장 배경: 절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자유권 형성

③ 성격

-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
- 국가 권력이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
-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

④ 내용

신체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묵비권), 영장 제도, 체포·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지, 체포·구속 적부 심사제,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
정신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
사회적·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4) 참정권

① 의미: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등장 배경

- 근대 시민 혁명 이전: 신분, 계급 등에 따라 참정권 제한
-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재산, 성별 등에 따라 참정권 제한
- 선거권 확대 운동 전개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됨. →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③ 성격

- 정치적 기본권: 국민 주권주의 실현
- 능동적 권리: 국가의 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④ 내용

- 선거권: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 공무 부담권: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 공직 취임권 등)
- 국민 투표권: 헌법 개정안 확정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

(5) 사회권

① 의미: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등장 배경

-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제기
-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사회권을 처음으로 규정

③ 성격

-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 적극적 권리: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보장
-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

④ 내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등

❖ 소급효 금지의 원칙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형법은 그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새로운 소송으로 심리 혹은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연좌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 피선거권

선거에 의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개념 체크

- 1 ()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
- 2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다.
- 3 ()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정답

- 1 자유권
- 2 참정권
- 3 사회권

피의자와 피고인

피의자는 공소 제기 전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재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검사가 판단하여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공공복리

국가 구성원 전체의 행복과 이익으로, 개인의 행복 및 이익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 개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의미한다.

개념 체크

- ()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가 있다.
- 기본권 제한의 방법적 요건으로서 ()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답

- 청구권
- 공공복리
- 과잉 금지

(6) 청구권

- ① 의미: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성격
 -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 적극적 권리
- ③ 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처분이 확정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요건

- ① 관련 헌법 조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
- ② 목적: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
- ③ 형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
- ④ 방법적 요건: 과잉 금지의 원칙 →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함.

개념 플러스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기준

-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수단의 적합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 피해의 최소성: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법익의 균형성: 기본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衡量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거나 혹은 적어도 양자 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2)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 개별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3) 의의: 헌법에 제시된 목적, 형식, 방법, 내용상 한계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Theme 1 적극적 우대 조치

(가) 공직 선거법

제47조 ③ 정당이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및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7조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국가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차별받아 온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똑같은 평등만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가)는 비례 대표 국회 의원 또는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우대를 해 주는 것이다. (나)는 공무원 채용 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법 규정이다. 그러나 적극적 우대 조치가 지나칠 경우 역차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Theme 2 기본권 제한의 과잉 금지 원칙

【판시 사항】 여행 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여권법 제26조 제3호가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 요지】 이 사건 처벌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외 위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벌 조항은 형벌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경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한데 형벌 외의 방법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외 위난 상황이 우리나라의 국민 개인이나 국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처벌 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되어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해외 여행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므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 재판소는 여행 금지 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규정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23020-0031]

01 밑줄 친 부분이 속하는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주인 등 주거 점유자가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위급 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 활동 지침’을 통해 살인, 강도 등 형벌이 무거울 경우, 용의자의 무기 소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용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믿을 만한 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 긴급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주인 등 주거 점유자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①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 ④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
- 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23020-0032]

0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인권 위원회는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 따르면 “근로 감독관이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갑을 연행하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갑이 자신의 인격을 침해당하고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갑에게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 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③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근거이자 원천이다.
- ④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다.
- ⑤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23020-0033]

03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된 기본권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 (나)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

- ① (가)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나)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소극적·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23020-0034]

04 기본권 유형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 교사: 기본권 A~D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 갑: A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 을: B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병: C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 정: D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교사: 네 사람 중 세 사람은 옳게 설명하였지만, ㉠ 한 사람은 ㉠ 자신이 설명해야 할 기본권이 아니라 ㉡ 다른 기본권을 설명하였습니다.

- ① A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B에 따라 우리 헌법은 모든 종류의 서로 다른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 ③ C는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이다.
- ④ D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 ⑤ ㉠은 ‘정’, ㉡은 ‘사회권’, ㉢은 ‘자유권’이다.

[23020-0035]

05 다음 사례의 갑~병이 공통적으로 행사한 기본권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회사에 법정 최저 임금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 을은 의료 급여 대상자로서 무료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 병은 노동조합 대표로서 회사 대표와 임금에 관해 협상을 하였다.

보기

- ㄱ. 소극적·방어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 ㄴ.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 ㄷ.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권리이다.
- ㄹ.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36]

06 다음 헌법 조항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 제2항)

- ① ㉠은 다른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② ㉡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
 ③ ㉢ 이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④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에서 국가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한다.

[23020-0037]

07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요즘 여기서 매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가게 영업을 할 수가 없어. 어제는 폭력 시위로 변하는 바람에 장사를 완전히 망쳤어. 아예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어.
 을: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안 돼.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야. 집회와 시위로 영업상 손실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가)

- ① 영업의 자유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훨씬 중요해.
 ②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가능해.
 ③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해.
 ④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감수해야 해.

[23020-0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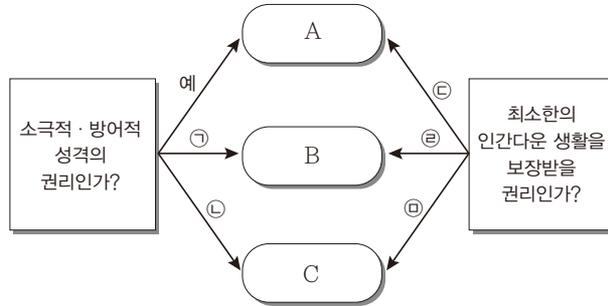
08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밑줄 친 '결정'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정치 자금 관련 회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정치 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영수증, 예금 통장 등 정치 자금 회계 자료는 현행 법령하에서 사본 교부가 되지 않고 열람 중 필사도 허용되지 않아 열람만이 가능한데 열람 기간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내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열람 기간 제한 조항은 정치 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 부담의 경감 등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했다.

- ①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다.
 ② 법익의 균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③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었다.
 ④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
 ⑤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23020-0039]

1 그림은 기본권 유형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 ① ㉠과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② A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③ 청원권이 B에 해당하면, C의 내용으로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 ④ C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 ⑤ 교육을 받을 권리가 B에 해당하면, ㉤은 '예', ㉥은 '아니요'이다.

[23020-0040]

2 다음은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기본권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정인 갑
 피해자 피진정 기업에 재직 중인 무기 계약 직원 11명
 피진정인 을

주문

1.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및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1. 진정 요지
 갑은 을이 운영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피해자들은 이 회사에서 고압가스 및 연구실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 계약 직원들이다. 이들은 소속 부서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승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후략)...

- 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권리이다.
- ③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④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는 권리이다.
- ⑤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23020-0041]

3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각 장애인인 갑은 접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A와 B를 침해받았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시각 장애인도 선거 공보 이외에도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선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선호 후보 결정 등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A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 선거법이 접자형 선거 공보에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 정보 획득에서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① A는 능동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 ②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③ A는 B와 달리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 ④ B는 A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인정된다.
- ⑤ A, B는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된다.

[23020-0042]

4 표는 기본권 유형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임.)

	기본권 유형	A	B	C
질문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		㉠	㉡	㉢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인가?		㉣	㉤	㉥

*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만 대답함.

[보기]

- ㄱ. ㉠~㉥에 들어갈 대답 중 '예'는 2개이다.
- ㄴ. A가 청구권이라면, ㉠과 ㉣에 들어갈 대답은 같지 않다.
- ㄷ. B가 소극적·방어적 권리라면,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ㄹ. ㉠, ㉡, ㉥에 들어갈 대답이 같다면, C는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43]

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헌법 재판소는 갑이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이나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 등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 보기 」

- ㄱ. ㉠에서 갑이 행사한 기본권은 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 ㄴ. ㉡은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ㄷ. ㉢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 ㄹ. ㉣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을 밝힌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44]

6 다음 갑과 을의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직 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 자금법 제49조의 죄(선거 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갑: 당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이 당선인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므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므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 보기 」

- ㄱ. 갑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 제한 시 준수해야 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 ㄴ. 을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 제한 시 준수해야 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 ㄹ. 갑과 을의 주장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은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045]

7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헌법 재판소의 법적 판단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것인 반면, 이를 통해 얻는 공익은 국가 형벌권 확보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 ① 기본권의 제한은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②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 ③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법익의 균형을 갖추었다.
- ④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이 큰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
- ⑤ 피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23020-0046]

8 밑줄 친 부분의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인 갑은 버스 전용 차로로 차를 운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갑은 전용 차로제 관련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전용 차로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부득이하게 전용 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전용 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는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용 차로제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라는 공익이 승용차 운전자의 손실보다 크고,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 ① 기본권 제한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 ②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③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④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얻는 공익이 잃는 사익보다 크다.
- ⑤ 기본권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

0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교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A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과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봅니다.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봅니다.

A에서는 정치로 보지 않는데 B에서는 정치로 보는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교사

(가) 을/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 ① A는 시민 단체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② B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④ B에 비해 A는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⑤ (가)에는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급 회의 과정’이 들어갈 수 없다.

0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었던 ‘인치(人治)’를 대신하여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法治)’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건들을 겪은 뒤 A만으로는 민주주의나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각성이 있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닌 법’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정의에 합치되지 않은 법률은 법으로서의 본질을 결여한 것임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갖는 B를 요구하게 되었다.

- ① A는 입법자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는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 B와 달리 A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므로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0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학년도 수능]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B의 실현에 필요한 국내법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 ① A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 ② A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B는 적정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B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 ⑤ B와 달리 A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04 (가)~(다)는 기본권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①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 ② (나)에 규정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③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 ④ (나)와 달리 (다)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다)와 달리 (가)에 규정된 기본권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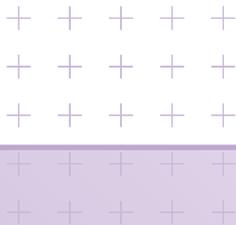
II

민주 국가와 정부

학습 요소

-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 재판소의 권한
-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관계
-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기관
- 지방 자치와 주민 참여 방법

❶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인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 재판소의 권한과 권력 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각 국가 기관 간의 견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 자치의 의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기관,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BS 교재 연계 사례

2023학년도 수능 문항 6번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교사: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이 있습니다.
 을: B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병: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 두 사람의 설명은 옳고, 나머지 한 사람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 ③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B와 달리 A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 소환 제도가 있다.
- ⑤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 04 정부 형태
-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 06 지방 자치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63쪽 3번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은 A와 B로 구분됩니다. A와 B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가집니다.
 을: B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 투표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 B는 A와 달리 지방 자치 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정:
 교사: 네 사람 중 두 사람의 설명은 옳고, 두 사람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ㄱ. A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한다.
 ㄴ.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ㄷ. B는 A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ㄹ. (가)에 'A와 B 간에 수직적인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수능 6번 문항은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63쪽 3번 문항을 거의 그대로 연계했다. 지방 자치 단체의 두 기관인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을 비교하는 내용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답변 방식, 학생의 답변 중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A와 B가 각각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각 기관의 특징을 묻는 선지로 구성되어 있다. 수능특강 문항에서는 답변하는 학생이 4명이고 수능 문항에서는 3명이라는 점만 다를 뿐 제시문과 선지 내용은 유사하다. 문제의 구성 방식이 비슷하여 수능특강 63쪽 3번 문항을 학습한 학생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방 자치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 다수당

양당제 국가에서는 의회 과반 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가리키고,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존재하기 어려운 다당제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을 가리키는데, 다당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당'보다는 '제1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국가 원수

헌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다.

개념 체크

- 1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 을 통해 내각을 견제할 수 있다.
- 2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 간 긴밀한 협조를 추구하는 권력 () 정부 형태이다.
- 3 의원 내각제에서 총선 결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출현하지 않을 경우 2개 이상의 정당이 () 을 구성할 수 있다.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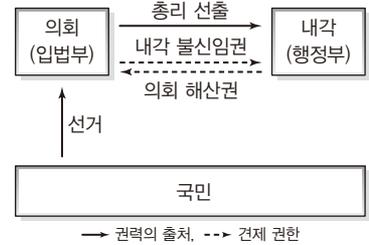
- 1 내각 불신임권
- 2 융합형
- 3 연립 내각

1. 의원 내각제

- (1) 의미: 입법부인 의회에 의해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구성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
- (2) 발달 배경: 17세기 영국에서 의회를 통해 절대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의회 중심의 정부 형태가 발달하게 됨.

(3) 정부 구성 방식

- ① 의회 의원 총선거 → 의회 구성 →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대표를 행정부 수반인 총리로 선출 → 총리가 각료를 추천하여 내각 구성
- ② 총선거 결과 의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음.



(4) 특징

- ①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임.
- ② 의회는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 ③ 의회 의원이 총리 또는 각료를 겸직할 수 있음.
- ④ 내각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 ⑤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총리는 의회 해산권을 가짐.
- ⑥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함 → 국왕 등 국가 원수가 명목상 존재함.

개념 플러스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

내각 불신임권은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이 의결되면 내각은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거나 의회 해산을 단행한다. 의회 해산권은 총리가 의회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는다. 의회가 해산되면 조기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데, 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 총리 및 내각도 모두 교체된다.

(5) 장점과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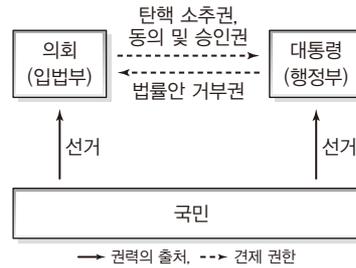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능률적인 국정 수행에 유리함. • 책임 정치의 구현에 유리함. →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내각이 의회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 입법부와 행정부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유리함. →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 다수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담당하여 다수당에 대한 견제가 곤란할 수 있음. • 정국 불안정의 발생 가능성 →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 조기 총선거가 반복될 경우 심각한 정국 불안이 나타날 수 있고, 총선 결과 군소 정당 난립 시 연립 내각의 구성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2. 대통령제

- (1) 의미: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부 형태

(2) **발달 배경:**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1776년 독립하면서 절대 군주가 아닌 국민이 선출하는 국가 원수,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가 발달함.

(3) **정부 구성 방식:**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별도로 실시됨. →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구성됨.



(4) **특징**

- ①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임.
- ② 대통령과 의회는 각각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 ③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은 금지됨.
- ④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음.
- ⑤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소추권과 동의 및 승인을 가짐.
- ⑥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5) **장점과 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유리함. →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엄격한 임기 보장 순기능 •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유리함.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정치의 구현에 불리함. → 엄격한 임기 보장의 역기능 • 독재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움. • 대통령(행정부)과 의회 간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곤란함. → 의회 내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

개념 플러스 탄핵 제도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이들을 소추하여 파면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며, 최종적인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가 갖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

- ① 국회 구성과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각각 별도로 실시됨.
- ②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
- ③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 ④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행정부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2)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

- ①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함.
- ② 의원 내각제의 내각 회의 성격을 갖는 국무 회의를 두고 있음.
- ③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됨.
- ④ 국회 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음.
- ⑤ 국회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 ⑥ 대통령이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을 가짐.
- ⑦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에 대하여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을 가짐.

❖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행정부 수반이 그에 대한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을 말한다.

❖ **의회의 동의 및 승인권**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인정하는 의사 표시이다.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사후에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 **여소야대(與小野大)**

행정부 수반이 속한 집권 정당을 여당(與黨), 집권하지 못한 정당을 야당(野黨)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여당보다 많은 상황을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부른다.

개념 체크

- 1 ()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중시되는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다.
- 2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 3 우리나라에서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것은 ()요소이다.

- 정답**
- 1 대통령제
 - 2 동의 및 승인권
 - 3 의원 내각제

Theme 1 부통령과 국무총리

-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1948. 7. 17. 시행)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81조 헌법 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 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한민국 헌법(제3차 개정 헌법, 1960. 6. 15. 시행)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한민국 헌법(제5차 개정 헌법, 1963. 12. 17. 시행)
제70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차이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부통령의 존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통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존재했었다.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도 선거로 선출하며, 부통령은 대통령의 1순위 권한 대행과 동시에 현재의 헌법 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등 중요한 지위였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개정된 제3차 개정 헌법부터는 부통령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행정 권한은 국무총리 중심의 국무원에 속하게 되고, 국가의 원수였던 대통령은 내각제에서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 제5차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제가 부활되었지만 부통령은 등장하지 않았으며, 그와 유사한 역할을 국무총리가 대신하고 있다. 단, 국무총리는 부통령과 달리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차이가 있다.

Theme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구분	정부 형태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제헌 헌법	제39조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 전형적인 대통령제(부통령 존재)에 의원 내각제 요소 가미
제3차 개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9조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내각제 채택 • 국회 양원제 채택
제5차 개헌	제48조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4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3조 ①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제로 환원 •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정부 형태 채택 •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가능

우리나라는 건국 당시에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제3차 개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고,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제5차 개헌 때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되었으나,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이다.

[23020-0047]

01 밑줄 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몽테스키외(Montesquieu, C. L.)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단의 수준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그의 권력 분립론은 단순히 권력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엄격한 삼권 분립의 제도화를 추구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독립성과 견제가 증시되는 정부 형태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 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 ②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④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내각을 구성한다.

[23020-0048]

02 다음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헌법의 일부 조항이다.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한다.
-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관하여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내각은 의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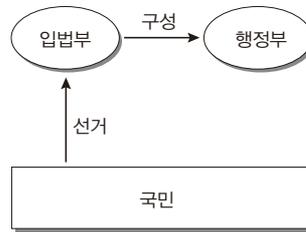
보기

- ㄱ.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ㄴ.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ㄷ.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불일치한다.
- ㄹ.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49]

03 그림과 같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요소가 나타난 우리나라 헌법 조항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②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④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23020-0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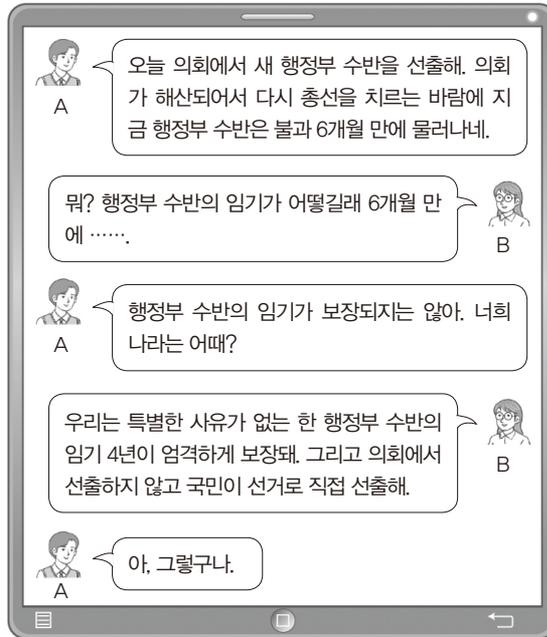
04 다음 글에 나타난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이번 갑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의회 의석의 60%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B당은 앞으로의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 ①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②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될 것이다.
- ③ 각료를 겸직하는 A당 소속 의원이 감소할 것이다.
- ④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⑤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 정치적 대립 시 해결이 곤란하다.

[23020-0051]

1 다음은 갑국 국민 A와 을국 국민 B의 대화이다.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①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을국의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 ③ 갑국에서는 을국과 달리 의회 의원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 ④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갑국과 을국에서는 모두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3020-0052]

2 다음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만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의회는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을 행사함. • <input type="text"/> (가)

*틀린 내용이 1개 있음.

B만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 제출은 의회 의원만 가능함. •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 가능함. •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음. • <input type="text"/> (나)

*틀린 내용이 2개 있음.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A는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ㄴ. B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ㄷ. (가)에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음.'이 들어갈 수 있다. ㄹ. (나)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됨.'이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53]

3 표는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문	정부 형태	A	B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가?		예	㉠
(가)		㉡	아니요
(나)		㉢	㉣

- ① ㉠에 들어갈 답변은 ‘예’이다.
 ② (가)에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되어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가)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 들어갈 답변은 동일하다.
 ④ (나)에 ‘의회 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는 서로 다른 답변이 들어간다.
 ⑤ (가)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고, (나)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 들어갈 답변은 동일하다.

[23020-0054]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게임 규칙

- 우리나라 헌법 조항이 적힌 카드 9장을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펼쳐 놓는다.
- 갑, 을, 병은 각각 3장씩 카드를 가져간다.
- 가져간 카드 내용이 대통령제의 요소이면 1점, 의원 내각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2점을 획득한다.

▶ 카드 내용

카드 A	국회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카드 B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카드 C	국무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카드 D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카드 E	대통령은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카드 F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카드 G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카드 H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카드 I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게임 결과

구분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점수
갑	B	㉠	H	5점
을	A	F	㉡	4점
병	㉢	E	G	㉣

| 보기 |

- ㄱ. ㉠에는 C 또는 D가 들어갈 수 있다.
 ㄴ. ㉣은 5점 이상이다.
 ㄷ. ㉣이 4점이라면, ㉣에 I가 들어갈 수 없다.
 ㄹ. ㉠에 C, ㉡에 I가 들어가면, ㉣은 3점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55]

5 표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A국~D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음.)

구분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였는가?	
		예	아니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하는가?	예	A국	B국
	아니요	C국	D국

- ① C국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 ② A국은 B국에 비해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 ③ B국은 C국에 비해 각료를 겸직하는 의회 의원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 ④ D국은 C국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⑤ B국, D국에서는 A국, C국과 달리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23020-0056]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시기별로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는 갑국의 t 시기~t+4 시기의 의회 구성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단, t 시기에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고, 이후 정부 형태가 두 번 변화하였다.

구분	t 시기	t+1 시기	t+2 시기	t+3 시기	t+4 시기
A당 의석률(%)	52	37	36	51	23
B당 의석률(%)	33	54	42	29	27
C당 의석률(%)	11	6	9	14	24
D당 의석률(%)	4	3	13	6	26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	㉡	A당	㉢	A당

보기

- ㉠. 다른 시기에 비해 t+4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 ㉠과 ㉡이 같고, t+2 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면, t+2 시기~t+4 시기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다.
- ㉢. ㉢이 B당이고, t+2 시기에 의회 의원과 내각이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면, ㉡에 A당이 들어갈 수 있다.
- ㉣. t+1 시기와 t+3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면, t+2 시기에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 국회

(1) 국회의 구성

① 국회의 의원

- 선출과 임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임.
- 정수(定數): 헌법에 따라 200인 이상으로 하되 현재 정수는 300명임.
- 유형: 지역구 국회 의원(253명), 비례 대표 국회 의원(47명)

② 주요 기관: 국회 의장 1인, 부의장 2인, 위원회(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교섭 단체 등

개념 플러스 국회의 위원회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로 구분된다. 교육 위원회, 외교 통일 위원회, 법제 사법 위원회 등 분야별로 구성되는 상임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 속하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별 위원회는 둘 이상의 상임 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국회에 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회의 회의와 의사 결정

- ① 회의: 정기회(매년 1회 집회),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집회)
- ② 회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③ 일반적인 의사 결정 절차: 의안 제출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④ 일반적인 의사 결정 기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

(3) 국회의 권한

- ①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법률 제정 및 개정권, 대통령의 주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
- ② 국가 기관 구성 권한: 대통령의 주요 국가 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감사원장) 구성 시 임명 동의권, 헌법 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등
- ③ 국정 감시 및 통제 권한: 국정 감사권, 국정 조사권,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 대통령·국무총리·행정 각부의 장·법관·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국무 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등
- ④ 재정에 관한 권한: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등

개념 플러스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헌법 제6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 감사는 국회가 국가 기관과 각 시·도, 정부 투자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이루어진다. 국정 조사는 특별한 국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에서 실시된다.

* 교섭 단체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로서 국회 의사 진행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협의한다. 국회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어서 심의하는 원칙을 말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조약의 비준

국가 원수와 같은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념 체크

-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 의 요구로 집회된다.
- ② 국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 을 거진다.
- ③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답

- ① 1/4 이상
- ② 동의권
- ③ 탄핵

공포

새로 제정된 법령이나 조약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제 사법 위원회

국회의 상임 위원회 중 하나로써 법률안의 위헌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다루는 체계·형식 심사와 용어의 명확성이나 적합성 등을 다루는 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국정 조정권

원활한 국정 운영 및 사회 통합 등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 영역을 초월하여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사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구분된다.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달리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념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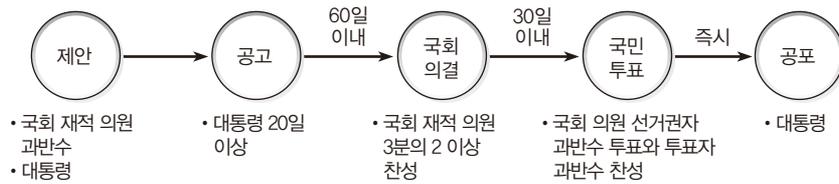
- 1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은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2 법률안이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국회 ()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 3 대통령의 권한 중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등은 ()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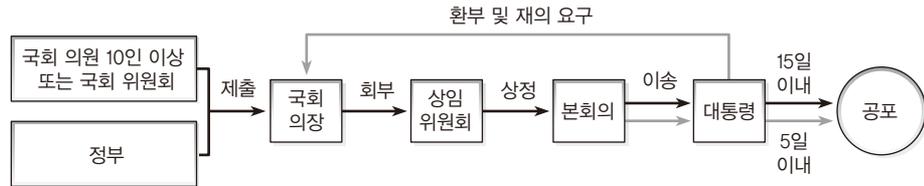
- 1 대통령
- 2 상임 위원회
- 3 행정부 수반

(4) 입법 절차

① 헌법 개정 절차



② 법률 제·개정 절차



법률안 제출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국회 위원회,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상임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 위원회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함.
	법제 사법 위원회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字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함.
본회의 의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부 이송 및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장이 공포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회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법률로서 확정됨.

2. 대통령과 행정부

(1) 행정의 의미

- ① 고전적 의미: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 작용
- ② 현대적 의미: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적극적인 국가 작용

(2) 대통령

- ① 선출과 임기: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
- ② 지위: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짐.
- ③ 권한

•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 신임·접수 또는 파견권, 선전 포고 및 강화권 등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긴급권(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등
국가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 임명권
국정 조정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 투표 부의권, 사면권 등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등

(3) 국무총리

- ① 구성: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② 권한: 행정 각부 통할권, 총리령 발포권,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 등

(4) 국무 회의

- ① 구성: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국무 위원으로 구성됨.
- ② 지위: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
- ③ 권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 국무 회의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음.

(5) 행정 각부

- ① 구성: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함.
- ② 권한: 대통령이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함.

(6) 감사원

- ① 구성: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 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② 지위: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짐.
- ③ 권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

3. 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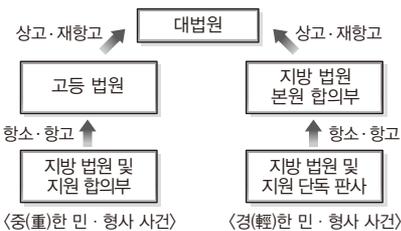
(1) 사법(司法)

- ① 의미: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에 법을 적용하여 적법과 위법,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국가 작용
- ② 목적: 국가의 법질서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 ①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을 규정하고, 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배제함.
 - 법관의 독립: 법관은 다른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헌법으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됨.
- ② 심급 제도: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3심제를 적용함.

자료 플러스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
- 항고와 재항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과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

- ③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 국무 회의 심의 사항

헌법 개정안·국민 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 사면권 행사, 국가 긴급권 행사, 정당 해산의 제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관의 신분 보장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 징계 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 3심제의 예외

심급 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 소송이나 국회의원 선거 소송 등은 대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단심제가 적용된다.

개념 체크

- ① ()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 기관이다.
- ② ()은 대통령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헌법 기관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 ③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라고 한다.

정답

- ① 국무 회의
- ② 감사원
- ③ 심급 제도

☉ 법원의 조직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등의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는데,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 헌법 재판

헌법 해석을 통해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의 내용을 확정하는 재판을 말한다.

☉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개념 체크

- ()은 최고 법원으로 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 등을 갖는다.
-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재판소에 ()을 제청할 수 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의 제소에 의해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

정답

- 대법원
- 위헌 법률 심판
- 정부

(3) 법원의 조직과 역할

① 대법원

- 구성: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구성됨.
- 권한: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권,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 등

② 고등 법원: 원칙적으로 제2심으로서 항소·항고 사건을 담당함.

③ 지방 법원: 원칙적으로 제1심을 담당함(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의 제2심을 담당함.).

④ 기타 각급 법원: 고등 법원급인 특허 법원, 지방 법원급인 가정 법원과 행정 법원 등이 있음.

⑤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음.

4. 헌법 재판소

(1) 지위: 국가의 사법 작용 중 헌법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가 기관

(2) 구성과 권한

① 구성: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으로 구성되며,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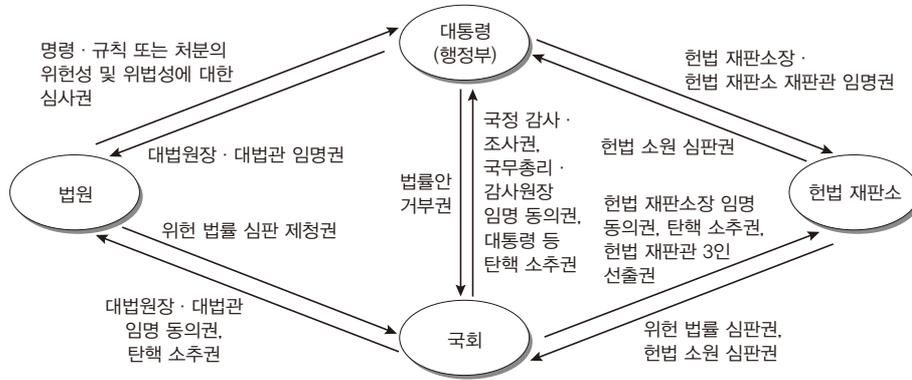
② 권한

헌법 소원 심판	권리 구제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법원의 재판 제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위헌 심사형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탄핵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 해당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해 해당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청구에 의해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결정하는 심판

개념 플러스 헌법 재판소 결정 정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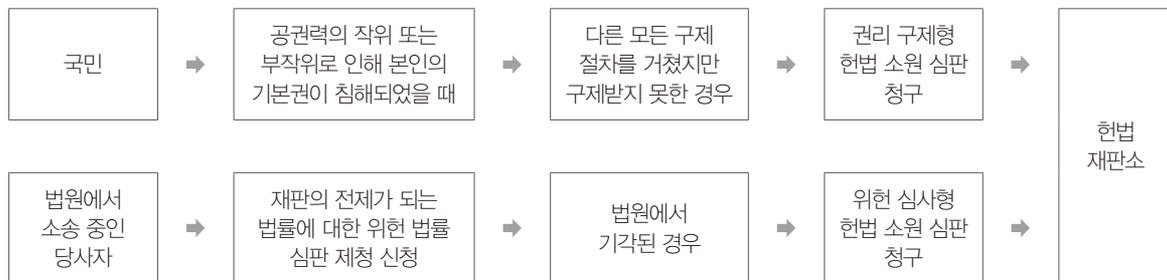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경우에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합헌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다. 탄핵의 결정과 정당 해산의 결정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권한 쟁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Theme 1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법원)에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 기관 간에는 상호 견제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 견제 장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Theme 2 헌법 소원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구분된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을 때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3020-0057]

0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력 분립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민주 국가는 삼권 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입법권은 ㉠에 속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에 속한다.

- ① ㉠은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는다.
- ② ㉡은 국정 조사 및 국정 감사권을 갖는다.
- ③ ㉢은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갖는다.
- ④ ㉠은 ㉢의 법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 ⑤ ㉡은 ㉠과 달리 국가 예산 결산 심사권을 갖는다.

[23020-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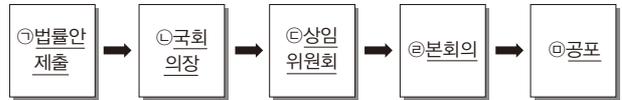
0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300명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으며, ㉡각종 위원회와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형태로 열린다.

- ① ㉠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 ② ㉡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사한다.
- ③ ㉢은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 ④ ㉣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 ⑤ ㉤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집회된다.

[23020-0059]

03 그림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 ② ㉡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한다.
- ④ ㉣에서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 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있는 날로부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3020-0060]

04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회는 ㉠국정 감사를 시작하였다.
-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지방 법원은 피고인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다.

보기

- ㄱ. ㉠은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 ㄴ. ㉡은 ㉠과 달리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 ㄷ. ㉢이 없어도 ㉣이 이루어질 수 있다.
- ㄹ. ㉤은 ㉢과 달리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61]

0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통령 및 행정부의 권한 행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 재판소에 의한 통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보기 |

- ㄱ. 국정 감사는 ㉠에 해당한다.
 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는 ㉣에 해당한다.
 ㄷ. 탄핵 소추는 ㉠에, 탄핵 심판은 ㉣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에, 헌법 소원 심판은 ㉣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62]

0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피고인 갑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1심 판결에 불복하였다. 갑의 [A](으)로 이루어진 2심 재판은 [B]에서 열렸으며, 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사 [C]하여 결국 [D]에서 3심 재판이 이루어졌다.

- ① ㉠은 무죄 판결일 것이다.
 ② A에 들어갈 용어는 '상고'이다.
 ③ C에 들어갈 용어는 '재항고'이다.
 ④ D는 B와 달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⑤ B와 D는 모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23020-0063]

0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11조 제1항 ㉠헌법 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중략)...
5.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 ① ㉠의 모든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은 소송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은 일정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④ ㉣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심판한다.
 ⑤ ㉣은 국민 개인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구제 절차이다.

[23020-0064]

08 우리나라 헌법 기관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B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 C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B와 차년도 D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권은 D의 권한이다.
 ② C는 A의 직속 기관이지만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③ B는 A와 달리 D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④ C의 장(長)은 A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⑤ D는 B에게 A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3020-0065]

1 다음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대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요즘 우리나라에 정치적 이슈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 저희 시민 단체에서 제기한 ○○ 사건의 진상 파악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헌법 개정이죠. 우리 여당에서는 □□□에 대한 헌법 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야당들도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 제1야당인 우리 당에서 몇 년 전부터 제안한 △△ 관련 문제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투표를 통해서라도 △△ 관련 문제를 매듭짓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① 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 ② 갑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 전반에 관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적인 감사를 조속히 시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 ③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라면 을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은 발의될 수 없다.
- ④ 을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도 거쳐야 한다.
- ⑤ 병이 말한 국민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 투표 부의권을 행사해야 한다.

[23020-0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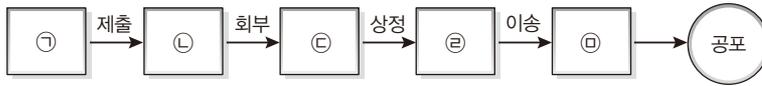
2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속한 갑의 발언 내용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 첫 ㉡국무 회의 때 ㉢각부 장관들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자고 다짐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 수개월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 법률 개정안을 국무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한 순간도,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제가 임명한 ㉥□□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날이지요. …… 어려운 협상 끝에 성공한 ㉦△△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비준도 기억에 남습니다. ……

- ① ㉠은 4년이며, 중임이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 ② ㉡에는 모든 ㉢이 소속되며,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③ ㉣은 ㉤과 달리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다.
- ④ ㉤은 ㉦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이다.
- ⑤ ㉥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3020-0067]

3 그림은 우리나라 법률 제·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이다.
- ② ㉡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기관이다.
- ③ ㉢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구성할 수 있다.
- ④ 법률안은 반드시 ㉢을 거쳐야만 ㉣에 상정될 수 있다.
- ⑤ ㉣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3020-0068]

4 표는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국회, 대법원, 행정부 중 하나임.)

구분	A	B	C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아니요	㉠	예
구성원이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예	아니요
(가)	㉢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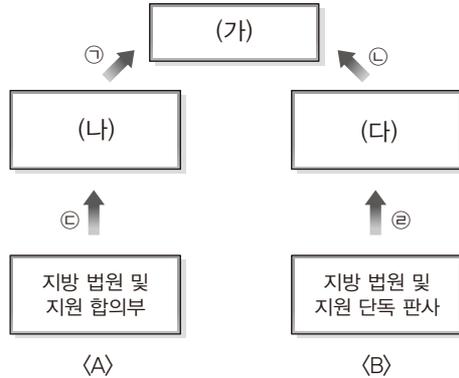
[보기]

- ㄱ. A의 장(長)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C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ㄴ. A는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B와 C를 견제할 수 있다.
- ㄷ. (가)에 ‘구성원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는 서로 다른 대답이 들어간다.
- ㄹ. (가)에 ‘국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과 ㉣에는 서로 같은 대답이 들어간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69]

5 그림은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형사 사건, B는 민사 사건에 해당한다.
- ② (다)는 위헌 법률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다.
- ③ (가)의 법관은 (나)의 법관과 달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은 ㉢과 달리 '항고'가 될 수 있다.
- ⑤ ㉡은 '재항고', ㉣은 '상고'가 될 수 있다.

[23020-0070]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유류분 조항’ 위헌 제청

지난 ▽월 ▽일에 ㉠A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재판부는 사망한 갑의 자녀 을이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갑은 사망 직전 자녀 병에게만 부동산을 증여 하였는데, 갑의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을이 병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병이 재판부에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 ① ㉠은 대법원을 의미한다.
- ② ㉡의 모든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을이 ㉢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만약 ㉠이 ㉢을 기각했다면, 병은 ㉡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을 하지 않아도 ㉠은 직권으로 ㉡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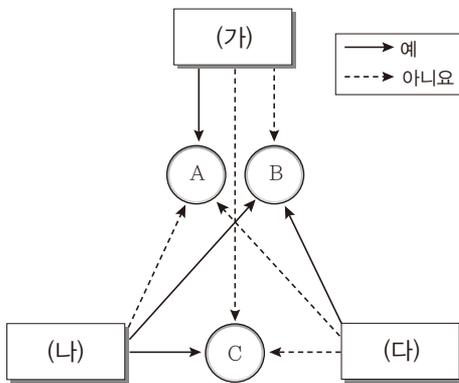
[23020-0071]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개헌안을 발의하여 ㉠제안해야 한다. 이후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및 합의를 구하는 기간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공고 이후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개정안은 공고를 통해 국민에게 알린 바 있으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하고, 국민 투표로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 ① ㉠은 국회 의원 10인 이상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 ② ㉡은 국회 의장 또는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30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 ③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④ ㉣로 헌법 개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⑤ ㉤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23020-0072]

8 그림은 질문 (가)~(다)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대통령, 국회, 대법원 중 하나임.)

| 보기 |

- ㄱ. (가)에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나)에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선출)되는가?’, (다)에 ‘국가 예산안의 심의·의결권을 갖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나)에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이 있는가?’가 들어가면, A는 국무총리 임명권을 갖는다.
- ㄷ. (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갖는가?’가 들어가면, B가 국무 위원 해임권을 갖는다면, C의 구성원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 ㄹ. C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있고, (나)에 ‘헌법 개정안 제안권이 있는가?’가 들어가면, (다)에 ‘국정 조사권을 갖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❶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 형태를 가리킨다.

❷ 자치구

지방 자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도 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는 시장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되고, 구 의회가 없다는 점에서 자치구와 다르다.

❸ 조례

지방 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가리킨다.

개념 체크

- ①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라고 한다.
- ②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에는 광역 자치 단체와 자치구·시·군과 같은 ()가 있다.
- ③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중 ()는 의결 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 ① 지방 자치
- ② 기초 자치 단체
- ③ 지방 의회

1. 지방 자치

- (1) **의미**: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
- (2) **의의**
 - ① 중앙 정부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 수행: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각자에게 적합한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
 - ② 중앙 정부와 수직적인 권력 분립 관계 형성: 중앙 정부는 법령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는 자치를 통해 중앙 정부로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
 - ③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중앙 정부의 한계 보완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 ④ 국가 전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주 시민 및 정치 지도자 양성 → 민주주의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
- (3) **유형**
 - ① 주민 자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 자치 → 정치적 의미의 지방 자치
 - ② 단체 자치: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 → 행정적 의미의 지방 자치

자료 플러스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는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1952년이 되어서야 최초의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한 후 지방 자치는 오랜 기간 헌법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유명무실했던 지방 자치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1991년에 지방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30여 년 만에 부활하였다. 이후 1995년에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방 자치 시대가 개막하였다.

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1)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 ①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② 기초 자치 단체: 시·군·구(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구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으로 표현하기도 함.)

(2)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 ① 지방 의회(의결 기관)

구성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지역구 의원,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됨.
유형	광역 지방 의회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 기초 지방 의회로서 자치구·시·군 의회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기타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권,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 주민 청원에 대한 수리 및 처리권 등

②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선출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
유형	광역 자치 단체장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 자치 단체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감독·징계권,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환부 및 재의 요구권(조례안 거부권) 등

❖ 규칙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 자치 단체장이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가리킨다.

❖ 조례안 거부권

지방 자치 단체장이 지방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 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지방 의회가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지방 자치 단체 사무 감사권 등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다면, 지방 자치 단체장은 조례안 거부권을 통해 지방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주민 참여 제도

(1)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 ①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②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③ 주민 소환 제도: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기 중에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하여 해임하는 제도

(2) 지방 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민 참여 제도

- ①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방 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② 주민 소송 제도: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나 지방 자치 단체장의 이행 조치 등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③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 ④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지방 자치 단체가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이나 제도, 시설 등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제도

개념 플러스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요건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역 자치 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기초 자치 단체장은 15% 이상,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의원 제외)은 당해 지방 의회 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 관리 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 자치 단체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 소환 투표 결과가 확정된다.

4.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권한의 불균형 •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 조정 곤란: 지역 이기주의, 갈등 조절 장치 미흡 • 지방 자치 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 • 지방 정치의 중앙 정치에의 종속,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 구축 • 지방 분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 강화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

개념 체크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중 ()은 집행 기관에 해당한다.
- ② 지방 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장은 ()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사업 제안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라고 한다.

정답

- ① 지방 자치 단체장
- ② 규칙
- ③ 주민 참여 예산 제도

Theme 1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교육감의 지위와 역할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 자치법)

- 제1조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제18조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 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 제19조 국가 행정 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 제24조 ①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 제24조의2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인 지방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 기관으로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다. 그러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치 사무와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여 일반적인 지방 자치 기관과 별도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학계가 정파적 분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감은 정당 소속인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Theme 2 지방 자치법 주요 개정 사항

- ▶ **지방 의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 권한을 지방 의회 의장에게 부여
 - 지방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 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
 - 지방 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겸직 금지 대상 구체화
- ▶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협력 회의 신설
 -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 지방 자치 단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조정 신청 가능
 -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주민 주권, 주민 참여 확대**
 -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장 선임 방법, 의회·단체장 등 기관 구성 형태 결정 가능
 - 지방 자치 단체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명시
 -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 청구에 대한 주민 참여 기준 완화
 - 지방 의회 의정 활동, 집행 기관 조직·재무 등 주요 지방 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
- ▶ **대도시 등의 특례 부여 기준 마련**: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 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군·구에 대해 특례 부여

지방 자치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2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지방 자치법은 그간 지방 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3020-0073]

01 (가), (나)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군수가 대다수 군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자, □□군 주민들이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하였다.
- (나) ○○시 주민들은 최근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 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정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다.

보기

- ㄱ. (가)에 나타난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기여한다.
- ㄴ. (나)에 나타난 제도는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 ㄷ. (나)에 나타난 제도는 (가)에 나타난 제도와 달리 국민 주권주의에 어긋난다.
- ㄹ. (가)에 나타난 제도와 (나)에 나타난 제도 모두 주민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74]

0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다양한 직업 이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등장하였다. ㉠○○도지사^에 도전하는 갑은 축구 선수 출신이며, 연극배우 을은 ○○도 ㉡△△시 의회 의원^에 도전한다. ㉢◇◇광역시 의회 의원^에 도전하는 소설가 병과 ◇◇광역시 ㉣□□구청장^에 출마하는 패션모델 정도 이목을 끌고 있다.

- ① ㉠은 지방 자치 사무에 관해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② ㉢은 지역의 각종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결산 승인권을 갖는다.
 ④ ㉡ 의원 선거는 ㉢ 의원 선거와 달리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출마할 수 있다.
 ⑤ ㉡은 집행 기관, ㉢은 의결 기관이다.

[23020-0075]

03 다음은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제118조 ① ㉠ 지방 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 제118조 ② ㉡ 지방 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보기

- ㄱ. ㉠과 중앙 정부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ㄴ. ㉡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ㄷ. ㉢은 ㉡과 달리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행사한다.
 ㄹ. ㉡의 의원과 ㉢은 모두 주민 소환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76]

0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 (나)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다) 주민이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① (가)는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직원의 임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② (나)에 따라 주민은 지방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다)는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에 해당한다.
 ⑤ (다)는 (나)와 달리 주민 자치에 해당한다.

[23020-0077]

1 다음 글과 관련된 지방 자치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악 지형이 많고 마을 간 거리가 멀며 각기 형성된 마을의 규모도 작아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불리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 지역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 지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학 차량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 ① 국가의 정책은 모든 지역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③ 중앙 정부의 하향식 정책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 ④ 지역 발전의 수준은 지역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에 비례한다.
- 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3020-0078]

2 다음 글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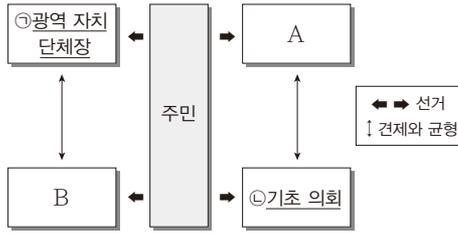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 자치는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먼저 지방 자치 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중앙 정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효율적으로 권한이 배분되지 못해 업무가 중복되거나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어긋나게 운영될 수 있다. 한편 지방 자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다 보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지방 자치 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②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 ③ 주민 참여 관련 법규와 제도를 명료화하고 주민의 참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 ⑤ 지역 주민들은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가 주민 의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23020-0079]

3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는 ㉠과 달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B에는 ㉠과 달리 비례 대표 의원이 존재한다.
- ③ A는 B와 달리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 ④ B의 구성원은 A와 달리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 ⑤ A는 의결 기관, B는 집행 기관이다.



[23020-0080]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게임 규칙

-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권한이 적힌 카드 9장을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펼쳐 놓는다.
- 갑, 을, 병은 각각 3장씩 카드를 가져간다. 단, 카드의 내용은 본인만 볼 수 있다.
- 3장의 카드가 모두 지방 의회의 권한이면 2점을 획득하고, 3장의 카드가 모두 지방 자치 단체장의 권한이면 1점을 획득한다.
- 1명이라도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종료 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우승한다.
- 갑, 을, 병 중 아무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1장을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갑에게 이동시킨다.
- 카드 이동 후 1명이라도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이 종료되며, 점수 획득자가 없으면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 카드 내용

카드 A	조례안 거부권	카드 F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권
카드 B	예산 결산 승인권	카드 G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
카드 C	예산의 심의·확정권	카드 H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권
카드 D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카드 I	각종 행정 사무 관리 및 집행권
카드 E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권	-	-

▶ 최초로 가져간 카드

구분	갑	을	병
카드	A, D, H	B, C, G	E, F, I

┌ 보기 ─┐

- ㄱ. 을이 카드 C를 이동시키고 카드 H를 받는다면, 을은 1점을 획득하여 우승한다.
- ㄴ. 갑이 카드 H를, 병이 카드 F를 이동시켰다면, 갑과 병은 각각 지방 자치 단체장 카드를 모으려는 의도이다.
- ㄷ. 갑이 카드 F를 받고 카드 H를 이동시키고, 을이 카드 G를 이동시키면, 병이 1점을 얻고 을이 우승한다.
- ㄹ. 갑이 카드 D를, 을이 카드 G를, 병이 카드 E를 이동시켰다면, 아무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 게임이 종료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갑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을국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리된 형태이다. 갑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에 B당, t+1 시기에 A당이며,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 시기, t+1 시기에 모두 b당이다. 갑국과 을국의 시기에 따른 정당별 의회 의석률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갑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을국의 정당별 의회 의석률(%)		
	A당	B당	C당	a당	b당	c당
t	45	30	25	15	65	20
t+1	55	25	20	55	30	15

- ① 갑국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한다.
- ②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③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갑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 ④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을국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⑤ t+1 시기에 비해 t 시기에 을국에서는 행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했을 것이다.

0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학년도 수능]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A에 (가) 을/를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A에 (나) 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① 재판 당사자의 (가)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없다.
- ②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A에 (가)를 제청할 수 있다.
- ③ (나)의 청구를 통해 법원은 국회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 ④ (나)의 청구인은 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 ⑤ A의 장(長)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A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 후, B의 장(長)과 C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이후 D에 의해 임명된 B의 장(長)은 갑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을을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는 E의 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한편, D를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C는 D에게 ○○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였다.

- ① A는 E의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② B의 장(長)은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C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정 조사권을 가진다.
- ④ 국무 위원은 C의 제청으로 A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 ⑤ D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C는 이 문서에 부서한다.

0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다.)

[2022학년도 수능]

〈지방 자치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주민 조례 발안 제도 개선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진 [A]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신설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B]에 일정 조건을 갖춘 주민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① ㉠은 ㉡과 달리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② A는 조례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③ A와 B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 ④ A는 B가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⑤ B는 A의 장(長)과 달리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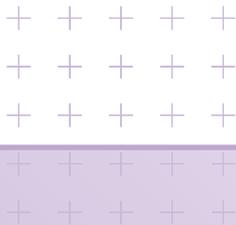
III

정치 과정과 참여

학습 요소

- 선거의 의의와 기능
- 민주 선거의 원칙
- 선거구 제도 및 대표 결정 방식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의 의의
-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

❗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민주 선거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선거구 제도 및 대표 결정 방식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을 학습하고,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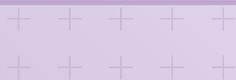
EBS 교재 연계 사례

2023학년도 수능 문항 2번

2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A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B의 공약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는 공직 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며, C는 자신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충돌하는 공약을 B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 ① A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② B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 ③ A와 달리 B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 ④ B와 달리 C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⑤ A와 C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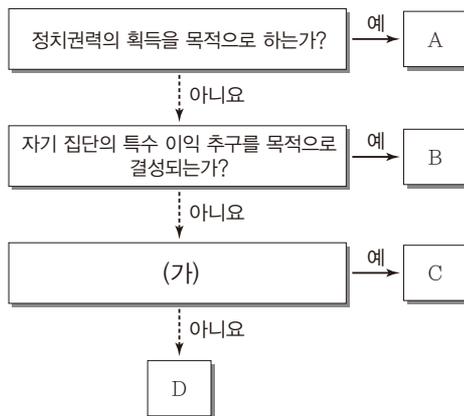


07 선거와 선거 제도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86쪽 5번

5 그림은 정치 참여 주체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임.)



- ① A는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이다.
- ② B는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 ③ A~D는 모두 투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이다.
- ④ (가)에는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C가 언론이라면, (가)에는 '개인이 독자 투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수능 2번 문항은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86쪽 5번 문항의 그림 자료를 제시문 형태로 바꾸어 출제하였다. 수능특강 문항에서는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을 흐름도 형태로 제시하고 언론까지 포함하였지만, 수능 문항에서는 흐름도의 내용을 제시문으로 바꾸었고, 정치 참여 집단을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으로 3개만 제시하였다. 수능 문항은 수능특강 문항보다 단순하게 물었기 때문에 수능특강 문항을 학습한 학생이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문제는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고 다양하게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계 교재의 문제를 풀어 보면서 다양한 형식의 문항에 익숙해지도록 학습해야 한다.

◎ 선거와 국민 투표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국민 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 또는 안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찬성과 반대를 하여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국민 주권

국민은 국가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 체크

- ()는 국민이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이다.
-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신임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을 통제한다.
-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공개되어 어느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 원칙에 위반되고,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쳐서 투표하게 되면 ()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1 선거
- 2 정치권력
- 3 비밀 선거, 직접 선거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1) **선거의 의미:** 국민이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2) 선거의 의의와 기능

- ① 정치 참여 수단 및 국민 주권 실현: 선거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임.
- ② 대표자 선출: 국민이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함.
- ③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선거를 통해 대표자(공직자)를 재신임하거나 교체함.
- ④ 정치권력에 정당성 부여: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구성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됨.
- ⑤ 여론 형성 및 반영: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시행되도록 함.
- ⑥ 주권 의식의 신장 및 정치 교육의 장(場) 제공: 선거 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제도와 구조를 배울 수 있음.

2. 민주 선거의 원칙

원칙	의미	반대 개념
보통 선거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	제한 선거
평등 선거	모든 유권자는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표의 등가성)는 원칙	차등 선거
직접 선거	유권자가 대리인(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투표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	간접 선거
비밀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공개 선거

자료 플러스 재외 국민의 선거권과 보통 선거 원칙

과거에는 주민 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록법상 주민 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2007년 6월 28일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주민 등록을 요건으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후 2009년 공직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첫 재외 선거가 실시되었다.

3. 선거 제도

(1) 선거구 제도

- ① 선거구의 의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 ② 선거구 제도의 유형

구분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 선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 선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관리가 용이함. •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음. •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유리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음. • 소수 정당 후보자들의 의회 진출에 불리함. •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과대 대표, 과소 대표의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 우려가 있음. •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함.

자료 플러스 선거구 간 인구 편차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커질수록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또한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완화할수록 과대 대표되는 지역과 과소 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 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를 확정하기 전에 인구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하 33%의 기준을 넘는 것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지역에 주민 등록을 마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2) 대표 결정 방식

- ① 다수 대표제: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다수 대표제로 나눌 수 있음.

구분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의미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 대표자로 당선되는 방식	과반수 득표와 같이 당선에 필요한 다수 득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 (예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장점	당선자 결정이 용이함.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음.
단점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을 수 있음.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 ② 비례 대표제: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과 의석률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음. •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유리한 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비례 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려움.

과대 대표와 과소 대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에 따라 과대 대표 또는 과소 대표되었다고 한다.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더 높을 경우 과대 대표되었다고 하며,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더 낮을 경우 과소 대표되었다고 한다.

결선 투표제

1차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상위 1위와 2위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선호 투표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투표 결과 1순위 표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1순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를 2순위로 택한 후보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개념 체크

- ① ()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고, ()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 ②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은 ()이고, 당선에 필요한 일정 비율의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은 ()이다.
- ③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할당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라고 한다.

정답

- 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 ② 단순(상대) 다수 대표제, 절대다수 대표제
- ③ 비례 대표제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각 정당이 선거 전에 비례 대표 후보자를 선정하고 순번을 명부에 적어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에 해당하는 순번까지 비례 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방식이다.

◎ 게리맨더링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였던 게리(Gerry, E.)가 자기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 샬러맨더(Salamander)를 닮아서 이후에 게리와 합성하여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개념 체크

- 1 대통령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로 한다.
- 2 국회 의원 선거에서 () 의원 선거와 ()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 3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가 적용되고 있다.
- 4 ()는 선거와 국민 투표에 대하여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정답

- 1 선거구
- 2 지역구, 비례 대표
- 3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 4 선거 관리 위원회

4.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1) 대통령 선거

- ① 5년마다 실시함.
- ②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함.
- ③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며 중임이 불가능함.

(2) 국회 의원 선거

- ① 4년마다 실시함.
- ②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 대표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
- ③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함.
- ④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3) 지방 선거

- ① 4년마다 실시함.
- ②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와 지방 의회 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
- ③ 선거별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

지방 자치 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광역), 시장·군수·구청장(기초)을 선출함. •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광역 의회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시·도 의원과 비례 대표 시·도 의원을 선출함. • 지역구 시·도 의원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됨. • 비례 대표 시·도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적용됨.
기초 의회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구 시·군·구 의원과 비례 대표 시·군·구 의원을 선출함. • 지역구 시·군·구 의원은 중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2명 이상 선출)가 적용됨. • 비례 대표 시·군·구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가 적용됨.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자치 단체 단위에서 교육감을 선출함. •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며, 정당 공천이 없고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함.

(4) 우리나라 선거 제도 및 선거 문화의 과제

- ① 소선거구제 및 단순 다수 대표제의 한계 보완 필요
 -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당선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기도 함.
 - 소수 정당의 국회(또는 지방 의회) 진출이 어려워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이익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의회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또는 정당 지지율) 간의 괴리가 나타나기도 함.
- ② 지역감정 조장, 후보자 간 흑색선전 등 잘못된 선거 문화 개선 필요
 -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함.
 - 언론을 활용하여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도 함.

(5)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

선거구 법정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제도 • 선거구를 특정 인물 또는 정당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확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선거 공영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제도 • 선거 운동 기획의 균등 보장, 선거 과열 방지,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 보장
선거 관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와 국민 투표에 대하여 공정하게 관리 •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

Theme 1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

- 거소 투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참여하는 투표이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선상 투표: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하는 투표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 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 시행 이전에 유권자 중 일부는 선거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제는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를 통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 시행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인종, 종교, 성별, 재산 정도, 교육 수준 등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한다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Theme 2 내 한 표의 가치 -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할까요?

공직 선거법

제25조(국회 의원 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 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 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중략)…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 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 범위(인구 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 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 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후략)…

우리나라는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국회 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① 1표 가치 동등의 원칙(1인 1표의 평등 선거 원칙은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각 1표가 실제로 등가(等價)의 가치를 가져야 하며, 이는 결국 각 선거구 간의 인구비에서 공정한 ‘배분성(配分性, apportionment)’을 유지할 때 가능하다는 원칙), ② 인접성(congruity)의 원칙(선거구 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결된 모양이어야 한다는 원칙), ③ 간결성(compactness)의 원칙(선거구 내 지역 간의 거리가 간결하게 밀집되어야 한다는 원칙), ④ 행정 편제 반영의 원칙(가능하면 행정적 편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의 인구는 몇 명일까? 지리적 환경, 주소지의 행정 편제, 구역의 넓이 등을 고려해 선거 구역을 나누는데, 이 경우에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10만 명이 모여서 1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고, 농촌 지역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은 6만 명이 모여서 1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선거구 간 유권자 수의 편차가 심한 경우 ‘불배분성(不配分性, malapportionment)’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1표의 가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1표의 가치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유권자 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3020-0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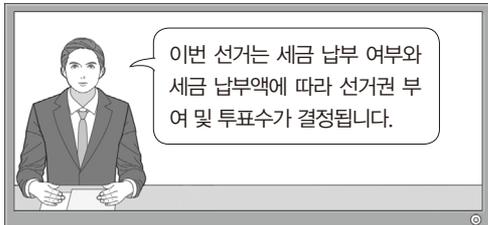
0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도시 국가가 아니라면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표자에게 일정한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통치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 당선되며, 이들이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 기구를 조직하게 된다.

- ① 대표자 선출 ② 정치권력 통제
- ③ 주권 의식 신장 ④ 정치 교육의 장(場) 제공
- ⑤ 여론 형성 및 반영

[23020-0082]

02 다음 뉴스를 보고 (가), (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위반된 민주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은?



(가)

(나)

- (가) (나)
- ① 보통 선거 비밀 선거
- ② 보통 선거 직접 선거
- ③ 보통 선거 평등 선거
- ④ 평등 선거 보통 선거
- ⑤ 평등 선거 비밀 선거

[23020-0083]

0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총 4명이며, 4개의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하였다. 표는 최근 실시된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 \ 선거구	가	나	다	라	정당 득표율(%)
A당				당선	35
B당		당선			25
C당	당선		당선		40

* 정당은 A당~C당만 존재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음.

보기

- ㄱ. ○○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ㄴ. A당은 과대 대표되었다.
- ㄷ. B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한다.
- ㄹ. C당은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84]

0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의 의회는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구마다 공천을 1명으로 제한한다. 표는 최근 실시된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표)

선거구 \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	25	20	10	45
나	60	25	10	5
다	15	30	50	5
라	40	15	20	25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고, 무효표는 없음.

- ① B당과 D당이 얻은 의석수는 동일하다.
- ② '가' 선거구에서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③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은 C당이다.
- ④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 ⑤ 정당별 공천 인원 제한이 없고 선거의 정당별 득표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 '나' 선거구에서 A당은 최대 2석을 확보할 수 있다.

[23020-0089]

1 (가)~(라)에 나타난 선거의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가)</p> <p>유권자가 되어 이번 지방 선거에 처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기분이 어때?</p> <p>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주민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뿌듯해.</p> 	<p>(나)</p> <p>○○ 지역 주민이 참여한 선거 결과 후보자 갑이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 지역 대표로 4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p> 
<p>(다) 당선 직후</p> <p>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진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p> 	<p>(라) 4년 후</p> <p>○○시장이 정책 추진을 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다시 지지하지 않았어.</p> <p>결국 이번 지방 선거 결과 대표자가 교체되었네.</p> 

보기

- ㄱ. (가)에는 선거 참여 과정에서 주권 의식을 높이는 기능이 나타나 있다.
- ㄴ. (나)에는 유권자에게 정치 교육의 장(場)을 제공하는 기능이 나타나 있다.
- ㄷ. (다)에는 시민의 요구와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 나타나 있다.
- ㄹ. (라)에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이 나타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090]

2 민주 선거의 원칙 A에 위반된 사례로 옳은 것은?

A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제한 없이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선거 가능 연령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그 나라의 역사, 전통과 문화, 국민의 의식 수준, 교육적 요소,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율성, 정치적·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자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다.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다.

- ① 인종과 종교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였다.
- ② 유권자의 대리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였다.
- ③ 선거구 간에 인구 편차가 허용 한계를 넘어섰다.
- ④ 투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 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23020-0091]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국의 의회는 총 6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선거구(선거구1, 선거구2, 선거구3)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국은 다음 의회 의원 선거에 각 선거구에 있는 각각의 동을 별도의 선거구로 재획정하여 총 6개의 선거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각각 1명씩의 의원을 선출하는 개편안을 고려하고 있다. 표는 최근 실시된 ○○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단위: 표)

구분		A당 후보 -가	A당 후보 -나	B당 후보 -가	B당 후보 -나	C당 후보	D당 후보	합계
선거구1	1-1동	35	15	0	10	30	10	100
	1-2동	25	5	30	15	20	5	100
선거구2	2-1동	0	25	5	30	20	20	100
	2-2동	5	35	20	5	10	25	100
선거구3	3-1동	25	35	5	0	20	15	100
	3-2동	20	15	30	10	0	25	100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정당별 1명만 공천할 수 있음.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권자는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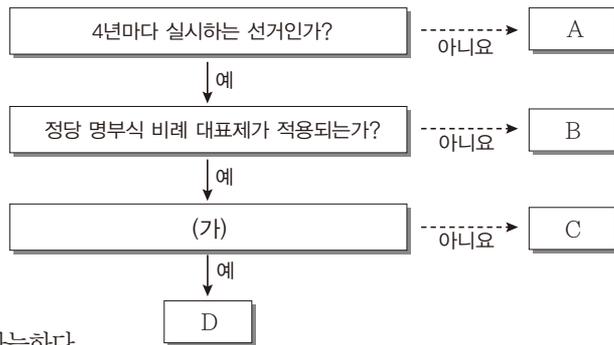
보기

- ㄱ. 현행은 소선거구제, 개편안은 중·대선거구제이다.
- ㄴ. 현행은 개편안 적용 시보다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 ㄷ. 개편안 적용 시 현행과 달리 A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 ㄹ. 개편안 적용 시 현행에 비해 B당은 유리하고, C당, D당은 불리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092]

4 그림은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 A~D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 중 하나임.)



- ① A의 당선자는 B의 당선자와 달리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② B는 A와 달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 ③ C, D는 A, B와 달리 지방 선거에 해당한다.
- ④ (가)에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는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인가?’가 들어가면, C는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2명 이상 선출한다.
- ⑤ (가)에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는가?’가 들어가면, D는 지방 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선출한다.

[23020-0093]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은 대통령 선거에 선호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1순위 후보자의 표를 1차 집계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1순위 최소 득표자는 탈락되고, 탈락된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다음 순위로 표시된 후보자에게 넘겨주어 2차 집계를 한다. 이 과정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국은 개편안에서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표는 최근 실시한 ◇◇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이다.

선호 순위 \ 득표수(표)	300	200	1,000	1,200	600	700	400	300	500	600	400	1,300
1순위	갑	갑	갑	갑	갑	갑	을	을	을	을	을	을
2순위	을	을	병	병	정	정	갑	갑	병	병	정	정
3순위	병	정	을	정	을	병	병	정	갑	정	갑	병
4순위	정	병	정	을	병	을	정	병	정	갑	병	갑

선호 순위 \ 득표수(표)	300	200	400	300	100	300	100	100	300	100	100	200
1순위	병	병	병	병	병	병	정	정	정	정	정	정
2순위	갑	갑	을	을	정	정	갑	갑	을	을	병	병
3순위	을	정	갑	정	갑	을	을	병	갑	병	갑	을
4순위	정	을	정	갑	을	갑	병	을	병	갑	을	갑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순위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함.

보기

- ㄱ. 최근 실시한 선거는 2차 집계에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 ㄴ. 최근 실시한 선거는 개편안보다 유권자의 총투표 횟수가 많다.
- ㄷ. 최근 실시한 선거의 당선자는 을, 개편안 적용 시 당선자는 갑이다.
- ㄹ. 최근 실시한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 개편안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20-0094]

6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우리나라 선거 관련 기관 및 제도를 설명해 봅시다.
 갑: 독립된 헌법 기관인 A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을: 임의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법률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병: 재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세 명 모두 옳게 설명하였습니다.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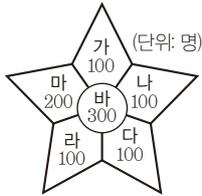
- ㄱ. A는 선거와 국민 투표 관리 외에 정당에 관한 사무도 관장한다.
- ㄴ. B는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기여한다.
- ㄷ. C는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에 기여한다.
- ㄹ. A, B는 C와 달리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8]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의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 6명, 비례 대표 의원 9명으로 총 15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를 1명씩 선출하며,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지역의 정당 투표 득표를 합친 이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국은 총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의 선거구 및 유권자 수〉



〈개편안〉

기존의 6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재획정하며, 3개의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명씩 선출한다. 하나의 선거구 유권자 수가 다른 선거구 유권자 수의 2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구 '가'와 '라'를 포함하는 통합은 행정적 편제의 경계로 제한된다. 지역구 후보는 정당별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변함이 없다.

표는 최근 ☆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 선거 투표 결과〉 (단위: 표)

선거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		30	40	10	20
나		20	10	30	40
다		30	40	20	10
라		10	40	30	20
마		80	30	70	20
바		120	20	60	100

〈비례 대표 의원 선거 투표 결과〉 (단위: %)

선거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가		40	20	30	10
나		30	10	40	20
다		30	10	40	20
라		70	0	20	10
마		15	85	0	0
바		0	80	0	20

* 정당은 A당~D당만 존재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없음.

**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으며,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함.

[23020-0095]

7 ☆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편안 적용 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은 총 2가지이다.
- ② 현행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서는 소선거구제이다.
- ③ 개편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 대표 결정 방식은 현행과 달리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 ④ 개편안 적용 시는 현행에 비해 선거구 간 유권자의 인구 편차가 커진다.
- ⑤ 현행, 개편안 모두 전국 단위가 아닌 각 선거구 단위로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23020-0096]

8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현행에서 A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1석 더 많다.
- ㄴ. 개편안은 현행과 달리 B당이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
- ㄷ. 개편안에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따라 C당의 지역구 의석은 최소 1석, 최대 2석을 얻을 수 있다.
- ㄹ. 현행, 개편안 모두 D당의 총의석수는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책 결정 기구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을 의미하며,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도 해당한다.

◎ 정치적 효능감

정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또는 기대감을 말한다.

◎ 대의 민주제와 시민의 직접 참여

대의 민주제는 시민의 대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를 의미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 민주제는 시민의 대표가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투표나 국민 발안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념 체크

- ()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입, 산출,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에는 국가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포함된다.
- 개인,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여론을 표출하는 과정을 ()이라 하고,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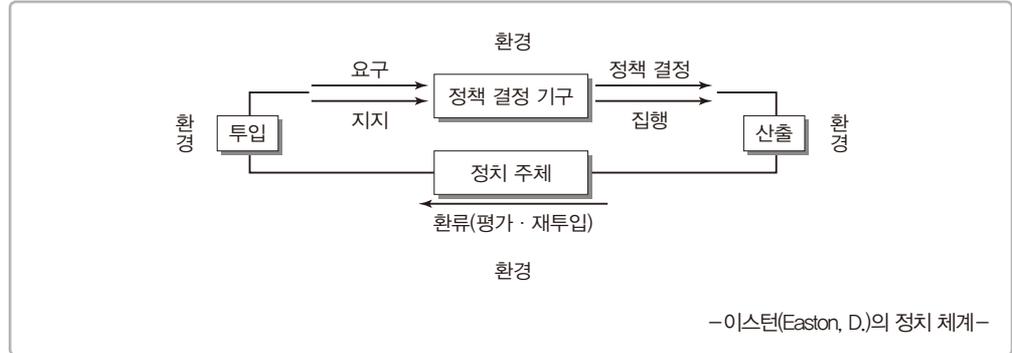
정답

- 정치 과정
- 정책 결정 기구
- 투입, 산출

1.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1) **정치 과정의 의미:**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2) **정치 과정의 체계**



- 투입:** 개인, 집단이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 지지 또는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
- 산출:**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 환류:**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수정·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과정
- 환경:** 경제·사회·문화·생태 등의 정치 외적 요소

자료 플러스 민주적 정치 과정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과정은 투입, 산출, 환류의 과정이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 의해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집단도 자유롭게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정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나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 과정의 모습이다.

(3) **시민의 정치 참여**

의미	시민들이 사회 문제나 국가 기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 •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남용을 방지함. • 정치적 의견의 반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며 직접적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됨.

(4)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 개인적 정치 참여와 집단적 정치 참여
 - 개인적 정치 참여

선거 및 투표 참여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투표에 참여

공무 담임권 행사	국가 시험 등에 응시하여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있음.
청원 및 의견 제출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하고 전화, 우편,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국가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의견 개진
독자 투고	언론사를 통하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기타	누리 소통망(SNS) 및 누리방(blog) 등에 의견 개진, 집회 및 시위, 서명 운동 등에 개인적으로 참여, 인터넷 기사 댓글 달기 등

- 집단적 정치 참여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집단의 활동에 참여
 -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하여 서명 운동을 전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
 - 개인적인 정치 참여 방식보다 지속성이 더 높은 편이며, 목적 달성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② 일회적 정치 참여와 지속적 정치 참여
 - 정치 참여의 양상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함.

자료 플러스 정보 사회와 시민의 정치 참여

정보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 투표, 전자 공청회,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기가 쉬워졌다. 정보 사회의 이러한 측면은 민주적 정치 과정을 활성화시켜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이러한 기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 ①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준수
- ②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 ③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 ④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

자료 플러스 현대의 정치적 무관심

현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선택에 관련시키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별다른 변화 없이 잘 되어 가리라고 믿는 낙관적인 입장, 그리고 방대한 정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자신의 행동 하나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 등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무관심의 요인으로 현대 정치 기구의 거대화·복잡화 현상, 현대 사회의 관료화, 정치에 대한 불신 등이 있다.

2.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 및 시민 참여

(1) 정당과 시민 참여

- ① 정당의 의미: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를 의미하고, 임명직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선택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를 의미한다.

☞ 청원권

국민이 국가 기관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의견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정강(政綱)

'정치적 강령'의 줄임말로, 정당이 내세운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한다.

개념 체크

- ①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 ②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집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 ③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 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정답

- ① 개인적
- ② 집단적
- ③ 정강

공천(公薦)

공공성을 갖는 단체인 정당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치 사회화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적 가치관이나 태도 등의 정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당정 협의회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개념 체크

- ()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정당의 기능 중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기능에 해당한다.
- 복수 정당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인 ()와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인 ()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 1 정당
- 2 정치적 충원
- 3 양당제, 다당제

② 정당의 특징

-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함.
-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익을 도모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함.
-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의 실천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을 짐.
-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

③ 정당의 기능

- 정치적 충원: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 추천, 대표자 배출, 정치 지도자 육성
- 여론 형성 및 조직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직화하여 정부에 전달
- 정치 사회화: 각종 강연회, 토론회, 대중 집회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 증진
- 정부와 의회의 매개: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
- 정부 감시: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 수행

④ 정당 제도의 유형

- 일당제(단일 정당제)

의미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만 존재하는 정당 제도
문제점	•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고 독재의 가능성 높음. •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가 곤란함.

- 복수 정당제

구분	양당제	다당제
의미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
장점	• 정국 안정에 기여 •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 다양한 국민의 의견 반영 • 소수의 이익 보호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넓음.
단점	•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곤란 •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 무시 우려 • 양당 간 대립 시 중재 어려움.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좁음.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우려 • 강력한 정책 추진 곤란 •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⑤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과 한계

-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방법
 - 정당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거나 정당 소속 후보자로 공직 선거에 출마
 - 정당의 정책 입안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
 -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 참여하여 일반 국민 자격으로 투표
 - 정당 주최의 공청회나 집회 등에 참여하여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 정당을 통한 시민 참여의 한계
 - 정당의 거대화·관료제화로 인한 문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나타나면서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역 연고주의 등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일반직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국민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함.

(2) 이익 집단과 시민 참여

- ① 이익 집단의 의미: 특정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으로, 압력 단체라고도 함.
- ② 이익 집단의 특징과 기능
 -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함.
 -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출 통로가 되어 대의제와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도 있음.
- ③ 이익 집단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 이익 집단에 가입하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음.
 - 이익 집단의 경제적 압력 행사로 사회 혼란이나 공익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이익 집단이 정치권력과 결탁할 경우 오히려 부정부패를 조장하기도 함.

(3) 시민 단체와 시민 참여

- ① 시민 단체의 의미: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
- ② 시민 단체의 특징과 기능
 -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추구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함.
 - 사회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대의제 및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③ 시민 단체를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음.
 - 시민 단체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낮을 경우 시민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개념 플러스 NGO와 NPO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라고 한다. 시민 단체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선 사업, 구호 활동 등을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구)라고도 한다.

(4) 언론과 시민 참여

- ① 언론의 의미: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을 하는 주체
- ② 언론의 특징과 기능
 - 공공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생각이 모이고 공유되는 사회의 공기(公器)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줌.
 -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및 감시를 함.
 -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특정 사건이나 쟁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거나 여론을 형성함.
- ③ 언론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점과 한계
 - 언론의 구성원이 되어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음(예) 기자, PD 등).
 - 언론을 활용하여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음(예) 독자 투고, 제보 등).
 - 언론이 사유화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거나 정치권력과 결탁한 경우 민주주의 실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함.
 -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 →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수용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비영리성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공기(公器)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물건으로서, 널리 일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을 말한다.

알 권리

국민이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권리로서, 대중 매체를 통해 타인의 의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국민 각자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념 체크

- ① ()은 특정한 이해관계나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을 의미한다.
- ② ()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 ③ 대중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을 하는 주체를 ()이라고 한다.

정답

- ① 이익 집단
- ② 시민 단체
- ③ 언론

Theme 1 정책 결정 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투입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의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투입(input)이라고 하고, 정책 결정 기구를 여과(濾過)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이 되어 그것이 집행되는 것을 산출(output)이라고 한다. 정책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정책 결정 기구를 통해 행해진다. 이러한 정책 결정 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투입에는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가 있다. 투입에서의 요구와 지지는 다양한 정보를 정책 결정 기구에 제공해 주고 정책 결정 기구가 이에 반응하여 활동하게 한다. 요구란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망이다. 그런데 정책 결정 기구를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구의 투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요구는 그 속에서부터 결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료에 불과하다. 지지가 없다면 요구는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며, 목표를 둘러싼 충돌도 조정되기 힘들 것이다. 즉 어떤 사회층의 요구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하나의 정책으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투입에서 요구와 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요구로서 나타난 것이라 해도 정책 결정 기구를 통과하는 동안 변형되어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정책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과 사회 집단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비판력을 갖는 경우에 처음의 요구와 결과로서의 정책을 서로 대조하는 과정에서 환류(feedback)가 행해진다.

Theme 2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의 방법은 다양하다. 또한 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은 시민의 정치 참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은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23020-0097]

0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간추린 뉴스

- ㉠ 국회, ◇◇ 법률안 등 25건 본회의 의결
- ㉡ △△ 시민 단체, 환경 정책 제안 포럼 개최
- ㉢ 교육부, □□ 교육 정책 올해부터 시행
- ㉣ ☆☆☆ 피해자, 청원을 통해 ○○법 제정 요구
- ㉤ ★★ 관련 전문가 인터뷰, ★★ 정책 분석

보기

- ㄱ. ㉠, ㉣은 정책 결정 기구이다.
- ㄴ.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ㄷ.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ㄹ. ㉤은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098]

02 정치 참여 사례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갑은 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 (나) 을은 △△ 관련 이익 집단의 구성원으로 △△ 정책 추진 협회에 참여하였다.
- (다) 병은 ○○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정당 활동에 매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라) 정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로 투표를 하였다.

- ① (가)는 공무 담임권 행사에 해당한다.
- ② (나)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 ③ (가)는 (다)에 비해 정치 참여의 지속성이 높다.
- ④ (나)는 (라)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⑤ (라)는 (다)와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23020-0099]

03 정당 제도 (가), (나)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은 복수 정당제 중 t대는 (가), t+1대는 (나) 이/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당 제도 (가) 와/과 (나) 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t대>

A당
160석

B당
140석

<t+1대>

A당
110석

B당
80석

D당
50석

C당
60석

* 갑국의 의회 의원은 총 300명임.

보기

- 갑: (가)는 (나)에 비해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렵습니다.
- 을: (가)는 (나)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의 이익이 무시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 병: (나)는 (가)에 비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합니다.
- 정: (나)는 (가)에 비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 ① 갑, 정
- ② 을, 병
- ③ 병, 정
- ④ 갑, 을, 병
- ⑤ 갑, 을, 정

[230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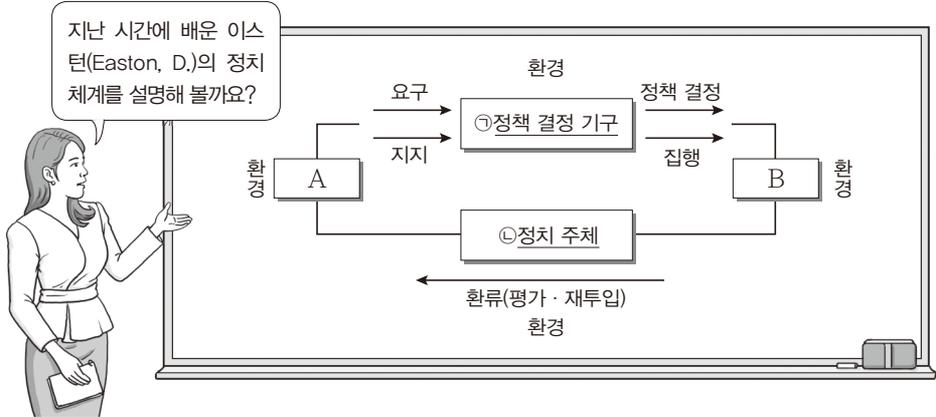
04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정치 참여 집단 A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며, B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특수 이익 실현을 위해 결성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C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집단입니다.

- ① A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② B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③ C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A, B는 C와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 ⑤ A, C는 B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한다.

[23020-0101]

1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갑: ㉠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포함됩니다.

을: ㉡은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 모두 해당됩니다.

병: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은 A에 해당됩니다.

정: 국가 기관에 요구 사항을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는 B에 해당됩니다.

- ① 갑, 을 ② 갑, 정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23020-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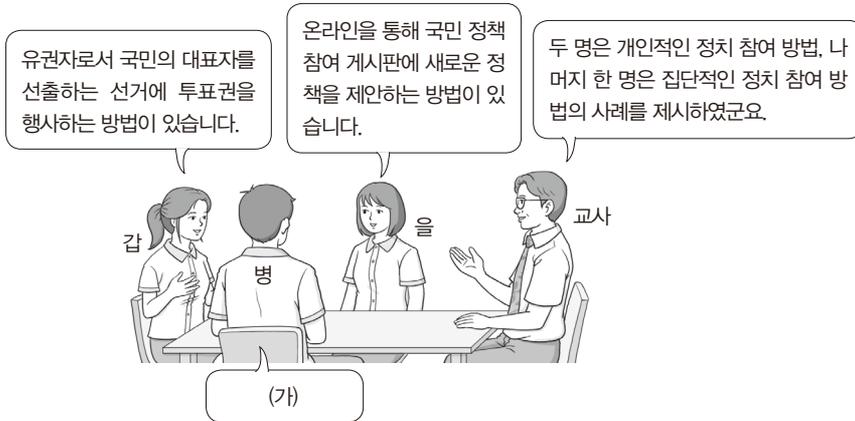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생 갑은 피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정당에서는 기자 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이 피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선·지방 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투표자 226명 중 찬성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었다. 피선거권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이에 대한 정치 관계법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였다. 한편, 공직 선거법 개정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 ① ㉠은 정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은 ㉢과 달리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③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④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⑤ ㉥에 대한 환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23020-0103]

3 그림은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한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을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② 을은 갑과 달리 지속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③ 갑은 개인적인 정치 참여, 을은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④ (가)에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23020-0104]

4 밑줄 친 ㉠~㉣에 나타난 정당의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정당			
공지 사항	소식	정책 제안	의견 수렴
㉠ <u>환경 관련 정책 의견 수렴</u> 우리 정당은 정책 제안 게시판을 통하여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복지 정책 이해> 강연회 □□ 정당 주관, '복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 복지 전문가를 모시고 ☆월 ☆일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정당			
공지 사항	소식	정책 제안	의견 수렴
㉢ <u>국회 의원 선거에서 최다 의석 확보</u> 우리 정당은 제○○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로 역대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였다.			
㉣ <u>당정 협의회 개최</u> 우리 정당은 △월 △일 정부와 무역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기

ㄱ. ㉠으로부터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ㄴ. ㉠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진하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ㄷ. ㉢으로부터 대표자를 배출하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ㄹ. ㉣로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20-0105]

5 정당 제도의 유형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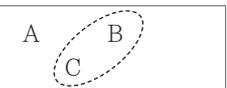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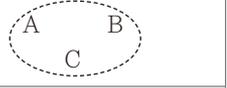
정당 제도는 비경쟁적 정당 제도인 A와 경쟁적 정당 제도인 B, C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B는 반드시 두 개의 정당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주요 정당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무시할 만한 것이며, 주요 두 정당이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경우이다. 반면, C는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한다.

- ① A, B는 복수 정당제, C는 일당제이다.
- ② A는 C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③ B는 A에 비해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어렵고 독재 가능성이 높다.
- ④ C는 B에 비해 의원 내각제에서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 ⑤ B는 A, C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23020-0106]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표는 각 질문으로 정치 참여 집단 A~C를 구분한 후, ‘예’, ‘아니요’ 중 같은 답변에 해당하는 집단끼리 묶은 것이다.

[질문 1] 특수 이익보다 공익 추구를 우선시하는가?	
[질문 2]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가)	
[질문 3]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 ① A는 B와 달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B는 C와 달리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③ C는 A와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④ (가)에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23020-0107]

7 그림은 갑~병의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언론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 ②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기여한다.
- ③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 ④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갑, 을의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
- ⑤ 갑, 을, 병의 정치 참여 방법은 모두 시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준다.

[23020-0108]

8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임.)

△△시에서는 주민들의 복지와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 업체와 ◇◇ 공원 옆에 편의 시설을 운영하는 계약을 맺어 운영해 왔다. 이에 환경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A는 환경이라는 공익을 위해 ○○ 업체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하였다. 이후 대중 매체를 통해 A가 ○○ 업체의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기존 편의 시설이 철거될 것이라는 여론이 B에 의해 형성되자, ○○ 업체 사업에 참여한 상인회로 이루어진 C는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어 △△시에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 선거에 △△시장 후보자를 공천하는 D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시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공약으로 낼 것이라고 한다.

- ① A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 ② D는 정강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 ③ A는 B와 달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 ④ B는 C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C는 D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갑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 시민 단체는 정부에 환경 관련 ㉡정책안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제안된 정책안을 반영하여 수립된 ㉢□□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시행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평가가 나타났다. 이후 ○○ 시민 단체는 시민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보완된 정책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 정책이 수정·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 ㉡과 달리 ㉢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 ㉢ ㉢과 달리 ㉣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치 외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 ㉣ 언론은 정치 과정에서 ㉤에 참여할 수 없다.
- ㉤ ㉤과 달리 ㉥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0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22학년도 수능]



교사

동물 보호를 위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을 발표해 보세요.

국회 의원 선거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자에게 투표했어요.



국민 참여 입법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요.



동물 보호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함께 거리 홍보 활동을 했어요. 그 후에 국회 전자 청원 시스템에 ㉣○○법 개정 청원서를 작성했고,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어요.



보기

- ㄱ. ㉠은 ㉡과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ㄴ. ㉠은 ㉢에 비해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ㄷ. ㉠은 ㉣과 달리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ㄹ. ㉢은 ㉠과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3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A는 B, C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A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B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 ① A는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B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적 특성으로 가진다.
- ③ A와 달리 C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④ B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 ⑤ A와 달리 B, C는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0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2022학년도 수능]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6인과 비례 대표 의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표,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선거구1	50	60	50	10	30
선거구2	140	10	10	10	30
선거구3	60	30	20	70	20
선거구4	40	20	100	20	20
선거구5	20	60	50	40	30
선거구6	20	10	150	10	10
정당 투표 득표율	20	40	5	20	15

* 정당은 A~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현재의 의원 정수(定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의 경우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	선거구 1-2, 3-4, 5-6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원 선거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하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은 인정하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의원 정수는 늘어날 수 있다.

- ① 현행에서 A당은 총의석률이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더 높다.
- ② 현행에서 D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더 많다.
- ③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총의석수는 최소 2석, 최대 3석이다.
- ④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B당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하면 B당은 초과 의석을 얻게 된다.
- ⑤ A당의 경우 현행보다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E당의 경우 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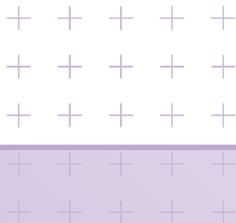
IV

개인 생활과 법

학습 요소

- 민법의 기본 원리
- 계약, 불법 행위
- 혼인, 이혼, 친자 관계
- 상속

①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민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민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불법 행위와 같은 재산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내용을 이해하고, 부부 관계, 친자 관계, 상속과 관련한 가족 관계의 법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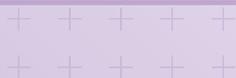
EBS 교재 연계 사례

2023학년도 수능 문항 7번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을이 에어컨 실외기 교체를 위해, 갑은 설치 업체 사장 병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의 직원 정이 공사 중 실외기를 떨어뜨려 갑의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한편 을의 종업원 A는 B가 주문한 음식과 상한 유제품을 포장하여 배달하였고, 이를 먹고 배달이 난 B가 을의 식당에서 항의하던 중 낡은 천장이 무너지며 을과 B가 다쳤다. 주문한 식사의 지연으로 화가 난 손님 C(17세)는 시비 끝에 A를 폭행하였고, 다친 A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C의 법정 대리인은 D이다.

- ① 을은 B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병은 갑과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갑은 B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병이 정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병은 갑에게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C가 A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A는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C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D에게 법정 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면 D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09 민법의 기초

10 재산 관계와 법

11 가족 관계와 법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09쪽 6번

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가구점 사장 갑은 종업원 을에게 고객 A의 사무실로 가구를 배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을은 배달 도중 실수로 자전거를 탄 B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가구가 일부 파손되었다.
- 병은 정이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 C가 담배를 피우려 배란다로 나왔다가 배란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져 다쳤다. 확인 결과 배란다 난간은 오래되어 부식이 진행 중이었다.

- ① A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갑의 B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 ③ 을이 B를 친 행위에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면, 갑과 을 모두 B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④ C의 손해에 대해 정이 아닌 병이 지는 배상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병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여 면책된다면, 정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수능 7번 문항은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09쪽 6번 문항의 자료와 선택지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및 관련 법적 지식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수능특강 문항의 제시문과 수능 문항의 제시문 형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등과 같은 내용 요소는 거의 일치한다.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묻는 문항은 매년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EBS 연계 교재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EBS 연계 교재에 제시된 다양한 문항들을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 금전 대차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공권력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의사 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개념 체크

- 1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 이라고 한다.
- 2 헌법, 형법은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에 해당한다.
- 3 민법은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계약, 불법 행위 등과 같은 ()를 규율하고,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등과 같은 ()를 규율한다.

정답

- 1 사법(私法)
- 2 공법
- 3 재산 관계, 가족 관계

1. 민법의 의미와 기능

(1) 민법의 의미

- ① 의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私法)
- ② 사법으로서의 민법: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면 민법은 사법에 해당

구분	사법(私法)	공법(公法)
의미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과 국가 기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적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은 A와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운송업자 을은 B에게 운송물 멸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경찰관 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범죄 혐의자를 연행하였다.
종류	민법, 상법 등	헌법, 형법 등

③ 민법의 규율 대상: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등 사적 법률관계 전반

구분	재산 관계	가족 관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 재산권의 종류, 계약의 종류와 내용,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손해 배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나 자녀 등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친족 관계와 상속 관계) • 혼인, 이혼, 친권, 유언, 상속 등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은 자신의 땅을 A에게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을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인 병(18세)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여자 친구(20세)와 혼인하였다. • 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자 상속이 이루어졌다.

(2) 민법의 기능

- ① 재산 관계의 규율: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계약, 불법 행위 등을 규정 →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합리적 조정
- ② 가족 관계의 규율: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 → 가족,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
- ③ 법의 일반 원칙 제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 규정 → 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자료 플러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민법 제2조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행사가 있고,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자신이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권리 행사가 오직 상대방을 해하거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행사가 제한될 뿐이다.

2. 근대 민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1)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 (2)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함.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 개인 간의 법률관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함.
과실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 자신의 행동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함.

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1) 수정 배경

- 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9세기 말경부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 발생
- ②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법 적용의 문제점: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2)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접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함.
계약 공정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함.
무과실 책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 •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무과실 책임)**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①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조항이다. 대법원은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 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피해자가 원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따라서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인자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고의와 과실

고의란 자기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무과실) 제조업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개념 체크

- ①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 이다.
-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 이라고도 한다.
- ③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 이다.

정답

- ①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② 자기 책임의 원칙
- ③ 계약 공정성의 원칙

Theme 1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갑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자기 땅에 허가를 받지 않고 별장을 지었다. 그러자 관할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별장을 철거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갑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철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갑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 계획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담당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담당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갑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은 토지 재산권에 내재하는 본래적인 내용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마땅히 참아야 하는 일종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으로 별장을 지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따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시민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입헌주의 헌법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재산권이 규정됐다. 우리 헌법 역시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개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이 재산권을 가진다고 해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그 권리자에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의무를 지운다. 그래서 재산권도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보장된다. 근대 초기에는 재산권이 신성불가침한 자연권으로서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 경제 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재산권의 배타성·절대성은 오늘날에 이르러 힘을 잃고 소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로 바뀌었다. 갑이 땅을 사서 소유하고 그 위에 별장을 건축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Theme 2 과실 책임의 원칙과 무과실 책임의 원칙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개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주었을 때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토양 환경 보전법 제10조의3(토양 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등) ① 토양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 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 침해로 인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 관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법 중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환경 정책 기본법(제44조), 유류 오염 손해 배상 보장법(제5조), 원자력 손해 배상법(제3조), 광업법(제75조) 등이다. 무과실 책임은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

[23020-0109]

0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 즉 국가 또는 공공 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는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이며, ㉠ 등이 A에 해당한다. B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즉 사인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며, ㉡ 등이 B에 해당한다.

- ① B는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은 A가 아닌 B에 의해 규율된다.
- ③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B가 아닌 A에 의해 규율된다.
- ④ 헌법은 A, B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최고법이다.
- ⑤ ㉠에 ‘형법’, ㉡에 ‘민법’이 들어갈 수 있다.

[23020-0110]

0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 민법은 제1편 총칙을 포함하여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2편과 제3편은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계약, 불법 행위 등과 같은 ㉡ 재산 관계를 규율하고, 제4편과 제5편은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 가족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민법에는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규정되어 있어 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을 제시한다.

- ① ㉠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이 가해진다.
- ② ‘미성년자 갑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하여 갑의 부모가 손해 배상을 해 준 것’은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③ ‘을과 을의 배우자가 병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④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은 ㉣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 ⑤ 개인이 소유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에 따라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23020-0111]

03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원칙
B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C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보기

- ㄱ. A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ㄴ. B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다.
- ㄷ. C는 현대 사회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ㄹ. A~C는 모두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12]

04 다음 법률 조항은 서로 다른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토양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 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기

- ㄱ. (가)는 사회적 강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ㄴ. ‘제조물 책임’,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나)가 아닌 (가)가 반영된 것이다.
- ㄷ. (가)는 현대 사회에서 (나)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 ㄹ.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13]

05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개인은 계약 체결 여부 결정, 체결 당사자 결정, 계약 내용 결정 등에 대해 누구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
B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정한 계약 이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보기

- ㄱ. A는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 ㄴ. B에 의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다.
- ㄷ. A는 B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ㄹ. B는 A와 달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14]

06 민법의 기본 원칙 (가)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갑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별장을 지었다. 그러자 관할 구청장은 별장을 철거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갑은 철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갑은 소송 진행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 계획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갑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의 설정에 의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가)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참아야 하는 일종의 의무라고 보았다.

- ①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개인의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④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⑤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는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23020-0115]

07 (가), (나)에 들어갈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 A 기관은 ○○ 회사가 소비자와 맺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가)에 근거하여 몇 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바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 갑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을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을과 부딪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선형 자전거 운전자인 을이 유턴할 경우에는 후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살피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나)에 따라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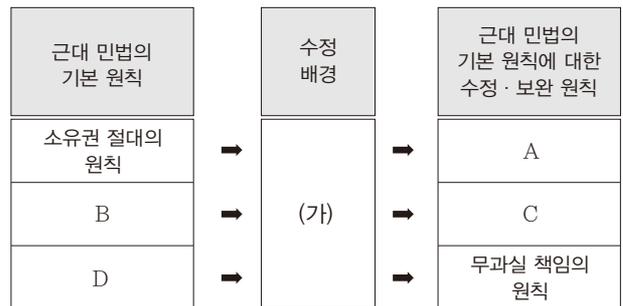
(가)

(나)

- ①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② 계약 자유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 ③ 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④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⑤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23020-0116]

08 그림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보완 원칙 및 수정 배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을 상대적 권리로 인식한다.
- ② B에 따라 개인 간 법률관계 형성에 국가 개입이 인정된다.
- ③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C에 따라 무효가 된다.
- ④ D는 개인이 불합리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⑤ (가)에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 발생’이 들어갈 수 있다.

[23020-0117]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법, B법은 각각 공법, 사법 중 하나임.)

교사: A법과 B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법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B법은 개인과 국가 기관 간 등의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을: 헌법, 형법은 A법에 해당합니다.

병: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B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정: (가)

교사: ㉠1명만 제외하고 모두 옳게 답했어요.

보기

ㄱ. ㉠은 '병'이다.

ㄴ. (가)에 'A법에는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이 해당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B법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ㄹ. A법은 B법과 달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18]

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토지 안에 있는 도로가 일반 대중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지방 자치 단체에 ㉠도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갑이 ㉡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대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公路)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갑은 ㉡시를 상대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해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 사용료와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시는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 인도일까지 토지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기

ㄱ.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ㄴ. ㉡으로 인해 갑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ㄷ.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19]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는 A, B, C가 있다. A에 따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나 다른 개인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한다. 사유 재산권 중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내세워 (가) (이)라고도 한다. B에 따라 개인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나) (이)라고도 한다. C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자신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다) (이)라고도 한다.

- ① (가)에 ‘소유권 절대 원칙’, (나)에 ‘계약 자유 원칙’이 들어갈 수 있다.
- ② (다)로 인해 개인은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A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 수익, 처분해야 한다.
- ④ B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된다.
- ⑤ C는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23020-0120]

4 밑줄 친 ㉠, ㉡의 공통적 근거가 된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 법원은 가수 지망생 갑이 ○○ 연에 기획사와 맺은 전속 계약의 내용 중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 기간 예상 이익의 2배를 배상하고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선풍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이므로 ㉠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공정 거래 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A 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약관 중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의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 무효라고 판단했다.

- ①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 ②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④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개인의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23020-0121]

5 다음 자료는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대 민법의 기본 이념: (가)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A, B, C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수정 배경: (나)

•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원칙: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수정·보완됨.

- ① (가)에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됨.’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A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면, D에 따라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계약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
- ④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이 E에 따른다면, B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⑤ C가 ‘소유권 절대적 원칙’이면, 개인의 소유권은 C에 따른 경우 절대적 권리, F에 따른 경우 상대적 권리를 의미한다.

[23020-0122]

6 다음 사례에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갑은 ○○ 건설 회사가 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을 근거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 건설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소음과 진동이 갑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 건설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소음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게 맞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 건설 회사는 터널 공사의 주된 사업자로서 환경 정책 기본법 제7조에서 정한 환경 오염의 원인자에 해당한다며 공사 소음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① 개인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 ②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④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청약과 승낙

청약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확정적 의사 표시이며, 승낙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수령자의 의사 표시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의사 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판단함으로써 법률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 유아(幼兒)나 만취 등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의사 능력이 결여된 자를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

◎ 강행 법규

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개념 체크

- 1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 이라고 한다.
- 2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 가 발생한다.
- 3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 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 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정답

- 1 계약
- 2 의무
- 3 청약, 승낙

1. 계약의 이해

(1) 계약의 의미와 효력

의미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 예) 부동산 매매, 주택 임대차,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 등
효력	•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 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개념 플러스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에겐 이행 불능, 이행 지체 등이 있으며,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법률에 따라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의 성립

- ① 성립 시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 ② 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강행 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자료 플러스 계약의 성립

(가) 갑은 을에게 1년 후에 갑을 테니 1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전화로 물었고, 을은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나) 갑과 을은 전화 통화를 한 다음 날에 만나 금전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 따라서 (가)에서 갑의 청약, 을의 승낙이 합치되었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나)에서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확실시 하는 것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계약서 작성: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자료 플러스 계약서의 사례

〈금전 차용 계약서〉

1. 채권자: 갑 / 채무자: 을
2. 금액: 1억 원
3. 이자: 연 5%
4. 변제 기일: 2023. 8. 1.
... (중략) ...

2021년 8월 1일

채권자 갑 (갑) 채무자 을 (을)

그림은 갑과 을의 금전 거래에 관한 계약서이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연 5%의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고, 을은 갑에게 2023년 8월 1일에 갚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을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해야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계약

(1)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자
- ②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행위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 ③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예 용돈)의 처분 행위
 -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등

(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① 필요성: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②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
 - 확답을 촉구할 권리: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가 아닐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
 - 철회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해당 거래에 대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단,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만 해당됨).
- ③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혹은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됨.

자료 플러스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 민법 제17조 ① 제한 능력이자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7조의 제한 능력이자 속임수를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신분증 위조,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조 등)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7조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 행위 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자격을 의미한다. 행위 능력 여부의 판단은 연령(19세) 또는 후견 개시의 심판과 같이 획일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 법정 대리인

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을 때는 미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가 있는 뒤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다.

☞ 철회

아직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거나,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의사 표시를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이다.

개념 체크

- 1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 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3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어야 한다.

정답

- 1 동의
- 2 법정 대리인
- 3 철회권

※ 추정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위법성 조각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정당방위) 또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긴급 피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배상 책임이 없다.

※ 상당 인과 관계

일반인의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비추어 A라는 행위로부터 B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개연성이 있다면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때 상당성의 기준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성이다.

※ 심신 상실자

심한 정신 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념 체크

- 1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이 있어야 한다.
- 2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 손해도 포함된다.
- 3 어린이나 심신 상실자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중 ()이 없다.

정답

- 1 과실
- 2 정신적
- 3 책임 능력

3. 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

(1) 불법 행위

① 의미: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

예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 등

②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가해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야 함.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위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질서 전체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추정됨. •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 등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손해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정신적 손해도 포함됨.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책임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법률상 책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 능력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 • 어린이나 심신 상실자 등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봄.

자료 플러스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 (가)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친 경우 법원은 대여 업체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 (나) 자장면을 빨리 배달해 달라는 독촉 전화를 받고 종업원이 급히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주문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다) 밤중에 집에 침입한 강도가 흉기로 위협하자 막대기를 휘둘러 강도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까?
- (라) 어린이(6세)가 돌멩이를 남의 자동차에 던져서 손해를 입혔을 때, 어린이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일까?

- (가) 법원은 고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친 사안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는 고객에게 안전 수칙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업무상 고지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고객이 다친 것은 고객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의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도 없다고 보았다.
- (나) 종업원이 고객의 독촉을 받고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독촉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객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 (다) 강도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 즉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도 없다.
- (라) 6세의 어린이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어린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인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특수 불법 행위

- ① 의미: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는 불법 행위
- ② 유형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사례] 마트에 간 갑이 한눈을 판 사이 갑의 아들 A(6세)가 을의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사용자의 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사례] 갑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 을(20세)이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지나가는 행인 병을 치어 부상을 입힌 경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짐. • [사례]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을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당 창틀이 떨어져 지나가던 병이 다친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인 을이 책임을 지지만, 을이 건물 외벽 관리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소유자 갑이 무과실 책임을 짐.
동물의 점유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됨. • [사례]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갑(25세)이 개의 목줄을 놓쳐 개가 을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갑의 불법 행위 책임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누구의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에 참여한 자들이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사례 1] 갑(19세), 을(20세), 병(18세)이 공터에 세워 놓은 A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파손한 경우 갑, 을, 병의 불법 행위 책임 • [사례 2] 혼내 줄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갑(38세)의 부탁을 받은 을(30세)이 갑이 A를 폭행하는 동안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본 경우 갑과 을의 불법 행위 책임

(3) 손해 배상

- ① 의미: 발생한 손해를 전보(填補)해 주는 것
- ② 손해 배상 방식
 - 금전 배상이 원칙이며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함.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개념 플러스 정신적 손해(위자료)

불법 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 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된다.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는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이외에 정조의 침해, 사생활의 침해, 소음·진동에 의한 일상생활 방해,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약혼의 해제, 혼인의 무효·취소,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사실혼의 파탄, 입양의 무효·취소, 재판상 파양 등의 원인이 포함된다.

❖ **공작물**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으로 건물, 담장, 굴뚝, 도로, 광고탑, 철탑, 창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점유자**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은 그 집의 점유자가 된다.

❖ **연대 책임**

두 사람 이상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서 연대 책임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 1인이 전부 책임을 지거나 가해자들이 나누어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념 체크

- ()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 1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

- 1 책임 능력
- 2 점유자
- 3 연대

Theme 1 무효와 취소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데 비해,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는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무효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으나, 취소는 취소권의 존속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고, 그 결과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게 된다. 그러나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서 무효와 취소는 같게 된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강행 법규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등이 있다. 한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다.

Theme 2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갑과 책임 능력이 없는 을은 아파트 옥상에서 장난으로 함께 돌을 던져 밑에 있던 병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위 사례에서 병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책임 능력이 있는 갑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병은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갑의 친권자인 부모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갑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친권자로서의 보호·교양 의무의 위반이 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관련 판례: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책임 능력이 없는 을의 경우	<p>을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병은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p>

[23020-0123]

01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기

- ㄱ.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하는 양 당사자의 합의'는 ㉠의 예이다.
- ㄴ. 계약을 체결하면 ㉡에게는 권리 또는 의무 중 하나만 발생한다.
- ㄷ. ㉢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의미한다.
- ㄹ. 계약 당사자의 ㉣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24]

02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	
(나)	갑은 을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고, 을은 이에 동의하였다.
↓	
(다)	갑과 을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라)	갑은 돈을 갚기로 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을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보기

- ㄱ. (가)에는 갑의 청약이 나타나 있다.
- ㄴ. (나)에는 을의 승낙이 나타나 있다.
- ㄷ. (다)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 ㄹ. (라)에서 을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25]

0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17세)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아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운동화를 판매업자 을로부터 구매하였으나 구매 당시 부모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 병(17세)은 고가의 태블릿 PC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판매업자 정으로부터 구매하였다.

- ① 갑은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갑의 부모는 운동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병은 태블릿 PC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병의 부모는 태블릿 PC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정은 태블릿 PC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3020-0126]

04 밑줄 친 '두 명'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옳은 것은?

교사: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관련한 법적 판단을 해보세요.
 갑: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을: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병: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이 성인으로 믿게 한 경우의 계약은 거래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인정돼요.
 정: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교사: 두 명의 법적 판단은 옳지만, 두 명의 법적 판단은 옳지 않아요.

-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 ④ 을, 정 ⑤ 병, 정

[23020-0127]

05 밑줄 친 ㉠, ㉡의 근거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법원은 고속 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도우려 갓길에 정차한 갑의 차로 인해 뒤이어 오던 차량에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구조가 시급히 필요한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아 갓길에 차를 정차한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법원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차량의 유리를 파손한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을은 행위 당시 중증 정신 장애를 갖고 있어 심신 상실의 상태였으므로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보기

- ㄱ. ㉠-갑의 가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ㄴ. ㉠-갑의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 ㄷ. ㉡-을은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 ㄹ. ㉡-을의 가해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28]

0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례
갑, 을, 병은 함께 불장난을 하다가 고의로 정 소유의 산에 있는 나무를 태웠다. 정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 갑, 을, 병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

구분	갑	을	병
미성년자입니까?	아니요	예	예
책임 능력이 있습니까?	예	예	아니요

- ① 정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은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정은 을의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④ 병의 감독 의무자는 정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정은 갑 또는 을에게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23020-0129]

0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C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C의 골프장 직원 D의 안내를 받으며 골프를 치고 있었다. 골프를 치던 도중 A가 친 공에 맞은 B는 A, C, D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B에게도 20%의 책임이 있지만, A는 직접적인 가해자이고, D는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C는 D의 사용자이므로 A, C, D 모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보기

- ㄱ. 법원은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ㄴ. B에게 20%의 책임이 있으므로 B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ㄷ. C는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 ㄹ. D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C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30]

0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어느 날 을 소유의 아파트 밑을 지나던 병은 을 소유의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병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자신은 세입자라며 집주인인 을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병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갑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고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보기

- ㄱ. 갑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
- ㄴ.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이다.
- ㄷ.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법원 판결은 바뀌었을 것이다.
- ㄹ. 병은 갑과 을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31]

1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5백만 원 빌려줄 수 있어? 1년 후에 갚을게.</p> <p>갑</p>	<p>그래. 내일 만나서 계약을 쓰자.</p> <p>을</p>	<p>금전 차용 계약서 1. 채권자 을, 채무자 갑 2. 금액 및 연 이자율: 5백만 원, 7% ...(중략)... 2022년 3월 22일</p> <p>갑 을</p>
(가) (나)		
(다) (라)		
<p>오늘 통장으로 5백만 원 입금 했어.</p> <p>을</p>	<p>고마워. 1년 후에 꼭 갚을게.</p> <p>갑</p>	<p>돈을 갚기로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돈 을 갚지 않니?</p> <p>을</p> <p>조금만 기다려 줘. 갚을게.</p> <p>갑</p>

보기

ㄱ. (가)에서 갑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 하였다.
 ㄴ. (나)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하였다.
 ㄷ. (다)에서 갑은 의무를 이행하고, 을은 권리를 행사하였다.
 ㄹ. (라)에서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132]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병은 모두 17세임.)

<p>갑, 을, 병은 각각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노트북을 노트북 판매업자 정으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p>		
<p>거래 당시 정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p>	<p>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 정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p>	<p>거래 당시 병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였고, 정은 병을 성년자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p>

- ①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을은 병과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의 부모는 을의 부모와 달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 병의 부모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정은 갑과의 계약, 병과의 계약 모두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3020-0133]

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무효와 취소 중 하나임.)

교사: A와 B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특정인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 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을: B가 가능한 행위는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병:

정: 속임수, 협박, 강요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B가 가능합니다.

교사: ㉠3명만 옳게 답했네요.

「 보기 」

ㄱ. ㉠은 '갑, 을, 병'이다.

ㄴ. (가)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A가 아니라 B가 가능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ㄷ. (가)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A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 들어갈 수 없다.

ㄹ. (가)에 'B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 B를 하면 소급하여 A가 됩니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34]

4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지 않은 답을 한 학생은?

회사에 다니는 A(30세)는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다가 잠시 다른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B가 운전하던 앞차가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를 멈추지 못해 앞차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이 훼손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된 B는 A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교사: A의 행위를 불법 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세요.

갑: B는 A의 행위로 차량이 훼손되고 상해를 입었으므로 A의 행위는 가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을: A가 앞차와 부딪친 것은 A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 A의 행위로 인해 B가 상해를 입고, B의 차량도 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 A의 행위와 B가 입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 사례에서 A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A가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보아, A는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20-0135]

5 다음 자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행 평가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내용을 1가지만 적으시오.

- 사례: 미성년자 A가 B의 차량에 고의로 돌을 던져 B의 차량을 훼손하였다.
- 학생 답안

학생	법적 판단 내용	결과
갑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B는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을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B는 A의 감독 의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병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B는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정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B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무	A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B는 A의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 옳은 법적 판단 내용, ×: 옳지 않은 법적 판단 내용)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3020-0136]

6 (가), (나)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을은 병과 병의 자녀 돌잔치를 위한 출장 뷔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에게 병의 자녀 돌잔치를 위한 음식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라고 하였다. 갑은 차량으로 이동 중 스마트폰을 잠시 보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정을 치어 다치게 하였다. 갑의 사고로 음식은 병의 자녀 돌잔치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정과 병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려고 한다. 정은 병과 달리 (가)을/를 물을 수 있는 반면에, 병은 정과 달리 (나)을/를 물을 수 있다.

[보기]

- ㄱ. (가)-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ㄴ. (가)-을에게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
 ㄷ. (나)-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ㄹ. (나)-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137]

7 다음 사례의 법원 판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을 소유의 건물에 있는 병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이용해 옆 건물로 나가던 중 추락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갑은 병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해당 발코니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으며, 이 하자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갑도 사고 당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다.

「 보기 」

- ㄱ. 을이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것이다.
- ㄴ. 병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 ㄷ. 병의 책임이 30%로 제한되는 것은 갑에게도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 ㄹ. 병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38]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전거를 타던 갑이 목줄 풀린 을의 멍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 주차된 병의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을과 병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사고는 개를 놓친 을과 불법 주차를 한 병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을과 병의 주장에 대해서도 갑이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했고, 개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을은 갑이 보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법원은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 ① 법원은 갑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과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 ② 법원은 을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③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였더라도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졌을 것이다.
- ④ 을과 병은 갑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을과 병이 갑에게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포함될 수 있다.

1. 부부간의 법률관계

(1) 혼인

- ① 의미: 남녀가 부부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는 가족법상의 합의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함.
- ② 혼인의 성립 요건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가 있을 것
실질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혼인 의사 합의 • 혼인의 장애 사유가 없을 것 1) 민법에 규정된 혼인 가능한 연령(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함. 2) 혼인 가능한 연령(18세)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일정 범위의 근친(8촌 이내의 혈족 등) 사이의 혼인이 아닐 것 4) 해당 혼인이 중혼(重婚)이 아니어야 함.

*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함.

③ 혼인의 법률 효과

- 친족 관계(배우자, 인척 관계)의 발생
- 부부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
- 부부 별산제 적용, 혼인 생활 비용의 공동 부담, 일상 가사 대리권 및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 성년 의제

개념 플러스 일상 가사 대리권

우리 민법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가리키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객관적 사정 및 주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식료품·연료·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방세·집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전기·수도·가스의 공급 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자녀의 양육비·교육비의 지급 등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한다. 금전 차용 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나 그렇지 않다면 제외된다.

개념 플러스 성년 의제

민법에서는 18세의 미성년자가 법률혼을 하면 그때부터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성년 의제’라고 한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스스로 아이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일단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성년으로 의제가 되면 그 후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 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년 의제는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법 이외의 공법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다.

(2) 이혼

- ① 의미: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

중혼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하여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 가사 채무 연대 책임

일상의 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결정하였더라도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개념 체크

- 1 사실혼과 달리 법률혼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인 ()를 한 상태의 혼인이다.
- 2 ()세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 3 법률혼으로 인해 배우자 및 () 관계가 발생한다.

정답

- 1 혼인 신고
- 2 18
- 3 인척

① 이혼 속려 기간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부부에게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②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③ 면접 교섭권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유지된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해당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 교섭권이라고 한다.

개념 체크

- 1 협의상 이혼 시 양육할 자녀 없는 부부는 ()의 이혼 속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2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를 한 때에 발생한다.
- 3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 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 ① 1개월
- ② 이혼 신고
- ③ 분할

② 유형

• 협의상 이혼

의미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이혼 사유에 제한이 없음.
절차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 속려 기간 →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신고
효력 발생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 발생

• 재판상 이혼

의미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시킴.
절차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 이혼 신고
이혼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부정(不貞)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효력 발생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 발생

③ 법적 효과

- 혼인에 의해 발생한 친족 관계(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소멸됨.
- 부부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야 함.
-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함.
-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가짐.
-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개념 플러스 이혼의 효과

이혼하면 ① 부부 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등의 의무가 소멸한다. ②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 관계가 소멸한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③ 부부 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하다.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重婚)이 되지 않는다. ④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된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 플러스 재산 분할 청구권

법률혼 부부 갑과 을은 결혼 이후 함께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모았다. 현재 모든 재산은 남편 갑의 명의로 되어 있다. 최근 갑의 부정행위로 다툼이 생겨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툼이 생겼다. 갑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므로 을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고 했고, 을은 갑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므로 갑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다. 따라서 갑과 을은 서로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1)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친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 •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며,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생모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와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됨.
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의제하는 제도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 입양된 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됨. • 일반 입양은 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 관계가 존속함. • 친양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특별한 경우(예) 갑의 어머니와 재혼을 한 자가 갑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 갑과 갑의 어머니 사이에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음)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됨.

자료 플러스 친양자 입양 신고서

양친	양부	양모
	정□□	박△△
친양자	김○○(12세)	
재판 확정 일자	2021년 5월 12일(◇◇ 가정 법원)	
친양자의 친생부모	부	모
	김◎◎	송◆◆

제시된 자료는 친양자 입양 신고서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법원은 2021년 5월 12일 김○○(12세)의 친양자 입양을 인용하였다. 이 신고서가 접수되면 김○○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김○○은 양부모인

정□□와 박△△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된다.

(2) 친권

의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
내용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함.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함.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 •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을 선고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친권 상실

앞으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 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 법원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지금까지는 13세 이상 자녀만 진술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나 심리학 전문가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미성년 자녀의 의견 진술을 돕는 제도도 신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1년 제정 이후 바뀌지 않은 가사 소송법을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했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 본(本)

‘본관’이라고도 하며, 통상적으로 시조의 출생지를 가리키나 어느 한 시대에 정착하였던 조상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진주 강 씨’라고 할 때, ‘진주’가 본이다.

❖ 거소 지정권

타인이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념 체크

- 1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를 ()라고 한다.
- 2 ()는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 3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이라고 한다.

정답

- 1 친생자
- 2 친양자
- 3 친권

◎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

자기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녀 등)을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 직계 존속은 자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부모, 조부모 등)이다.

◎ 방계 혈족

자신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한다. 상속인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에는 삼촌, 고모, 4촌 형제자매 등이 있다.

3. 유언과 상속

(1) 유언

- ① 의미: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언자가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
- ② 유언의 방법: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

개념 플러스 유언의 방법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의 전문, 주소, 내용, 이름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반드시 날인해야 함.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연월일 등을 구술하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의 유언을 공증인이 받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고 봉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급박한 상황에서 유언자의 유언을 증인이 받아 적고 확인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

(2) 상속

의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하여 타인(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상속 순위	① 혈족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함.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간에는 균등하게 상속함.
배우자 상속인	② 배우자 상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됨. •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액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음.
유류분 제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
상속 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개념 체크

- 1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하면 발생한다.
- 2 법정 상속 시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이다.
- 3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액에 ()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정답

- ① 사망
- ② 형제자매
- ③ 50%

자료 플러스 상속액 계산의 실제

갑은 질병으로 얼마 전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갑의 전 재산은 16억 원이고, 은행에서 빌린 채무가 2억 원이다. 유족으로는 갑의 아내 을, 입양한 아들 병, 결혼 뒤 이혼한 딸 정, 시골에 거주하는 노모 무가 있다.

갑의 법정 상속인은 아내 을, 아들 병, 딸 정이다. 갑의 어머니 무는 갑의 직계 존속으로서 2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갑의 전 재산은 16억 원이지만 채무가 2억 원이므로 상속 재산은 14억 원이다. 자녀 병과 정은 갑의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동순위의 상속인은 자연 혈족이나 법정 혈족, 이혼, 남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비율로 상속된다. 아내 을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액에 50%를 가산한다. 따라서 상속액은 을 6억 원, 병 4억 원, 정 4억 원이다.

Theme 1 사실혼과 법률혼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린 후에 혼인 신고를 미루고 함께 살고 있었다.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중에 갑은 을이 결혼식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에 갑은 을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갑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을과 헤어질 수 있을까? 또한 갑은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률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혼인이고,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 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부부간 상속권, 친족 관계 발생 등과 같은 내용이 제한된다. 또한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및 정조 의무를 부담하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법률혼 이혼 시와 마찬가지로 위자료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갑은 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heme 2 친양자 제도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 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년 개정 민법에는 양부모와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 양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舊)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舊)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 양자(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부르기도 한다.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908조의2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특히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이것이 친양자가 아닌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23020-0139]

01 밑줄 친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상태를 A라고 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B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A와 B의 효과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A와 B의 효과를 동일하게 인정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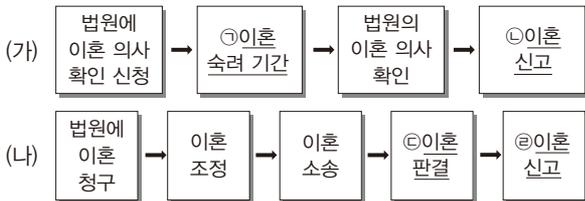
보기

- ㄱ. ㉠-배우자 간 상속권
- ㄴ. ㉠-재산 분할 청구권
- ㄷ. ㉡-친족 관계 발생
- ㄹ. ㉡-일상 가사 대리권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40]

02 그림은 이혼의 유형 (가), (나)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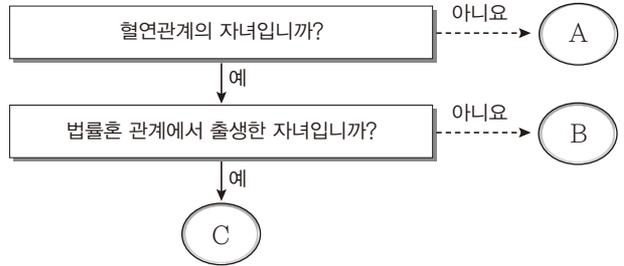
보기

- ㄱ. ㉠은 원칙적으로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다.
- ㄴ. (가)의 효력은 ㉡ 이후에 발생한다.
- ㄷ. (나)의 효력은 ㉣이 아닌 ㉢ 이후에 발생한다.
- ㄹ. (나)는 (가)와 달리 민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이혼 가능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141]

03 그림은 친생자와 양자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 친양자가 아닌 양자 중 하나임.)



보기

- ㄱ. A가 미성년자이면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 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B이다.
- ㄷ. C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 ㄹ.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A~C 모두 친생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142]

0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사: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A라고 합니다. A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보세요.
 갑: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을: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A의 행사자를 법원이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 법원의 신고로 부모의 A가 상실될 수 있어요.
 무: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 신고를 하여도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A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사: ㉠1명을 빼고 모두 옳게 답했어요.

- ① ㉠은 '무'이다.
-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만 A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A에는 거소 지정권,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포함된다.
- ④ 부모 중 한쪽이 A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행사한다.
- ⑤ 부모의 A가 상실되어도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23020-0143]

05 다음은 A에 대한 입양 신고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 신고서 제출의 법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일반 양에 의한 양자가 아님.)

〈A 입양 신고서〉

양친	양부	양모
	갑	을
A	병	
A의 친생부모	부	모
	정	무
재판 확정 일자	2022년 12월 2일	

- ① 갑, 을은 병에 대한 친권을 갖는다.
 ② 병은 갑, 을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③ 정, 무와 병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④ 병은 갑, 을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⑤ 병의 성과 본은 갑 또는 을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23020-0144]

06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자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유언을 남겼으면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처리하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면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유언은 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어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기]

- ㄱ. 상속의 대상이 되는 ㉠에는 사망한 사람의 채무도 포함된다.
 ㄴ. 법적 요건을 갖춘 ㉡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이 효력을 갖는다.
 ㄷ. ㉢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50%를 상속받는다.
 ㄹ. ㉣을 갖추기 위해 유언자는 자필로 유언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145]

07 다음 사례에서 (가), (나)의 경우 을과 정 의 법정 상속액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법률혼 상태에서 병을 낳았고, 갑의 홀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여행을 떠났다가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교통사고 당시 갑의 재산은 채무 없이 10억 원이고, 병의 재산은 없었다.

- (가) 갑이 사망한 후 병이 사망한 경우
 (나) 병이 사망한 후 갑이 사망한 경우

[보기]

- ㄱ. (가) - 을은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ㄴ. (가) - 정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ㄷ. (나) - 을은 6억 원을 상속받는다.
 ㄹ. (나) - 정은 4억 원을 상속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46]

08 그림은 갑이 작성한 유언장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유언 내용> 나의 전 재산 14억 원을 ○○ 복지 재단에 기부한다.

<작성 일자> 2022년 3월 28일

<유언자> 갑

* 갑의 유가족으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을, 법률혼 상태에서 낳은 자녀 병과 정, 갑의 홀아버지 무가 있음.

[보기]

- ㄱ.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은 2022년 3월 28일에 발생한다.
 ㄴ.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병과 정이 받는 법정 상속액의 합은 8억 원이다.
 ㄷ. 유언대로 갑의 재산이 처리될 경우 무는 ○○ 복지 재단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유언대로 갑의 재산이 처리될 경우 을은 병보다 더 많은 유류분 반환을 ○○ 복지 재단에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147]

1 다음 자료는 사례 (가)~(다)를 질문에 따라 A~C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은 을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하였다.
 (나) 갑과 을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 신고를 하였다.
 (다) 갑과 을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구분	A	B	C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예	아니요	예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예	예	아니요

- ① B의 혼인은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무효가 될 수 없다.
- ② A에서는 C와 달리 부부 상호 간의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발생한다.
- ③ C에서는 A와 달리 배우자 및 인척 관계가 발생한다.
- ④ 갑이 사망하면 C의 을은 A의 을과 달리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 ⑤ A는 (가) 사례, B는 (나) 사례, C는 (다) 사례이다.

[23020-0148]

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모든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채무 중에서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현행 부부 재산 제도는 ㉡부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 보기 】

- ㄱ. ㉠은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만을 의미한다.
- ㄴ. ㉡에 따라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수익한다.
- ㄷ. ㉢의 사례로 ‘자녀 학비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들 수 있다.
- ㄹ. ㉣의 사례로 ‘혼인 후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진 빚’을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49]

3 그림은 이혼의 유형 (가), (나) 과정에서의 서류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신청의 취지
갑, 을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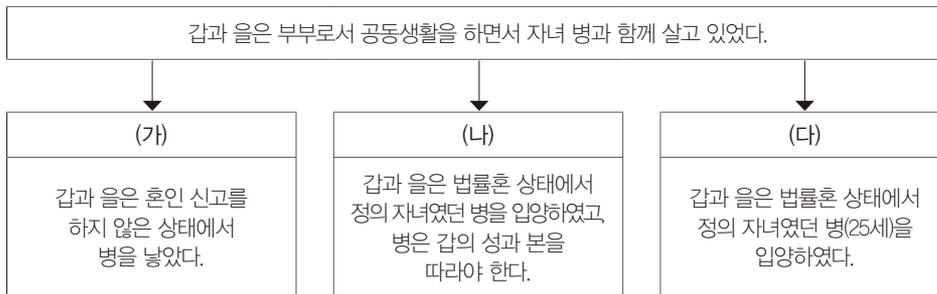
(나)

주문
1. 원고(병)와 피고(정)는 이혼한다.
2.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① (가)는 (나)와 달리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
②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이혼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이혼 신고 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 을은 병, 정과 달리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다.
⑤ 갑, 을은 병, 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23020-0150]

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가)의 경우 병은 갑과 을의 혼인 중 출생자이다.
ㄴ. (나)의 경우 입양 후 병은 정의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ㄷ. (다)의 경우 입양 후 병과 정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ㄹ. (나)의 경우 (가)와 달리 갑, 을과 병의 친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51]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지방 검찰청은 자녀 갑을 폭행하고 학대한 부모 을과 병의 A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알코올 중독인 을과 병이 오랜 기간 동안 갑을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A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모는 수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왔으나 생활고로 증세가 악화되어 갑을 방치했다. 피해 아동 측은 국선 변호인을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갑의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A 상실 청구를 요청했다.

「 보기 」

- ㄱ. 갑은 을과 병의 미성년 자녀이다.
- 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법원이 A의 행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 ㄷ. A는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 ㄹ. 검찰의 A 상실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을, 병과 갑 간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20-0152]

6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상황1〉 갑이 (가)의 재산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상황2〉 병이 (나)의 재산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보기 」

- ㄱ. 〈상황1〉에서 정이 4억 원의 법정 상속을 받았다면, (가)에 ‘14억 원’이 들어간다.
- ㄴ. 〈상황1〉에서 (가)에 ‘7억 원’이 들어가면, 병과 정이 받는 법정 상속액의 합은 을의 법정 상속액보다 1억 원 많다.
- ㄷ. 〈상황2〉에서 (나)에 ‘14억 원’이 들어가면, 을의 법정 상속액은 7억 원이다.
- ㄹ. 〈상황2〉에서 병이 사망하기 전에 을이 14억 원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했고, (나)에 ‘10억 원’이 들어가면, 을 사망 전 병의 재산은 4억 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20-0153]

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2021년 4월에 사망한 갑은 ㉡ 2020년 4월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을에게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러나 ㉢ 다른 유가족은 갑이 남긴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이 남긴 유언장은 갑이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 재산 목록 2장, 부동산 목록 1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갑의 유언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 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유언장 중 갑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으므로 ㉠ 갑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라고 ㉣ 판결하였다.

[보기]

- ㄱ. 유언이 효력이 있었다면, ㉡이 아닌 ㉠에 갑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 중 을의 형제자매가 ㉣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ㄷ. ㉣은 법에 규정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ㄹ. ㉢이 확정되면 을은 법정 상속을 받지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54]

8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법률혼 상태에서 A를 낳았고, 병과 정은 법률혼 상태에서 B를 낳았다.

㉠ 갑은 을과 협의를 이혼 후 병과 재혼(법률혼)을 하였고,
 ㉡ 정은 병과 협의를 이혼 후 무와 재혼(법률혼)을 하였다.

㉢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 무는 B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 을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병은 10억 원의 재산을 ○○ 복지 재단에 물려준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정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

- ① ㉠과 달리 ㉡의 과정에서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다.
 ② ㉤을 통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고, ㉥을 통해 병과 B와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③ ㉣으로 인해 A는 10억 원의 재산을 모두 법정 상속받는다.
 ④ ㉥으로 인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과 A뿐이다.
 ⑤ ㉦으로 인한 상속에서 무의 법정 상속액은 B보다 2억 원이 많다.

01 민법의 기본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깨트린 자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언을 기초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법적 가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책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 을/를 채택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험한 시설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이러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기업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하여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위험도 부담한다.’는 법언에 따라 가해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나) 이/가 등장하였다.

- ① (가)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작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③ (나)에 의하면,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④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그 동물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나)가 적용된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02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답변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교사: 다음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정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에 대해 말해 보세요.

갑(17세)은 을이 운영하는 전자 대리점에서 고가의 노트북 할인 행사를 보고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서, 노트북의 수령과 대금 지급은 다음날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 _____ (가) _____

- ①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병의 동의를 얻어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이 노트북을 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병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하더라도 을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⑤ 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한 후 갑이 을로부터 노트북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갑에게는 자녀 을(18세), 병(14세)이 있다. 을은 A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주의로 손님 B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혔다. 한편 갑은 장기간 여행을 간 친구 C의 부탁으로 맡고 있던 C의 반려견을 데리고 혼자 산책하던 중, 갑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행인 D를 물어서 D가 다쳤다. 그동안 집에 혼자 있던 병의 부주의로 인해 창틀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 E가 다쳤다.

- ① 을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을과 A는 B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A가 을의 사용자로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A는 B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D는 C가 아닌 갑에게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병은 E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0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갑(남)과 을(여)은 법률상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그 후 갑과 을은 협의 이혼하면서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한편 갑은 병과, 을은 정과 법률상 혼인하였고 을과 정 사이에서 C가 태어났다. 그 후 ㉠ 병은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고, ㉡ 정은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 A~C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미혼이며 자녀가 없다.

** 갑~정의 성(姓)과 본(本)은 모두 다르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 이후에도 병은 A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 ③ ㉠ 이후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병은 을과 달리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 ④ ㉡ 이후 B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다면 정은 갑과 달리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⑤ C가 정의 성(姓)과 본(本)을 따른 경우, ㉡으로 인해 B는 정의 성과 본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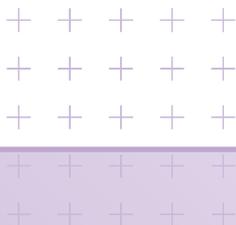


사회생활과 법

학습 요소

- 죄형 법정주의
- 범죄의 성립 요건
- 형사 절차
- 근로자의 권리

①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보안 처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절차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이해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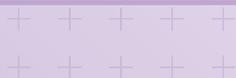
EBS 교재 연계 사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 10번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25세)은 을의 지갑을 절취하던 중 적발되어 사법 경찰관에게 쫓기다가 열쇠가 꽂힌 채 길거리에 주차된 병(20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병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타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병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절취당하지 않기 위해 갑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갑에게 부딪히게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갑은 현장에서 체포된 이후 구속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갑의 고소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병은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① 갑에 대한 구속은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② 구속 영장 발부 전 갑에 대한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갑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 ③ 갑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범행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④ 을은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배상을 위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병의 갑에 대한 상해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되지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12 형법의 이해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14 근로자의 권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43쪽 5번

05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A에 대한 중상해 혐의로 도주 중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던 갑은 보석을 통해 석방되었고, 1심 법원에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을은 B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도주 중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을은 구속 적부 심사 절차를 통해 석방되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① 갑은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② 을은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
- ③ 갑과 달리 을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된 이후에 석방되었다.
- ④ 갑과 을은 모두 검사의 구속 영장 발부 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 ⑤ B와 달리 A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의 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 문항은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43쪽 5번 문항의 자료를 활용하여 형사 절차와 관련한 법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수능특강 문항에서는 갑과 을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절차가 모두 제시되어 있는 데 비해, 6월 모의평가 문항에서는 갑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만 병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수사, 형사 재판 절차가 모두 제시되는 경우가 있고 수사 단계와 같이 일부분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EBS 연계 교재의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는 등 연계 정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다. 따라서 EBS 연계 교재를 통해 형사 절차의 각 단계마다 강조되는 법적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❶ 범죄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❷ 법익

개인, 사회, 국가가 평화로운 공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통해 보호해야 할 가치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 형법은 이를 고려하여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유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념 체크

- 1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를 ()이라고 한다.
- 2 형법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형법의 () 기능이라고 한다.
- 3 형법은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형법의 () 기능이라고 한다.

정답

- 1 형법
- 2 보호적
- 3 보장적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1) 형법의 의미

- ① 일반적 의미: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사 제재(형벌과 보안 처분)를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 ②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법률
 - ③ 실질적 의미의 형법: 법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
- 예) 도로 교통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근로 기준법, 조세법 처벌법 등

자료 플러스 실질적 의미의 형법

갑은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을을 다치게 하였으나, 즉시 정착하여 을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로 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중략)….)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刑法典)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도로 교통법에도 범죄와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갑이 을을 다치게 하고도 을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도로 교통법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 부과 대상이 된다.

(2)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 ① 형법의 필요성: 형법을 만들어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 ② 형법의 기능

보호적 기능	개인이나 공동체의 존립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보장적 기능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함.

개념 플러스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은 살인, 절도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준칙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어 법관의 사법 활동을 규제하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2. 죄형 법정주의

(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변천

- ① 의미: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② 등장 배경: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
- ③ 변천

근대적(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성문의 법률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지만,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려움.
현대적(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됨.

(2)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파생 원칙)

성문 법률주의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며,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의미함.
명확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 •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개념 플러스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체계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정성의 원칙을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범죄와 형벌 규정은 헌법상 비례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죄형 법정주의의 적용

유추 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후 입법에 의한 부당한 처벌은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되기도 한다.

☞ 관습법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행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소급효

법률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 시행 전 또는 법률 요건 성립 이전으로 돌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체크

- ① ()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이다.
- ③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이다.

정답

- ① 죄형 법정주의
- ②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
- ③ 적정성의 원칙

◎ 법령에 의한 행위

법률부터 명령에 이르기까지 현행 실정법에 근거를 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된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행위,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위, 노동쟁의 행위 등이 있다.

◎ 사회 상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 내지 사회 통념을 의미한다.

◎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개념 체크

- 1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위법성, ()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 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3 형사 미성년자 또는 심신 상실자의 위법한 행위는 ()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 1 구성요건 해당성, 책임
- 2 긴급피난
- 3 책임 조각

3.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1) 범죄의 의미와 성립

- ① 범죄의 의미: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
- ②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2) 범죄의 성립 요건

- ① 구성요건 해당성: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을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플러스 구성요건 해당성

군 형법 제64조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 면전 모욕죄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갑이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며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관 면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위법성

- 의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
- 위법성 조각 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구 행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③ 책임

- 의미: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
-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책임 조각 사유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 →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책임 감경 사유	심신 미약자(감경 가능),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감경해야 함) 등 → 범죄는 성립되나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함.

4. 형벌과 보안 처분

(1) 형벌

- ① 형벌의 의미: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
- ② 형벌의 종류

생명형	사형
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역: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함. • 금고: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정해진 노역(勞役)을 부과하지 않음. •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 정해진 노역(勞役)을 부과하지 않음.
명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상실: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을 박탈함. • 자격 정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자격이 정지됨.
재산형	벌금(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과료(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몰수

(2) 보안 처분

- ① 의미: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
- ② 종류

치료 감호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미약·알코올 등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
보호 관찰	형의 선고 유예를 받거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교정 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 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함.
수강 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 인식과 행동 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 운전, 가정 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 등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나 기관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함.
사회봉사 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함.

자료 플러스 형벌과 보안 처분의 관계

형벌이 행위 책임을 전제로 책임주의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것인 반면, 보안 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를 전제로 특별 예방의 관점에서 부과된다. 또한 형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현하는 제재의 성격이 있지만, 보안 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을 향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이 강조된다. 다만, 보안 처분을 형벌과 동등한 형사 제재로 인정하는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그 부과 요건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하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 징역

유기 징역과 무기 징역이 있다. 유기 징역은 종신형이고, 유기 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유기 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몰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재산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동이나 태도가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0이 지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념 체크

- 1 형벌의 종류 중 재산형에는 (), (), ()이 있다.
- 2 자유형 중에서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은 ()이다.
- 3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를 ()이라고 한다.

정답

- 1 벌금, 과료, 몰수
- 2 징역
- 3 보안 처분

Theme 1 명확성의 원칙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결정 요지: 심판 대상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 노출 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의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후략)…

형벌 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때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되어 죄형 법정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법률상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범죄의 구성 요건의 명확성은 일반인이 형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충분히 인식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문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범죄의 구성 요건뿐만 아니라 형벌에서도 명확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는 형사 제재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와 같은 막연한 처벌 규정은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상한과 하한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법관의 자의에 따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Theme 2 책임 능력에 따른 책임 조각과 책임 감경

형법상 책임이란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형벌은 가치 중립적인 제재가 아니고 행위자에 대한 사회 윤리적인 비난을 담고 있는데, 이 비난은 법규범에 배치되는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지는 것은 아니고 위법 행위를 한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비로소 가해진다. 이러한 행위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책임 능력인데, 책임 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금지와 명령을 분별하여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보통 책임 능력을 가지고 행동했을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책임 능력이 결여된 경우(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고, 책임이 저하된 경우(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9조(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 장애인) ①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 상실자를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자는 충분한 분별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심신 상실자는 정신 기능의 장애로 건전한 정신 상태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본 것이다. 한편 심신 미약자는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대해서도 한정 책임 능력자로 규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다.

[23020-0155]

01 형법의 기능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기능
(나)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지키는 기능

- ① (가)는 보호적 기능, (나)는 보장적 기능이다.
- ② (가)는 범죄인의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도 보장한다.
- ③ (나)는 법익에 침해를 입은 피해자의 개인적 보복을 강조한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23020-0156]

02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민 등록법에서는 '허위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 등록 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한 행위를 '허위의 주민 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행위'로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A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① 관습법을 근거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규정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3020-0157]

0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병에게 내려진 판결〉

- 피고인 갑을 자격 정지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을을 금고 5월에 처한다.
- 피고인 병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 물품을 몰수한다.

- ① 갑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 ② 갑이 받은 형벌은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없다.
- ③ 을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 ④ 병은 형벌과 형벌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를 모두 선고받았다.
- ⑤ 병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만 선고받은 을과 달리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과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선고받았다.

[23020-0158]

04 (가)~(라)는 갑국 형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제○○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나)	제◇◇조 청소년답지 못한 행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제□□조 동물을 학대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	제△△조 이동을 학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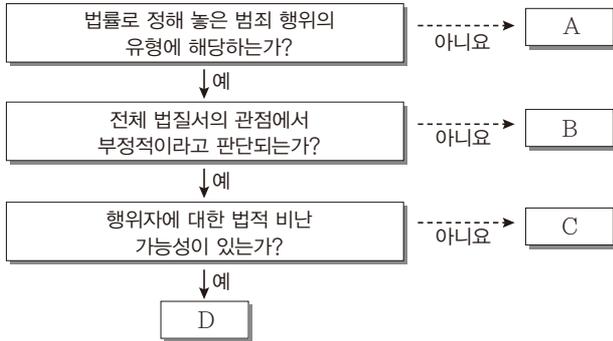
| 보기 |

- ㄱ. (가)를 통해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 ㄴ. (나)는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 ㄷ. (다)와 (라)를 볼 때 갑국 형법은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ㄹ. (나), (다), (라)에서는 성문 법률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59]

05 A~D에 해당하는 옳은 사례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A-갑(52세)이 화재가 발생한 호텔을 긴급히 탈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호텔 출입문을 파손한 경우
- ㄴ. B-을(31세)이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 ㄷ. C-자녀를 살해하겠다는 유괴범의 협박에 못 이겨 병(48세)이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ㄹ. D-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정(25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져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60]

0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범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A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갑: A는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을: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A가 조각됩니다.
 병: 법률로 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A가 조각됩니다.
 교사: 두 사람만 옳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 ① A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 ② A는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 ③ 형사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는 A가 조각된다.
- ④ 옳은 대답을 한 사람은 갑과 병이다.
- ⑤ 병이 말한 경우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23020-0161]

0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관세법

제269조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기

- ㄱ. ㉡은 ㉠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 ㄴ. ㉢은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 ㄷ. ㉣과 ㉤은 모두 범죄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에 해당한다.
- ㄹ. ㉤은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명예형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62]

08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의미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대안적 형사 제재

- 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 ②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함께 부과할 수 없다.
- ③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강 명령은 모두 A에 해당한다.
- ④ 형벌과 달리 적법 절차의 원리가 준수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
- ⑤ 장래의 위험 예방보다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요시하는 형사 제재이다.

[23020-0163]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죄형 법정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구현된 것으로 볼 때,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로의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 법정주의도 근대적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로 그 의미가 변모했다고 볼 수 있다. ㉠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 변화에 따라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가]이/가 강조되고 있는데, [가]은/는 형법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 체계에 부합하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보기 」

- ㄱ. (가)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 ㄴ. ㉠은 ㉡과 달리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로 표현된다.
- ㄷ. ㉡은 ㉠과 달리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 ㄹ. ㉠, ㉡은 모두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64]

2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 갑국 형법 제○○조 -
- (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처벌한다. - 을국 형법 제△△조 -
- (다) 어떠한 사회적 위험 행위에 대하여 본 법률에 규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그것과 유사한 범죄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그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정한다. - 병국 형법 제□□조 -

「 보기 」

- ㄱ. (가)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ㄴ. (나)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형벌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 ㄷ. (다)는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 ㄹ. (다)는 (나)와 달리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65]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노동 쟁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별하지 않는다.
- 운동 경기에서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운동선수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별하지 않는다.
- 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행위는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 법질서에 위반되더라도 별하지 않는다.

- ① ㉠은 자구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 ④ ㉣은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 ⑤ ㉠, ㉡, ㉢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1개이다.

[23020-0166]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 기관 소유의 폐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놓아 폐가와 쓰레기를 모두 불태우려 하였으나 불길의 높이로 인해 폐가에는 옮겨 붙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 작용을 계속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정되는데, 갑이 놓은 불길로 인해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 건조물 방화의 미수범*에 해당한다며 징역 6개월 및 압수된 라이터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갑은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람이 사실상 거주·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물건에 해당하며, 물건에 대하여는 건조물과 달리 방화 행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그 범인

형법

제166조(일반 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1심 법원은 갑에게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만 부과하였다.
- ② 1심 법원은 폐가가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③ 2심 법원은 갑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④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갑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 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갑의 행위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3020-0167]

5 표는 형벌 A~D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D는 각각 징역, 금고, 구류, 과료 중 하나임.)

질문	A	B	C	D
1개월 이상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는가?	예	아니요	㉠	㉡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가?	㉢	㉣	예	아니요
자유형에 해당하는가?	예	㉤	예	㉥

| 보기 |

- ㄱ. C는 A와 달리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ㄴ. ㉠은 '예', ㉡과 ㉣은 '아니요'이다.
 ㄷ. ㉢과 ㉤의 대답이 다르다면, D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납입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다.
 ㄹ. B가 과료라면, ㉥은 '아니요'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68]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술형 평가

범죄의 성립 요건 중 A를 갖추지 못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3가지 적으시오. (옳은 내용 1개당 1점씩이며, 총 3점임.)

〈학생1의 답안〉

구분	사례	총점
1	갑(20세)이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아버지의 노트 북을 절취해 판매하였다.	㉠
2	을(35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3	(가)	

〈학생2의 답안〉

구분	사례	총점
1	초등학생 갑(12세)이 학교에서 친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
2	자신의 배우자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은행원 을(52세)이 불가피하게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다.	
3	병(30세)은 좁은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의 가게 문을 부수고 가게에 들어갔다.	

- ① ㉠에는 2점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이 1점이라면, A는 '구성 요건'이다.
 ③ ㉡이 2점이라면, A는 객관적 범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④ A가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면, ㉡은 1점이다.
 ⑤ (가)에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들어가고, ㉠이 1점이라면, ㉡은 1점이다.

[23020-0169]

7 보안 처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교정 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 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함.
- (나) 마약·알코올 그밖에 약물 중독 상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
- (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게 함.

- ① (가)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 ② (나)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 ③ (다)는 형의 집행유예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
- ④ (가)를 부과할 때는 (다)와 달리 적법 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요 목적이다.

[23020-0170]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행사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 보험에 가입함. 이후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한 다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축하 행사 비용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음.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하 '보험 사기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갑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법을 적용하여 '갑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갑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갑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판결함.



갑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갑은 상고하였음.



대법원은 보험 사기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갑이 범한 범죄 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A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지방 법원에 환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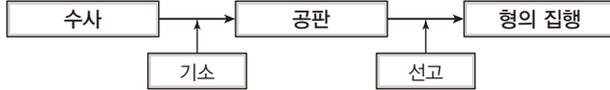
* 홀인원: 골프에서 티 샷을 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

- ①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였다.
- ② 1심 법원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적용하여 갑에게 형벌을 선고하였다.
- ③ 1심 법원은 갑에게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과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함께 부과하였다.
- ④ 대법원은 갑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⑤ A 원칙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다.

1. 형사 절차의 이해

(1) **형사 절차의 의미**: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어 형사 제재를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

(2) **형사 절차 흐름의 개요**



2. 수사 절차의 이해

(1) **수사의 의미와 수사 기관**

- ① 수사의 의미: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 ② 수사 기관: 법률상 범죄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 기관인 검사와 사법 경찰관
- ③ 피의자: 수사 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수사 절차**

수사 개시	고소 및 고발, 현행범의 체포, 긴급 체포, 범인의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
수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불구속 수사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판사(법관)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음.
수사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음.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음.

개념 플러스 불기소 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다.
- ① 기소 유예: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 ② 혐의 없음: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③ 죄가 안 됨: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④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 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공판 절차

공소 제기 이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고소와 고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이해관계자가 수사 기관에 직접 범인을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 체크

- ①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을 ()라고 한다.
- ② 수사 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라고 한다.
- ③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라고 한다.

정답

- ① 수사
- ② 피의자
- ③ 기소 유예

☞ 심문(審問)과 신문(訊問)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인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신문은 법원, 기타 국가 기관 등이 어떤 사안에 관해 증인, 당사자, 피고인,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말로 물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모두(冒頭) 절차

형사 소송의 공판을 시작함에 있어서 최초로 행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구형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권고적 의미를 가진다.

☞ 면소

형사 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의 형이 폐지된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개념 체크

1. 검사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라고 한다.
2. 형사 재판(공판)의 당사자는 ()와/과 ()이다.
3. ()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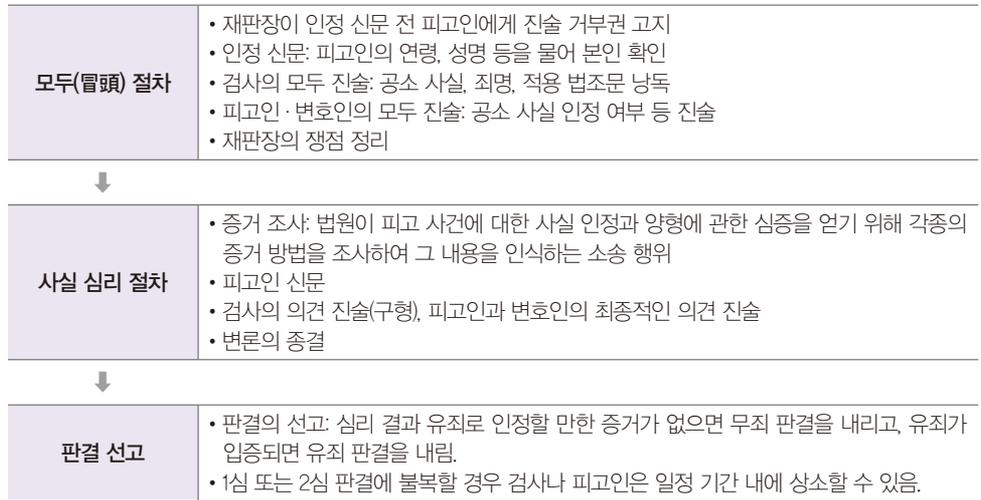
1. 기소(공소 제기)
2. 검사, 피고인
3. 집행 유예, 선고 유예

3. 형사 재판 절차

(1) 기소와 형사 재판

- ① 기소(공소 제기): 검사가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일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② 형사 재판(공판):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판 기일의 심리 절차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
- ③ 형사 재판의 당사자: 검사, 피고인

(2) 형사 재판 절차



(3) 형의 선고와 집행

① 형의 선고

유죄 선고	실형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선고 유예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 → 선고 유예의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
무죄 선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

- ② 형의 집행: 법원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됨.
- ③ 가석방: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태도 등이 양호하여 누우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 처분으로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

4. 소년 사건과 국민 참여 재판

(1) 소년 사건의 처리

① 소년 사건의 대상과 특징

대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됨.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됨.
특징	소년법상 소년은 성인에 비해 심신의 성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범죄 사건이나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 사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등은 성인과 다른 특별한 취급이 요구됨.

②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일정한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함.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에 관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함.
검사	사안에 따라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또는 공소 제기를 함.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 심판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함. 형사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함. • 형사 법원: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림.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가정(지방)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함.

(2) 국민 참여 재판

- ① 의미: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하는 형사 재판
- ② 대상: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 관할 형사 사건
- ③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 → 공판 → 평의 및 평결 → 판결 선고
- ④ 특징: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를 진행하여 평결을 내리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참고하여 판결이 이루어짐. →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5.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1)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적법 절차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 • 헌법 제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 유죄의 입증은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의 몫이며,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음. 수사 및 재판은 불구속 상태 진행이 원칙임.
진술 거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수사 기관과 법원은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지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검사가 범죄 예방 자원봉사 위원회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년법상 보호 처분

소년부 판사가 비행 재발 방지, 소년의 환경 개선이나 교화,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내리는 조치로,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 평의와 평결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을 평의라고 하고, 평의의 결과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것을 평결이라고 한다.

개념 체크

- ① ()은 소년부 판사가 비행 재발 방지, 소년의 환경 개선이나 교화,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내리는 조치로 감호 위탁, 수강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있다.
- ②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공판 절차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이를 참고해 판결이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은 ()이라고 한다.
- ③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이라고 한다.

정답

- ① 소년법상 보호 처분
- ② 국민 참여 재판
- ③ 진술 거부권

◎ 긴급 체포

수사 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를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긴급 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거 능력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 미결 구금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미결 구금 일수의 전부를 형벌 기간에 산입한다.

개념 체크

- 1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라고 한다.
- 2 ()는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 3 피의자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라고 한다.

정답

- 1 구속 적부 심사 제도
- 2 재심 제도
- 3 형사 보상 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재판(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됨. • 국선 변호인 제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또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함.
----------------	---

(2)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영장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법관)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 • 수사상 강제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 • 예외적으로 현행 범인이거나 긴급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함.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

(3)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보석 제도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
증거 재판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원칙으로 사실 인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 •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함.
상소 제도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재심 제도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함.

(4)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형사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재판 절차 진술권)할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형사 보상 제도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배상 명령 제도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무죄 등의 재판을 받은 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 무죄 등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 등이 청구할 수 있음.

Theme 1 증거 재판주의와 자백 보강 법칙

형사 절차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피고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 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법률상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는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목격자의 증언, 피해자의 자백과 같은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

헌법 제12조 ⑦ ……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 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자백 이외에 독립된 보강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오판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Theme 2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 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 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 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 상고의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 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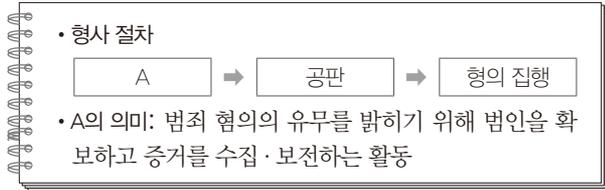
제30조(무죄 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 재판 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 재판 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 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지방 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사례〉
 회원 가입 회사로부터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나 담당자가 컴퓨터 처리를 잘못하여 벌어진 일임이 밝혀져 무죄가 확정되었다.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 보상법’)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에서 같은 형사 보상법에 규정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구속 수사로 인한 구금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갑의 무죄 사실을 모르고 갑이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라고 계속 수근거리면 갑은 형사 보상법에 규정된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명예 회복 제도는 갑처럼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재판서를 법무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23020-0171]

01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한다.
-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없더라도 A가 개시될 수 있다.
- ③ 사법 경찰관은 공소를 제기하여 A를 종결할 수 있다.
- ④ A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는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 ⑤ A는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체포·구속하여 진행한다.

[23020-0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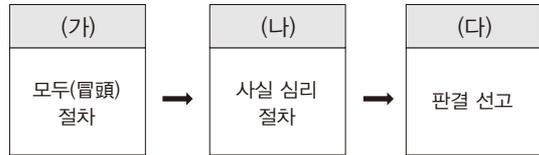
02 그림은 갑~병에 대한 판결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음.)



- ① 갑은 법관의 지휘에 따라 교정 시설에 수용된다.
- ② 갑은 태도가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기 만료 전에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 ③ 을은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받았다.
- ④ 병은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받았다.
- ⑤ 갑, 을, 병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3020-0173]

03 (가)~(다)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갑에 대한 1심 재판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에서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진다.
- ② (가)에서 재판장은 갑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다.
- ③ (나)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다)에서 갑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
- ⑤ (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다.

[23020-0174]

0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갑, 을, 병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서장이 직접 갑을 □□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고, 을과 병은 검사에게 송치되었다. 검사는 을을 기소하였고, □□ 지방 법원에서 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사는 병에게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 갑~병은 모두 10세 이상 19세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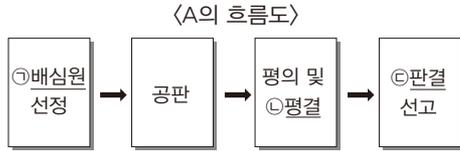
- 보기
- ㄱ. □□ 가정 법원 소년부 판사는 갑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다.
 - ㄴ. □□ 지방 법원은 을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없다.
 - ㄷ. 검사는 병에게 선도, 상담, 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다.
 - ㄹ. 갑과 병은 을과 달리 형사 미성년자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75]

0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유죄로 평결을 내린 경우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 ① A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 ② A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실시된다.
- ③ 민법상 미성년자도 ㉠이 될 수 있다.
- ④ ㉡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므로 재판장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이 이루어진다.

[23020-0176]

06 교사의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은?

A 제도, B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A 제도: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B 제도: 수형자의 태도 등이 양호하여 누워 침이 뚜렷한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

- ① 갑: A 제도에서 구속의 집행 정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 ② 을: A 제도를 통해 석방된 피고인에게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 ③ 병: B 제도를 통해 석방된 경우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정: B 제도를 통해 석방된 수형자는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석방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⑤ 무: B 제도는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형기 만료 전이라도 수형자를 석방해 주는 제도입니다.

[23020-0177]

0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천 영화: ○○○

줄거리

살인 사건의 목격자인 갑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였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갑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10년을 ㉣복역하였다. 출소한 갑은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신청하게 되는데 ……

- ① 갑이 체포되기 전에는 ㉠이 개시될 수 없다.
- ② ㉡이 갑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이를 이유로 갑을 처벌할 수 없다.
- ③ ㉢ 이후에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 기간 중 갑에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 ⑤ ㉤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헌법 재판소가 다시 재판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23020-0178]

08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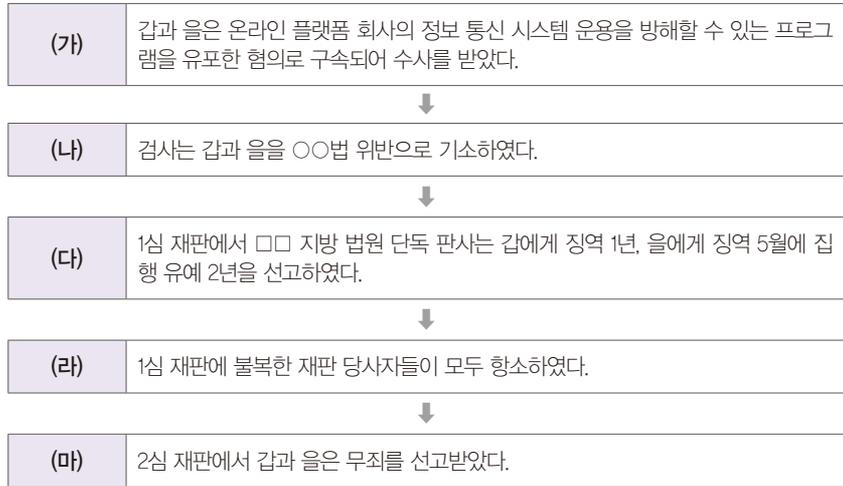
【 보기 】

- ㄱ. (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나)는 배상 명령 제도이다.
- ㄴ. (가)를 활용하면 법원의 배상 명령을 통해 국가로부터 피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ㄷ. (나)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ㄹ. (나)를 통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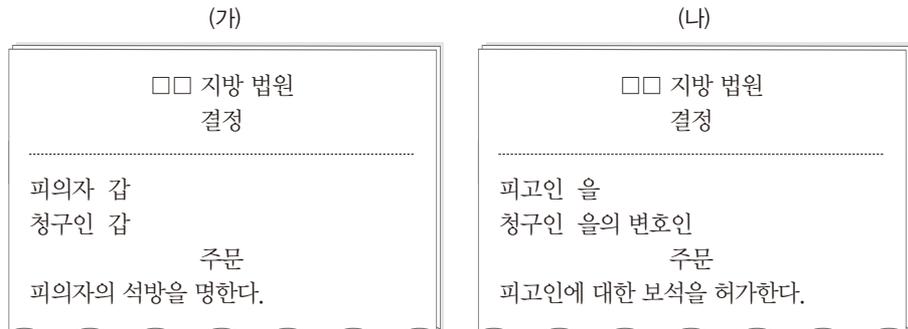
1 (가)~(마)는 갑과 을에 대한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에서 갑과 을은 구속 적부 심사를 거친 후 구속되었다.
- ② (나)로 인해 갑과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다)에서 을에게는 갑과 달리 대안적 형사 제재가 선고되었다.
- ④ (라)에서 갑, 을뿐만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는 재판 당사자이다.
- ⑤ (마)에서 2심 재판은 고등 법원이 담당한다.

[23020-0180]

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① (가)로 인해 검사는 갑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 ② (가)는 갑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 ③ (나)에 불복할 경우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 ④ 을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활용하였다.
- ⑤ 갑은 을과 달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23020-0181]

3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7년 ㉠소매치기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갑은 2020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소년부 판사는 갑에게 ㉣사회봉사 명령 및 장기 보호 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2023년 1월 갑은 또다시 타인의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갑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 ① ㉠ 당시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② ㉡ 당시 갑은 형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다.
 ③ ㉢이 갑에게 내린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④ ㉣은 소년 사건의 대상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⑤ ㉤을 담당한 2심 법원은 갑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3020-0182]

4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제가 국가로부터 보상받
 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
 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
 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기 |

- ㄱ. 저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ㄴ. 저는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ㄷ. 저는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ㄹ.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83]

5 (가) 사례를 (나)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은 상습적으로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1심 재판에서 ○○ 지방 법원 단독 판사는 갑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나)	질문	상황1	상황2	상황3
	갑은 소년 사건의 대상인가?	예	아니요	아니요
	갑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는가?	아니요	예	예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갑이 항소하였는가?	예	예	아니요

보기

- ㄱ. <상황1>의 항소심에서 갑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ㄴ. <상황2>의 항소심에서 갑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갑은 명예 회복 제도와 형사 보상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 ㄷ. <상황3>에서 갑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 ㄹ. <상황3>에서는 <상황2>와 달리 갑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84]

6 다음 자료는 형사 재판을 받은 갑, 을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지방 법원
판결
사건 △△△△노△△△
피고인 갑
항소인 검사
...(중략)...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부당하다.

◇◇ 고등 법원
판결
사건 ○○○○노○○○
피고인 을
항소인 피고인
...(중략)...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단,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음.

- ① □□ 지방 법원은 갑이 8개월간 교정 시절에 수용되어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 ② 갑이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갑, 을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였다.
- ⑤ 갑의 1심 재판과 을의 2심 재판은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3020-0185]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을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을이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 지방 법원은 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 지방 법원은 을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 을/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여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피해에 대해 갑이 손해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 살인 사건으로 자신의 남편을 잃은 A는 충격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활고를 겪었다. 남편을 살해한 B는 형이 확정되어 교정 시설에 수용되었으나, A는 B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A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나) 을/를 신청하였다.

- ① (가)는 배상 명령, (나)는 형사 보상이다.
- ② ○○ 지방 법원은 유예의 실효 없이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 ③ 을이 (가)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A의 (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는 A에게 지급될 구조금을 마련해야 한다.
- ⑤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가 아닌 재산 피해만 입은 사람은 (나)를 신청하여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

[23020-0186]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9명의 배심원 중 7명이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후 진행된 양형 토의에서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 징역 4명, 징역 15년 2명이었으며, 1심 법원은 갑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후 갑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갑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유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이후 ㉢2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보기 |

- 가. 1심 재판에서 자유형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 수는 생명형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 수의 2배이다.
- 나. ㉠을 담당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 다. ㉡은 고등 법원이다.
- 리. ㉢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 수사를 받았던 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리
- ⑤ 다, 리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의미한다.

개념 체크

- 1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태업 등과 같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권리를 () 이라고 한다.
- 2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 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정답

- 1 단체 행동권
- 2 8
- 3 휴게 시간

1. 근로자의 권리 보호

(1) 사회법의 발달

- ① 사회법의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등장
- ② 사회법의 특징: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
- ③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등

(2) 노동법

- ① 노동법의 의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 ② 우리나라 노동법의 종류: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 임금법 등

(3) 헌법상 근로자 권리의 보장

- ① 근로권: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근로(노동) 3권의 보장

근로(노동) 3권	단결권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운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
	단체 교섭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 → 사용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음.
	단체 행동권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 태업 등과 같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쟁의 행위)를 할 권리 →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이 면제됨.

2. 근로 계약과 근로 기준법

(1) **근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 근로 기준법

- ①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 ②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 ③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④ 근로 기준법상 임금과 근로 시간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通貨)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함.
근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연장 근로 가능 •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3. 청소년의 보호

- (1) 근거 법률: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
- (2) 보호 내용

취업 연령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15세 미만인 사람도 취업이 가능함.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근로 사용 금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연소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근로 시간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 계약과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음. 미성년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4.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 (1)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부당 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를 위한 요건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됨. 해고의 절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부당 노동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 사용자가 근로(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조직 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등

- (2)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가능
-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 부당 해고의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개념 플러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는 초심 절차, 재심 절차로 나누어지는데, 초심은 지방 노동 위원회, 재심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단체 교섭의 주체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므로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취직 인허증

취업이 금지된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고용 노동부 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인지 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노동 위원회

노사 간에 벌어지는 특정 문제들을 심의, 의결 또는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 기관이다. 노동 위원회는 중앙 노동 위원회, 지방 노동 위원회, 특별 노동 위원회로 구분된다.

개념 체크

-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라고 한다.
- ()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동의서
- 부당 노동 행위
- 부당 해고

Theme 1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

근로 기준법

제67조(근로 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은 근로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용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 친권 남용의 가능성으로부터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친권자나 후견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근로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미성년자 본인이 근로 계약이 불리하다고 느껴서 계약 해지를 원하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용자가 연소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성인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연소 근로자에게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Theme 2 부당 노동 행위 사례

- **중앙 노동 위원회 판정 사항:**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 노동 행위 의사에 기인한 승진 차별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중앙 노동 위원회 판정 요지:** 해당 사건에서 평가자인 사업부장 1인이 수백 명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성 평가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2021년 ○월 ○○일자 승진에서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라 조합원 간 승진율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동질의 균등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사이에 정성 평가 점수 및 승진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는 공정한 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간의 노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내지 부당 노동 행위 의사에 기인한 승진 차별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갈등 관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승진 누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을 위축하게 하는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사례에서 중앙 노동 위원회는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 신청서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3020-0187]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 문제, 빈곤 및 질병, 불공정 거래, 불충분한 소비자 보호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제3의 법 영역인 (가)이 등장하였다. 이는 국가가 근대에서 요청되던 소극적 기능을 넘어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 ① 민법, 노동법, 사회 보장법 등이 해당한다.
- ② 실질적 평등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 ③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 규제 완화를 중시한다.
- ④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⑤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성격을 갖는다.

[23020-0188]

0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의류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된 갑은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 의류 회사 사용자로부터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거치려 한다.

- ①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갑은 ○○ 의류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갑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 ④ 갑은 반드시 지방 노동 위원회를 거쳐야만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갑의 해고에 대해 ○○ 의류 회사 노동조합도 갑을 대신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3020-0189]

03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근로 3권	정의
A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B	근로자가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쟁의 행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C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 측과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보기

- ㄱ. 정당한 B의 행사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 ㄴ. C는 A, B와 달리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 ㄷ. A~C 중 하나라도 사용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 ㄹ. A~C는 모두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190]

0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인 갑은 적법한 파업에 참여하였으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 회사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 회사에 갑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하였다.

- ①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회사 사용자는 ○○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갑은 □□ 회사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 ④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앙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 ⑤ 갑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 회사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23020-0191]

0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고등학생, 17세)과 을(사용자, 32세)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2. 근로 시간: 9시~17시(휴게 시간: 12시~13시)
3. 근무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유급 휴일(매주 일요일)
4. 임금 및 지급 방법: 시간당 9,620원/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

*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 ① 임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였다.
- ② 휴게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
- ③ 갑이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 ④ 갑이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갑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 갑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3020-0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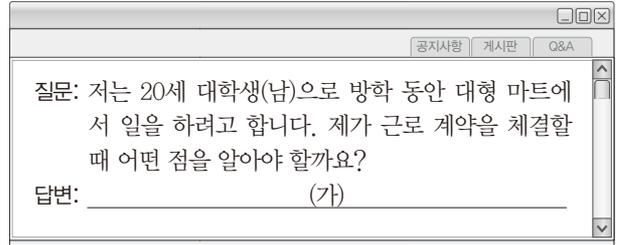
06 밑줄 친 '한 사람'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사: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표해 볼까요?
 갑: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병: 경쟁 기업에 회사의 기밀을 넘겨준 것이 발각되어 서면으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정: 적법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무: 이력서에 경력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경우입니다.
 교사: 한 사람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발표했어요.

- ① 갑 ② 을 ③ 병
- ④ 정 ⑤ 무

[23020-0193]

0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임금은 일정한 날짜이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1주에 5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 ③ 학생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④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⑤ 8시간 근로할 경우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23020-0194]

0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① ㉠의 기준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다.
- ② ㉠에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 ③ ㉡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은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금지된다.
- ⑤ ㉡에 적용되는 연장 근로 시간 규정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23020-0195]

1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세 신분 사회를 해체한 원동력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라는 신념이다. 이를 체계화해서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근대 시민법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다. ㉡노동법은 ㉠의 한 종류로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생성되는 근로 계약에서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인신 활동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일방을 특별히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노동법은 일방의 경제적 우월성, 다른 일방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근로 관계법과 집단적 노사 관계법에서 근로자의 지위 보장과 권리 보호를 꾀하고 노사 동등의 지위와 근로 3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한다.
- ② ㉠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③ ㉡은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 실현을 추구한다.
- ④ ㉡은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⑤ ㉠, ㉡은 모두 사적 영역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한다.

[23020-0196]

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사례1〉	〈사례2〉
대형 마트 사장 갑은 고등학생 A(18세)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갑과 A가 체결한 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이다.	대형 마트 사장 을은 고등학생 B(17세)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을과 B가 체결한 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이다.
1. 계약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2. 근로 시간: 9시~18시(휴게 시간: 12시~13시) 3. 근무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휴일 매주 일요일 4. 임금 및 지급 방법: 시간당 10,000원/매달 1회 A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 5.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마트 내 물건 정리	1. 계약 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2. 근로 시간: 10시~18시(휴게 시간: 12시~13시) 3. 근무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휴일 매주 일요일 4. 임금 및 지급 방법: 시간당 9,700원/홀수 달에 2회 B의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 5.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물품 정리 및 청소
*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 ① 을의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사장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인 A와 B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한다.
- ④ 을과 B가 근무일 연장 근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하면, B는 근무일 모두에 1일 1시간씩 더 근로할 수 있다.
- ⑤ 을은 B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 중 하나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23020-0197]

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회사에서 근무하는 갑은 회사의 특허 기술을 다른 기업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고가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으며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 ○○ 회사 사용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 지방 노동 위원회와 같은 이유를 들며 기각하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 역시 ○○ 회사 사용자가 갑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보기 」

- ㄱ. 갑에 대한 해고는 갑의 근로 3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ㄴ. ○○ 회사 사용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 ㄷ. 갑에 대한 해고에 대해 법원은 중앙 노동 위원회와 달리 해고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 ㄹ.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20-0198]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지방 노동 위원회는 □□ 회사 해고 노동자들이 □□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부당 해고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 회사 측에 해고자 전원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 지방 노동 위원회는 해고 행위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신청 취지는 기각했다.

- ① ㉠은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음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 ② ㉠과 ㉡의 구제 신청은 모두 □□ 회사 노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었다.
- ③ □□ 회사 사용자는 ○○ 지방 노동 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 지방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해 □□ 회사 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 ⑤ □□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23020-0199]

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사 관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 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33조에서는 ㉢단결권의 보장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사 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보기 」

- ㄱ. ㉠을 위해 모든 근로자의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금지된다.
- ㄴ. 근로 기준법이 정한 ㉡은 최저 기준이다.
- ㄷ. ㉢은 근로자가 단체 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쟁의 행위 등을 통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ㄹ. 근로자가 ㉣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20-0200]

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근로 계약서

사업주 갑(40세)과 근로자 을(28세)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근무 장소: ○○ 대형 음식점
3. 업무 내용: 음식 서빙
4. 근로 시간: 9시~17시(휴게 시간: 12시~13시)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월~금)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및 지급 방법: 시간당 10,000원/짝수 달에 을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

* 2023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임.

- ① 임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②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과 달리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다.
- ③ 갑과 을이 합의를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없다.
- ④ 을이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 시간을 일한다면 하루 80,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⑤ 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22학년도 수능]

갑(24세)과 을(14세)은 술에 만취한 병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병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사는 갑, 을 모두 범죄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갑은 ㉡기소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을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에 앞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 이후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 ③ ㉡에 의해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 ④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 ⑤ ㉣로 인해 갑은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04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용 노동부 × +

고용 노동부 민원 마당

빠른 인터넷 상담 ▾

질문	저(갑)는 15세인데 얼마 전 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개월간 ○○ 대형 마트에서 일하기로 하고 사장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일 중 하루인 토요일에 1시간 추가로 근로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친권자인 부모님께 근로 계약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동의를 받은 후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을에게서 교부받은 근로 계약서 내용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근로 계약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 마트 내 상품 정리 ○ 소정 근로 시간: 11시~18시(휴게 시간: 13시~14시) ○ 근무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 휴일: 매주 월, 화요일 </div>	
답변	(가)

- ① 갑의 친권자가 갑의 근로 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② 을이 갑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③ 갑은 연소 근로자로 일요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무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 ④ 갑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을에게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갑이 을과 합의하에 토요일에 1시간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EBS 교재 연계 사례

학습 요소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국제법의 법원(法源)
- 국제 문제 해결 방법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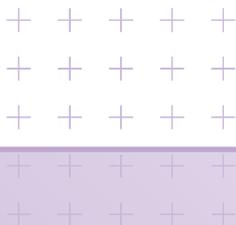
①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탐구할 수 있다. 또한 안보, 경제, 환경 등 국제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들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할 수 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항 18번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의 구성
 -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15인의 재판관은 B 및 C에서 선출되며 양 기관 모두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어야 함.
- B의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 및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됨.
 - 임기가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지리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C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함.

- ① A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② B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 ③ C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 ④ B와 달리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C와 달리 B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73쪽 3번

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중 하나임.)

- ‘의사 결정 시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 ① A에서는 의결권이 국제 연합 회원국에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 ② B는 국가 간 분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을 갖는다.
- ③ A는 B와 달리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한다.
- ④ C는 B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⑤ C는 A와 B에서 선출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은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73쪽 3번 문항의 내용 요소와 선택지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의 특징을 묻고 있다. 수능특강 문항에서는 질문을 통해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을 구분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6월 모의평가 문항에서는 수능특강의 자료 및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으로 제시문 및 선택지를 구성하여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해 묻는 문항은 EBS 연계 교재 문항의 형식과 내용을 연계하기가 쉽다. 따라서 EBS 연계 교재의 다양한 문항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EBS 연계 교재의 선택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문항뿐 아니라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항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제시문 및 선택지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주권 국가

대내적으로는 절대적 권위와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인정 받는 국가를 의미한다.

베스트팔렌 조약

종교 개혁을 둘러싼 구교와 신교 간의 30년 전쟁(1618~1648년)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주권 국가 체제가 일반화되었다.

1. 국제 관계

(1) **국제 관계의 의미:**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관계들의 총체

(2) **국제 관계의 특징**

- ① 원칙적으로 독립된 주권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함.
- ②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음.
- ③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함.

(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구분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사상적 배경	홉스의 입장(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국제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임.)	로크의 입장(인간과 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보편적 규범이 준수될 수 있음.)
평화 보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의 우위 확보 • 국력 증강,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국제기구의 중요성 강조 •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함. •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함.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간과함.

개념 플러스 세력 균형과 집단 안보

세력 균형은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집단 안보는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체제 내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전략으로 잠재적 침략자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 체계이다.

개념 체크

- 1 국제 사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 존재하지 않는다.
- 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 관점은 평화 보장 방안으로 국력 증강, 동맹 등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을 강조한다.
- 3 () 체결로 유럽 사회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정답

- 1 중앙 정부
- 2 현실주의적
- 3 베스트팔렌 조약

2. 국제 관계의 변천 과정

(1) **베스트팔렌 조약(1648년) 체결**

- ① 교황과 황제로부터 독립된 주권 국가 등장
- ②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

(2) **제국주의 시대**

- ① 산업 혁명 이후 유럽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 건설
- ② 유럽 중심의 국제 사회가 전 세계로 확대

(3) **제1, 2차 세계 대전과 평화 유지 노력**

- ① 제국주의 국가 간 충돌에 의한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 국가 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연맹(1920년) 설립
- ② 독일, 일본 등 전제주의 국가에 의한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여 강대국이 참여한 국제 연합(1945년) 설립

(4) 냉전 체제와 탈냉전 시대

- 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 양극 체제의 성립, 냉전 체제의 형성
- ② 제3 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공산주의 진영 내부의 다원화 → 다극 체제로의 전환, 냉전 체제의 완화
- ③ 몰타 선언과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 → 냉전 체제의 종식, 탈냉전 시대 개막

자료 플러스 몰타 미·소 정상 회담

1989년 12월 2일과 3일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동유럽의 시장 경제 체제 도입에 대한 소련의 불간섭, 전략 핵무기와 화학 무기를 포함한 군비 축소,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냉전의 종식'이 선언되었고, 이후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3. 세계화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1) 세계화의 의미: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2) 국제 관계의 변화

- ①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 약화에 따른 국가 간 협력 증가 및 갈등 심화
- ② 국가 이외에 다양한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 증가
- ③ 국제법과 같은 국제 규범의 역할 증가

개념 플러스 국제 사회 행위 주체

- 주권 국가: 국제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
- 비국가 행위자: 주권 국가 이외의 모든 차원의 행위자를 포함.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국제 연합, 세계 무역 기구 등), 개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등), 여러 나라에 걸쳐 공장과 회사를 두고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 한 국가의 일부이지만 독자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지방 자치 단체, 소수 민족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개인 등

4. 국제법의 의미와 법원(法源)

(1) 국제법의 의미: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

(2) 국제법의 법원(法源)

- ① 조약
 - 의미: 국가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
 - 우리나라의 경우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 종류
 - 양자 조약(당사자가 둘인 경우)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중 어업 협정 등
 - 다자 조약(당사자가 셋 이상인 경우) 예)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 ② 국제 관습법
 - 의미: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승인된 국제법
 -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발생(포괄적 구속력)
 - 사례: 국내 문제 불간섭 등

냉전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제3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된 가운데, 어느 쪽의 노선도 따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비동맹 외교 노선을 추구한 나라들을 의미한다.

비준

조약 체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전권 위원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개념 체크

- 1 ()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 2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을 ()이라 한다.
- 3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조약은 ()나 국제기구를 당사자로 하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이다.

정답

- 1 냉전 체제
- 2 국제법
- 3 국가

④ 구속력

어떤 행위를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힘으로, 법률·규칙·조약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④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국제적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개념 체크

- 1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 ()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 2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의 사례이다.
- 3 ()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동의해야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다.

정답

- ① 문명국
- ② 법의 일반 원칙
- ③ 국제 사법 재판소

③ 법의 일반 원칙

- 의미: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 명확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유용한 분쟁 해결의 규범임.
-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등

④ 기타: 판례나 학설 등도 보조적으로 국제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개념 플러스 국제법의 법원(法源)

국제법은 국내법에서의 국회와 같은 입법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국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널리 수락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이 곧 국제법의 법원(法源)이다. 오늘날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 사법 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 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 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라. 법칙 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법 판결 및 제국(諸國)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5.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

(1) 국제법의 의의

- ①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이 됨.
- ②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③ 분쟁 해결 수단 제공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함.

(2) 국제법의 한계

- ①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제 사회 전반에 적용할 법 규범의 제정이 어려움.
- ② 제정된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따름.
- ③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이 동의해야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은 재판 규범으로서 한계가 있음.

자료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조항은 조약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헌법은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 조약은 대통령의 체결 및 비준과 필요시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국내법으로 수용되고,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된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강화, 국제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 과거 국내법 영역에 대한 국제법의 지속적 침투, 국제기구의 발달과 권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법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영역 구별은 날로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Theme 1 세력 균형의 실제

세력 균형이란 어떤 한 국가나 국가들의 집합이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폭력의 위협이나 혹은 행사로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응 세력을 통해 이를 억지(抑止)하는 체제이다. 즉 세력 균형이란 특정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어떠한 국가도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책으로서의 세력 균형은 그런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평화 보장의 방법이다.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은 국가의 힘을 극대화하여 적이 자신을 공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세력 균형이 실제로는 안정을 보장하기보다는 군비 경쟁을 야기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들은 세력의 균형보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의 우위를 추구하며, 이는 다시 상대방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힘의 확대를 불러와 결국 군비 경쟁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Theme 2 법의 일반 원칙

법 체제 속에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판결하는 데 적용시킬 정확한 법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법보다 체계적 발달이 미흡한 국제법 질서에서 더욱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임무로 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규정 제38조 제1항 다호에 재판의 준칙의 하나로 법의 일반 원칙이 삽입된 이유이다.

법의 일반 원칙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이외에도 법의 일반 원칙이 국제법상의 독자적 법원(法源)을 구성하는가에 대하여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반적인 통설은 법의 일반 원칙을 국제법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며, 그 내용은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법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국제법 질서에서 법의 일반 원칙의 적용 문제가 대두된 출발점 자체가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에 의한 법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법 원칙을 추출해서 적용해 온 국제 중재 재판의 전통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법의 일반 원칙이 법원(法源)이 된다는 의미는 각국 국내법의 공통된 내용을 국제 재판에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국내법, 특히 사법상의 일반 원칙이 표상하는 법적 논리를 국제 관계에 맞게 변용시켜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국제 재판소가 법의 일반 원칙을 창설할 권한은 없다. 재판소는 법의 일반 원칙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 국제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의 예로는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다양하다.

법의 일반 원칙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습법과의 차이가 불분명하며 국제 재판에서 자주 인용되지 못해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활용되는 경우에도 법의 일반 원칙만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기보다는 이미 다른 근거를 통해 확인된 결론을 보완하는 논거로 제시된 경우가 더 많았다.

[23020-0201]

01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관계는 윤리와 도덕 규범에 따라 상호 의존하고 공존하는 관계라고 본다. 국제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조화가 가능하며, 국제기구, 국제법을 통해 국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② 국제 관계에서 국가를 유일한 행위 주체로 본다.
- ③ 국제 관계에서 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④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국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세력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23020-0202]

02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은 지난달 A국의 B국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제 연합(UN) 총회 투표에서 기권했다. ○○국이 A국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 못하는 건 지정학적 이유로 인한 안보 우려 때문이다. ○○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한 나라의 편도 들 수 없을 것이라 는 의견이 많다.

- 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 ② 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 ③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
- ④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
- ⑤ 이념 간 갈등보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3020-0203]

03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국제 관습법, 조약 중 하나임.)

-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까?’라는 질문에 A는 B와 달리 ‘예’라고 답한다.
- ‘국제 사회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입니까?’라는 질문에 A와 B 모두 ㉠이라고 답한다.

보기

- ㉠. A의 사례로 국내 문제 불간섭이 있다.
- ㉡. B는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성립한다.
- ㉢. A, B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 ㉠에는 ‘예’가 들어간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3020-0204]

0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은 국제 사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을 의미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A국이 최근 B국의 병원과 유치원, 학교, 민간인 거주지 등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다. A국에 전쟁 범죄 외에도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도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국제 사회에서 A국의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 ① ㉠을 제정하는 고유한 입법 기구가 존재한다.
- ② ㉠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
- ③ 국제 사회에서 ㉠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④ 국내에서 국내법보다 ㉠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 ⑤ ㉠의 법원(法源)으로 조약, 국제 관습법, 헌법이 있다.

[23020-0205]

1 다음 글에 부각된 국제 관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 연합 환경 총회(UNEA)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 세계가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해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환경 단체들은 우리나라 산업계도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 관리 국제 협약 비준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① 국제법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 ② 국가 간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 ③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에 의해 국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 ④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한다.
- ⑤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 사회의 협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3020-0206]

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국가들은 국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행동한다. 국제 체제에서 국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스스로 자기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므로 국제 관계에서 국가들 간의 대립과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국가 간 평화는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보기]

ㄱ. (가)는 국제 사회의 문제 해결에 있어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ㄴ. (나)는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ㄷ. (가)는 (나)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ㄹ. (나)는 (가)와 달리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20-0207]

3 다음 자료는 학생이 작성한 국제법 법원(法源)에 관한 수행 평가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임.)

수행 평가

국제법 법원(法源) A, B, C의 특징을 각각 3가지씩 서술하시오. (옳은 서술 하나당 1점씩이며, 총 9점임.)

국제법 법원(法源)	특징	점수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 우리나라에서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 <input type="text"/> (가) 	2점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 <input type="text"/> (나) 	1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이 있다. •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야만 성립된다. •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유형이다. 	2점

- ① A는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② B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 ③ C는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 ④ (가)에 '우리나라에서 주요 A에 대한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가 들어갈 수 없다.

[23020-0208]

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관계 국제 협약은 국제 연합(UN)과 국제 노동 기구(ILO) 등 국제기구가 총회의 의결로 채택한 국제 협약 중 취업과 근로 조건, 근로 감독 등에 관해 규정한 국제 노동 기준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노동관계 국제 협약으로는 국제 연합(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그 선택 의정서가 있고, 국제 노동 기구(ILO)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 ① ㉠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② ㉠은 국내법과 달리 위반 시 강제력을 행사할 집행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우리나라에서 ㉡은 사법부의 권한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을 해야 한다.
- ⑤ 우리나라에서 ㉡을 거친 ㉠은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020-0209]

5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유럽 역사상 최초의 다자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평화 조약이다.
 (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 대립으로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다원화에 따라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라)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몰타에서 만나 냉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 보기 |

- ㄱ. (가)로 인해 유럽 사회에서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ㄴ. (나)는 제3 세계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ㄷ. (다)로 인해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ㄹ. (라) 시기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가 강조되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20-0210]

6 다음 자료는 수행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수행 평가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 서술하시오. (옳은 서술 하나당 2점씩이며, 총 6점임.)	
답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 • 당사자 간의 명시적 수용 절차를 거쳐야 성립된다. • (가) 	
채점 결과	4점

- ① A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비준권을 행사한다.
 ② A는 일반적인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된다.
 ③ B의 체결 주체는 국가로 한정된다.
 ④ B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⑤ (가)에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 테러(terror)

특정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해당되며, 실질 사항 결정 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안전 보장 이사회 의사 결정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개념 체크

- 1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라고 한다.
- 2 국제 문제의 해결 방법 중 ()은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 3 국제 연합에서 총회 의결은 ()을 가지며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한다.

정답

- 1 국제 문제
- 2 외교적 해결
- 3 권고적 효력

1. 국제 문제

(1) 의미와 특징

- ① 의미: 여러 국가나 국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 ② 특징: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움.

(2) 종류

- ① 안보 문제: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차이나 영토, 자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전쟁 발생, 테러 조직의 활동 등
- ② 경제 문제: 남북문제, 빈곤 문제 등
- ③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국제 하천 오염, 산성비, 삼림 파괴, 사막화 현상 등
- ④ 인권 문제: 여성 및 아동 학대, 난민 등

(3) 해결 방법

외교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분쟁 당사국끼리 자율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 • 한계: 종교 간 갈등 등 참여한 대립 상황에서는 해결이 어려움.
사법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 • 한계: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강제하기 어려움.

개념 플러스 외교

외교는 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평화적이며 매우 격식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교는 공식적인 국가 대표인 외교 사절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외교 관계 이외에도 국가들 간에는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실질적인 외교가 이루어진다. 현대의 외교는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스포츠 스타, NGO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수행된다.

2. 국제 연합(UN)

(1) 설립 목적 및 구성

- ① 설립 목적: 국제 평화 유지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 ② 구성: 6개 주요 기관(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경제 사회 이사회, 신 탁 통치 이사회, 사무국)과 각종 전문 기구 등

(2) 주요 기관

- ① 총회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로 표결
 - 총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함.
- ②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국제 연합의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
 - 의사 결정 시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의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부결됨.

③ 국제 사법 재판소

목적	국제법을 적용한 재판으로 국가 간 분쟁의 해결
구성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
특징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지며,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
한계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④ 기타 주요 기관: 사무국,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3) 한계

- ①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② 회원국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음.

자료 플러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의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으며, 현재 국제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법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강대국을 상대로 국제 분쟁을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약소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 이상의 공평한 무대를 찾기 어렵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사법 재판소에의 제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가 법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 관할권

재판에 있어서의 관할권은 정해진 바에 따라 어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을 의미한다.

☛ 북방 외교

197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대(對)공산권 외교 정책이다. 1988년 본격적으로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로 설정되었다. 그 후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 1991년 남북한의 국제 연합 동시 가입,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졌다.

3.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변화

- ①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 우방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치중
- ②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되면서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
- ③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공산권 국가와 수교
- ④ 1991년 국제 연합,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2)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와 국제 분쟁

- ① 남북 분단과 북한의 핵 개발로 긴장 상태 지속
- ②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동북 공정 사업 등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 존재
- ③ 세계화 속에서 각국과의 치열한 무역 경쟁 및 긴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 형성

(3)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위한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 ① 외교의 의미: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국제 관계를 형성·유지·관리하는 활동
- ② 외교의 방법: 주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설득, 타협, 군사적·정치적 위협 등이 나타나기도 함.
- ③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 다자간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구
 - 국제법을 외교적 해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 효과적으로 활용
 - 정부의 공식적 외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 활용

개념 체크

- ① ()는 국제 연합 총회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②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와 수교를 했다.
- ③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은 정부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외교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정답

- ① 국제 사법 재판소
- ② 공산권 국가
- ③ 공식적 외교

Theme 1 공공 외교

공공 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을 말한다.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국민(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공공 외교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므로 공공 외교는 주로 외국의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NGO, 대학, 언론 등도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 외교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에는 외교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과 단체, 기관도 공공 외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공공 외교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이지만, 공공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 NGO, 기업, 지방 자치 단체, 각급 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대 국가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때 비로소 공공 외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Theme 2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UN)의 사법 기관이다. 모든 국제 연합(UN)의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임기 9년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은 덕망이 높고 각국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법률가이어야 한다. 재판관단은 세계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안배된다. 이는 결국 대륙별 인원 할당으로 표현되며, 관행상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항상 자국 출신 재판관을 배출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국가만이 재판 사건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모든 국제 연합(UN)의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되어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획득한다. 국제기구나 개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 국제 연합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국제 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 기구도 언제든지 그 활동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함을 임무로 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법칙 발견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판례와 학설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사건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여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23020-0211]

01 다음 사례에 나타난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경부가 아시아 국제 물 주간에 참가해 물 문제 해결과 물 분야 탄소 중립 실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은 아시아 최대 물 협력 소통 협력체인 아시아 물 위원회가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물 관련 회의이다. 회의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물 문제에 매우 취약하며, 이번 아시아 국제 물 주간을 계기로 아시아의 물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밝혔다.

- ① 국제 문제 해결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
- ②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이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③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국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 ④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 ⑤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국제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23020-0212]

0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UN) 헌장

국제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 ① ㉠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만들어졌다.
- ② ㉠은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 ③ ㉠의 최고 의사 결정의 지위를 갖는 기관에서 ㉡에 관한 실질적 의사 결정을 한다.
- ④ 현대 사회에서 ㉢은 대부분 이념 갈등이 원인이다.
- ⑤ ㉢의 역할 수행을 통해 ㉠이 국제 사회에서 중앙 정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3020-0213]

03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제 문제 해결 방법	의미
(가)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국제법에 따라 해결
(나)	분쟁 당사자끼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제3자의 조정 등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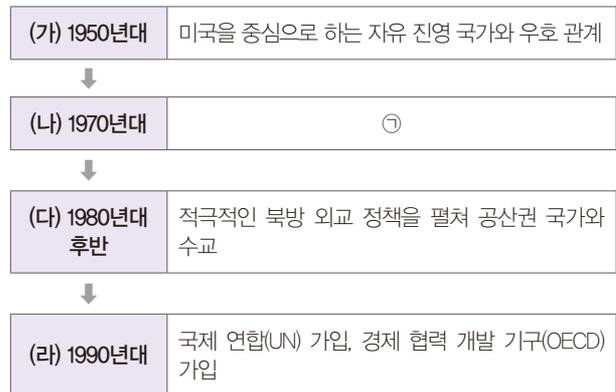
보기

- ㄱ. (가)는 재판 기간이 길고, 당사국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
- ㄴ. (나)는 종교 간 갈등 등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용이하다.
- ㄷ. (나)는 (가)와 달리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 활용이 불가능하다.
- ㄹ. (가), (나)는 모두 국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20-0214]

04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외교 정책의 특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시기의 국제 관계는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 ② (나) 시기 우리나라는 냉전 체제 형성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였다.
- ③ (가) 시기와 (나) 시기 사이에 몰타 선언이 이루어졌다.
- ④ (라) 시기 이후 국제 관계에서 민간 외교보다 공식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⑤ ㉠에 '공산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23020-0215]

1 밑줄 친 국제 문제 ㉠, ㉡의 공통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모잠비크에서 필리핀까지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보금자리,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 국가가 기후 변화 위기에 거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한편 100년 이상 배기가스 배출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부유한 선진국들은 그 부작용에는 훨씬 적은 피해를 입고 있다.
- 공기를 오염시키는 인간의 행위는 결국 ㉡대기 오염과 환경 파괴로 이어져 자신까지도 파멸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국제 보건 기구는 2030년과 2050년 사이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① 국가 간 이념과 체제 차이로 발생한다.
- ② 오염 물질의 발생 국가와 피해 국가가 일치한다.
- ③ 개별 주권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 ④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⑤ 발생 지역의 범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고, 그 범위가 지구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23020-0216]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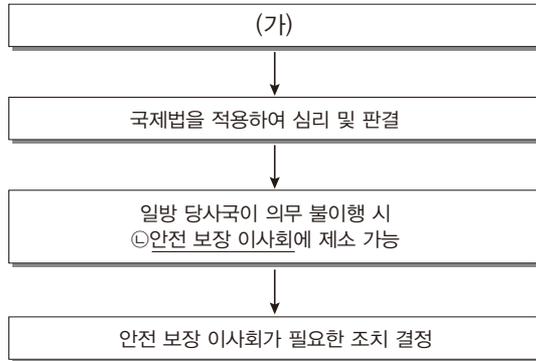
A국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B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적인 사법 기관에 특정 조치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A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인 해결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최대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 방류 계획만 발표된 상태라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패소했을 때 오히려 A국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① A국과 B국이 아닌 제3국의 ㉠으로 재판이 열릴 수 있다.
- ② B국이 ㉠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A국이 응해야만 재판이 진행된다.
- ③ ㉡에서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이 ㉠보다 갈등이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해결이 용이하다.
- ⑤ ㉡은 ㉠과 달리 국제법을 활용하여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3020-0217]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 간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국제 연합(UN)의 사법 기관 재판 절차〉



- ① ㉠은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 ②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 ㉠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의 상임 이사국은 매년 국제 연합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 ④ ㉡은 ㉠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⑤ (가)에 '양 당사국의 합의하에 분쟁 해결 요청'이 들어갈 수 없다.

[23020-0218]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2000년 00월 00일

국제 연합(UN), 국제 연맹처럼 운명 다했나

A국의 B국 침공으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제 평화를 지켜야 할 국제 연합(UN)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가 A국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1차 세계 대전을 교훈 삼아 만들어진 국제 연맹이 강대국들의 비협조와 무시 속에 '개점 휴업' 상태로 전락한 끝에 제2차 세계 대전 발발을 막지 못한 1930년대 역사를 떠올리며 '국제 연합도 이제 운명을 다했다.'는 비관론을 내놓았다. 1945년 국제 연합을 만들 당시 5대 강국이 일종의 '경찰 국가'가 되어 필요 시 무력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상임 이사국 지위를 부여한 것인데, 평화 유지에 앞장서야 할 상임 이사국이 분쟁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약소국을 침공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겠느냐는 것이다.

- ① ㉠은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 ② ㉠은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개입 수단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③ A국은 ㉠의 비상임 이사국이다.
- ④ A국은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가 2년인 ㉠의 이사국이다.
- ⑤ A국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0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A는 국제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상태로 본다. 이에 따르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므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불신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 간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B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국제 관계에서 협력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가들은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국제 사회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을 보편적 선이나 윤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B는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 협력 체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관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국제 협약과 국제 관습법을 통해 국가 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A, B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02 다음 자료는 서술형 평가 문항 및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국제 관습법 중 하나임.)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 A와 구별되는 B의 특징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각 서술별로 채점하며, 옳은 서술 1개 당 1점, 총 3점임.)

[답안] ○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권을 가진다.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
 ○ (가)

채점 결과	2점
-------	----

- ① A는 명시적 입법 절차를 거쳐 성문화된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 ② 국내 문제 불간섭은 A가 아닌 B에 해당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국가를 초월한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된다.
- ④ B와 달리 A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⑤ (가)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다.

0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모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2022학년도 수능]

국제 형사 재판소는 1998년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2002년 발효된 ①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인 A와는 구분된다. 국제 연합에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인 B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련 상황을 회부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C는 각국의 대규모 인권 침해 상황을 B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 ① ①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 간의 합의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 ② A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 ③ A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 ④ C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⑤ B는 C에서 선출되고 임기가 2년인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0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 A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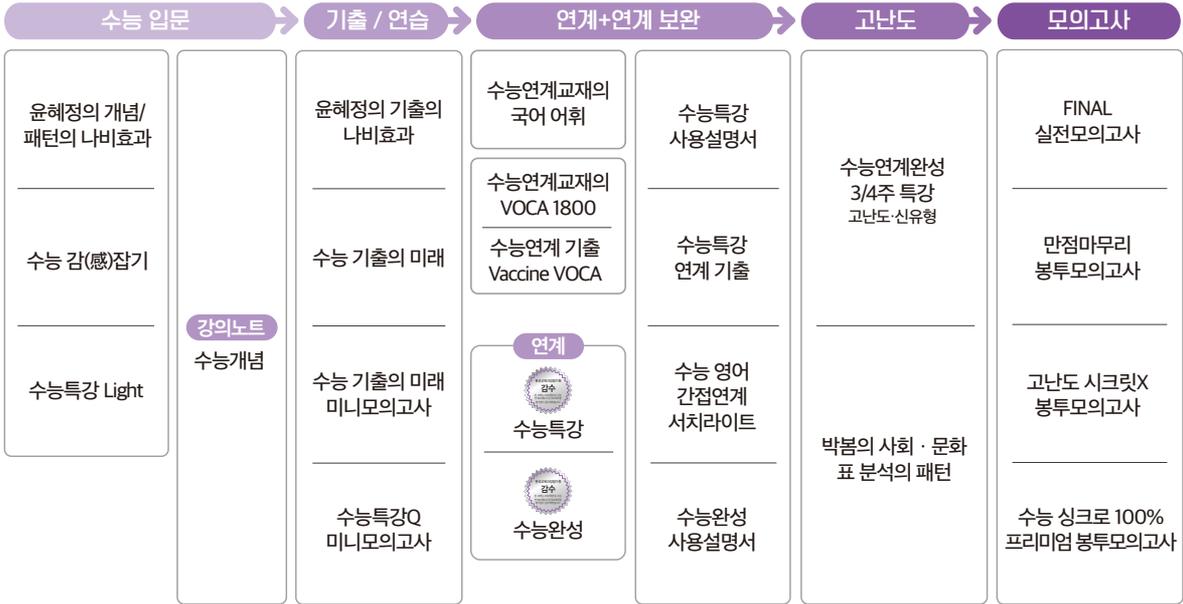
-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15인의 재판관은 B 및 C에서 선출되며 양 기관 모두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어야 함.

■ B의 구성

- 5개의 상임 이사국 및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됨.
- 임기가 2년인 비상임 이사국은 지리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C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함.

- ① A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 ② B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 ③ C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 ④ B와 달리 C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C와 달리 B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구분	시리즈명	특징	수준	영역
수능 입문	윤희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	국어
	수능 감(感)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	국/영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	전 영역
	윤희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없는 실전 훈련, 고품질 기출 미니모의고사	●	국/수/영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품격 미니모의고사	●	전 영역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	국/영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모아 구성한 간접연계 대비 교재	●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	영어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	영어	
고난도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	국/수/영/과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	사회탐구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	전 영역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최고난도 모의고사	●	국/수/영
	수능 싱크로 100% 프리미엄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만나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고품격 프리미엄 모의고사	●	국/수/영